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27-07  
2011 연구보고서 15-6

다민족·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패러다임 구축(V)

## 교육이주의 추이와 미래 정책과제

황정미 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

## 교육이주의 추이와 미래 정책과제

---

연구책임자 : **황 정 미**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

공동연구자 : **문 경 희** (창원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신 미 나**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본 보고서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주관하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1년도 협동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연구회 소속 연구기관과 외부 단체가 협동으로 수행한 연구과제 결과입니다.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다민족·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패러다임 구축(V)”

1. 협동연구총서 시리즈

협동연구총서 일련번호	연구보고서명	연구기관
11-27-01	다민족·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패러다임 구축(V): 다문화사회 정책의 성과와 미래 과제 (총괄보고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1-27-02	범부처 다문화사회 정책 예산 분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1-27-03	다문화사회 정책 거버넌스 현황과 미래지향적 발전방안	한국정책학회
11-27-04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관계 증진을 위한 정책지원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1-27-05	외국출생 동반입국 청소년을 위한 교육복지 정책방안	한국교육개발원
11-27-06	노동이주 추이와 사회통합정책의 과제	한국사회학회
11-27-07	교육이주의 추이와 미래 정책과제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 2. 참여연구진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진
주관 연구 기관	한국여성정책 연구원	<b>김이선</b>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b>민무숙</b>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b>홍기원</b> 숙명여자대학교 산업·정책대학원 조교수 <b>주유선</b>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원
	한국여성정책 연구원	<b>마경희</b>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b>정해숙</b>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b>김효선</b>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원 <b>이순미</b> 전북대학교 강사
협력 연구 기관	한국정책학회	<b>최무현</b> 상지대학교 부교수	<b>박흥순</b> 호남신학대학교 연구교수 <b>김경희</b>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전문연구원
	한국여성정책 연구원	<b>김이선</b>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b>민무숙</b>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b>김경미</b>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전문연구원 <b>주유선</b>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원
	한국교육 개발원	<b>류방란</b>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b>오성배</b> 동아대학교 조교수 <b>박균열</b> 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
	한국사회학회	<b>김석호</b> 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 조교수	<b>정기선</b> IOM 이민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b>이정은</b> 성공회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전임연구원 <b>여정희</b> University of South Dakota 조교수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b>황정미</b>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조교수	<b>문경희</b> 창원대학교 국제관계학과 조교수 <b>신미나</b>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

## I. 서장

- 2011년 9월말을 기준으로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인 140만 명을 넘어섰고, 이주민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늘어남에 따라 이주민의 내적 구성도 더욱 다양해지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가장 주목할 만한 집단은 외국인 유학생임.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국내 외국인 유학생은 2003년 12,314명, 2006년 32,557명, 2007년 49,270명, 2010년에는 83,842명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 이 연구는 한국 내 외국인 유학생 증가 현상을 이주민 내부의 다양성 확대하는 요인, 더 나아가 중장기적으로 새로운 이주민 정책 및 다문화정책의 수요를 촉발하는 요인으로써 주목함. 대학의 국제화, 유학생 유치, 유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등 단기적인 과제의 차원을 넘어서서, 교육이주의 증가를 전체적인 이주의 증가 및 다문화 정책의 확대라는 보다 광범위한 지평에서 분석하고, 교육이주가 한국 사회에 미칠 파급효과 및 중장기적 정책 과제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이 필요한 시점임.
- 교육이주의 방향과 미래 정책과제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논의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한국의 유학생 추이와 더불어 일본과 호주의 정책 사례를 분석하고자 함. 일본과 호주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대표적인 유학생 목적국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나, 이민정책의 역사나 사회문화적 배경에서는 큰 차이가 있음. 본 연구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의 상이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두 사례의 정책 전개과정을 고찰함으로써 한국의 교육이주와 관련된 중장기적 정책 시사점을 얻고자 함.
- 주요 연구 내용은 첫째, 유학생의 국제적 이동, 교육 이주 관련 이론적 논의를 고찰하고 최근의 동향을 분석함. 특히 2000년대 이후 아시아 태평양 지역 학생들의 역내(域內) 유학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주목할 만한 요인임. 둘째, 한국의 유학생 증가추이와 더불어 일본, 호주의 유학생 추이 및 관련 정부 정책의 형성과정과 그 사회적 배경을 고찰함. 셋째, 각 사례 국가에서

현재 가장 첨예하게 부각되는 유학생 정책의 쟁점을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사회의 중장기 정책 과제를 제언함.

-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연구, 현지조사(일본), 전문가 인터뷰(한국, 일본) 등을 실시하였음.

## II. 한국 내 교육이주 추이 및 정책 현황

- 한국으로 유입하는 유학생의 규모는 2000년 이후 급속하게 증가하였음. 2010년 6월을 기준으로 국내 등록외국인 중 유학생이 차지하는 비중은 방문취업, 비전문 취업, 거주에 이어 네 번째인 7.4%이며, 유학생의 수는 전년 보다 14.4% 증가함. 유학 형태별로 보면 유학생 중 85.6%가 자비 유학생이며, 출신지역별로는 아시아 지역 출신이 85.7%로 절대 다수를 차지함. 전공별로는 인문 사회분야 전공자가 70% 정도를 차지하며, 출신국가별로는 중국 출신이 68.9% 임. 유학생의 출신국가별 전공분야별 다양성이 나타나지 않고 한 쪽에 치우쳐 있음.
- 한국 정부는 2001년 <외국인 유학생 유치확대 종합방안>에 이어, 본격적인 유학생 유치 및 지원정책으로 2004년 <Study Korea 프로젝트>, 2008년 <Study Korea 프로젝트 발전방안> 등을 발표하였음. 한국의 유학생 정책은 교육수지의 적자 개선, 대학의 경쟁력 강화, 그리고 글로벌 인재유치 등의 방향으로 추진되어 왔음. 실질적인 정책의 핵심은 유학생 유치의 양적 증대를 위한 홍보 강화와 대학의 외국어 강좌 및 한국어 연수 프로그램 확대, 유학생의 입국 편의 증진을 위한 출입국 관리정책의 개선임.
- 중장기적 시각에서는 유학 이후의 진로 및 한국 내 취업 전망, 국내 기업의 유학과 외국인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 유학생 귀국 후 본국-한국과의 관계에 대한 파급효과나 국가 이미지 제고 등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최근 들어 유학생의 졸업 후 취업을 지원하는 정책 방안들이 마련되고 있으나 통상적인 직업 박람회나 홍보행사의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외국인 유학생의 사회통합 문제, 즉 인권이나 안전, 지역사회에서 내국인과의 교류 및 공존에 대해서는 정책적 관심이 거의 나타나지 않음. 외국인정책의 체계 안에서도 유학생에 대한 관심은 글로벌 인재 유치, 유학생 취업 박람회, 유학생 이탈이나 불법 체류를 막기 위한 관리 정책 등에 국한되며, 이주민의 안전이나 인권 문제, 문화다양성이나 다문화적 통합과 관련된 정책에서는 유학생 문제가 전혀 거론되지 않음. 유학생은 단기간 머무르다 본국으로 돌아갈 학생이므로 사회통합의 대상으로 간주되지 않고 있지만, 그러나 유학은 곧 장기 체류 및 영구 이주로 전환되는 하나의 단계가 될 수 있음. 고등교육의 글로벌화 추세로 인해 유학에서 취업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이주 통로가 확대될 가능성도 높아짐.
- 교육이주에 관한 분석 및 정책 논의가 좀 더 확대되기 위해서는 유학생의 증가가 이후 초래할 다각적인 사회적 파급효과, 그리고 교육정책에 국한되지 않는 관련 정책(노동, 산업, 인적자원 양성, 이민, 사회통합, 지역사회 개발 등)과의 연관성 및 연쇄효과 등이 다각적으로 검토되어야 함. 또한 글로벌 시대의 청년문화, 국경을 넘는 문화 교류와 문화적 혼종성이 함축하는 다문화 정책에의 영향, 외국인 유학생의 존재가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 등을 폭넓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 III. 일본의 교육이주 추이와 정책 동향

- 2009년 고등교육기관 재학생 중 유학생 비율을 살펴보면 일본은 3.8%로 다른 선진국(호주 33.4%, 영국 27.0%, 프랑스 12.0%, 미국 6.1%)에 비해 적은 편이지만 국비유학생 수(10,168명)는 프랑스에 이어 2위 수준임. 아시아의 대표적인 유학 목적국인 일본의 외국인 유학생은 2010년 현재 141,774명이며, 출신국가별로는 중국(60.8%), 한국(14.2%), 대만(3.7%) 등이 다수를 차지함. 교육단계별로는 학부생이 48.5%, 대학원이 26.7%, 전수학교가 21.0%이며, 전공별로는 사회과학(38.6%)과 인문학(23.7%)이 공학(15.9%) 및 자연과학(3.6%)보다 다수를 차지함.
- 1983년 나카소네 일본 총리가 <유학생 10만인 계획> 계획을 발표하면서 일



본의 적극적인 유학생 정책이 부각되기 시작함. 10만인 계획의 이념은 한마디로 ‘원조 모델(aid approach)’, 즉 개발도상국 출신의 유학생 양성을 통한 국제협력 증진에 있음. 2006년 아베 총리가 발표한 ‘아시아 게이트웨이 구상’은 글로벌화에 대응하는 일본의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데, 중요 항목으로 ‘아시아 고도인재 네트워크의 허브를 목표로 한 유학생 정책의 재구축’, ‘세계에 열린 대학 만들기’, ‘국제인재 유치·육성전략’ 등이 강조되었음.

- 2008년 도입된 <유학생 30만인 계획>은 급속하게 진행되는 글로벌라이제이션에 대한 대응, 그리고 ‘소자고령화’로 표현되는 인구구조 변화를 배경으로 함. 젊은 노동인력이 감소하고 있는 일본 사회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고자하는 목적을 분명히 하였음. 또한 청소년 인구의 감소로 대학의 학생 모집이 어려워진 점도 각 대학이 유학생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음. 30만인 계획은 적극적인 일본 유학 홍보와 해외 사무소 설치, 출입국 절차의 간소화, 영어전용 강의 확대 등 대학의 글로벌화 추진, 졸업 후 유학생의 취업 지원 등 사후관리 강화 등을 골자로 함.
- 일본의 유학생 정책에서 최근 제기되는 쟁점은 첫째, 자기문화 중심성이 강한 일본사회 전반, 특히 일본의 대학들이 글로벌화를 어느 정도,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가의 문제임. 일본에서 대학의 글로벌화를 선도하고 있는 것은 전통적 명문대학이 아닌 일부 사립대학들이며, 정부의 예산 감축으로 원래 계획했던 30개 거점대학이 13개로 축소되는 현상이 관찰됨. 둘째, 유학생 정책에서 ‘그랜드 디자인’의 중요성, 민-관-산-학을 연계하는 협력관계의 중요성이 부각됨. 예를 들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대학-기업 간 협력, 간병인력 등 필요한 인력을 원활하게 수용할 수 있는 자격기준의 표준화 등에서 통합적인 정책 설계의 필요성이 드러나고 있음. 셋째, 유학생의 일본사회 수용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음. 유학생의 취업지원,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유학생의 역할, 그리고 다문화 공생정책의 확산 등을 배경으로 하여 특히 일부 지역에서 지역주민과 유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교류사업, 문화행사, 홈스테이,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이 실행되고 있음. 또한 최근에는 일본 대지진 이후 일본 유학을 기피하는 경향을 우려하고,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방재 시스템 점검, 유학생의 위험관리(risk

management) 매뉴얼 마련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IV. 호주의 유학생 추이 및 정책 동향

- 호주는 전 세계 국제 유학생 시장을 10% 이상을 점유하는 대규모 유학생 유치 국가임. 2010년 현재 공식적인 국제 유학생의 수는 619,119명으로 호주 전체 인구의 약 3%에 이룸. 국제 유학생의 국적은 중국이 27.1%로 가장 많고 인도(16.1%), 한국(5.5%)이 그 다음을 차지함. 그 외 국가 중 사우디아라비아, 프랑스, 필리핀 출신의 유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교육과정별로는 고등교육기관(대학·대학원, 39.3%), 직업훈련기관(33.4%)에 학생들이 많이 분포함.
- 호주정부는 1950년 ‘콜롬보 플랜(Colombo Plan)’을 도입하여 아시아 지역 인재들에게 호주 유학기회를 부여하였음. 1980년대 중반으로 접어들며 호주정부는 정부 제공 해외유학생 재정 지원을 전면 중단했으며, 유학생 교육을 일명 교육 수출산업으로 전환하기 시작하였음. 이러한 교육 수출산업정책은 1996년부터 2007년까지 집권한 하워드 보수연합 정부에 의해 더욱 강화되었고, 다양한 민-관 파트너십에 기반을 둔 교육산업 지원정책과 법제도가 도입되었음. 아울러 해외유학생 유치를 기술이민 프로그램과 직접 연계하는 이민정책을 고안하였음. 하워드 보수연합 정부의 교육 수출산업 지원 정책은 인구학적, 경제적 두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음. 호주에서는 최근 젊은 노동인구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정부는 해외유학생의 기술이민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기술노동력 부족과 고령화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였음. 또한 정부예산 삭감으로 인한 교육기관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외유학생 산업을 통해 극복한다는 전략 하에 정부산하 기관 뿐 아니라 교육기관, 민간 기업 등과의 협력체계를 만들어 해외유학생 유치에 주력하였음.
- 2008년에 집권한 노동당 정부는 하워드 정부의 기술이민정책이 호주 노동시장의 왜곡을 초래하였다고 비판하였음. 2010년부터 유학생 수가 다소 감소 추세로 돌아섰는데, 유학생에 대한 재정적 의존도가 높은 호주대학 및 여타 교육기관, 또한 유학생 집중 거주 지역공동체 및 관련 직종 종사자들

에게 불안 요인으로 부상하였음. 노동당정부는 과거 정부처럼 기술이민 정책을 활용한 유학생 증가보다는 국제교육산업의 질 개선 및 유학생의 생활 여건 개선을 통해 그들의 안전, 안보, 안녕, 지역사회 참여 등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전개하고 있음.

- 최근 호주에서는 유학생의 사회 통합이 중요한 현안으로 부상하였음. 2009년 멜번과 시드니에서 발생한 인도 유학생에 대한 폭행 사건을 비롯하여 유색인 유학생에 대한 인종차별적 폭력, 부실 사립교육기관의 폐교, 고환율, 고물가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저임금 노동시장에서의 임금착취 등이 문제로 대두함. 호주의 다문화주의 전통이 문화 관계적 측면 뿐 아니라 사회정의적인 측면 또한 강조한다는 점에서 유학생의 인권 보호에 대한 정부의 관심 부족은 지난 십 여 년 동안 보수연합 및 노동당 정부 모두가 다문화 정책을 사실상 방기하고 있는 현실의 연속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음. 그러나 현재 호주에서 유학생들이 내국인과 동등한 납세의 의무를 지며 거주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들의 인권 논의는 향후 이민자의 시민권 및 거주권 논의와 연계되어 지속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 V. 결론

- 본 연구에서 고찰한 일본과 호주의 유학생 관련 정책의 전개 과정에서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남. 첫째, 유학생 정책의 출발 단계에서는 ‘상호이해 접근’, 즉 국제협력의 증진을 강조하고 있음. 둘째, 유학생의 양적 규모가 급격히 늘어나는 시기는 교육산업의 발전을 위해, 곧 ‘수익창출’을 위해 유학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시기임. 셋째, 유학생 규모의 일정한 증가는 ‘기술이민 접근’을 수반하게 됨. 호주는 보다 적극적으로 유학생 유치와 기술이민 정책을 연계하여 실시하였으며, 일본은 이보다 규모나 속도 면에서 일정한 차이가 있지만 유학생의 일본 내 취업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정책이 2008년 이후 본격화되고 있음. 넷째, 유학생이 졸업 후 계속 체류하면서 이민자로 정착하는 경향이 늘어나면, 좁은 의미의 유학생 정책의 범위를 넘어서는 더 큰 사회적 이슈들, 특히 다문화 정책 및 소수자 권리 문제가 등장함. 최근 호주에서 유학생에 대한 인종차별 문제나 사회권 보장이 현안으로

대두하였음. 물론 본 연구의 고찰에서 정확한 단계 구분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이러한 흐름에서 한국의 중장기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음.

- 한국의 추후 정책 방향에서는 유학생 정책의 외연 확대와 거버넌스 체계구축, 유학생의 다변화에 따른 지역사회 다문화 수용성의 과제, 유학생의 권리 보장과 안전 문제, 그리고 유학생을 매개로 하는 아시아 역내 협력관계의 증진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의 분석에 기초한 정책 제언을 정리하면, 첫째, 유학생의 다변화에 대응하는 ‘지역거점’ 사업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중앙 정부 차원의 유학생 정책도 중요하지만, 보다 현실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지원 사업(종합 기숙사 건설, 캠퍼스 타운 또는 다문화 거리 조성 등)과 외국인을 위한 편의시설 제공, 지역 다문화 교육에의 유학생 참여 등), 그리고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한 지역거점 사업(지역 중소기업의 수요에 맞는 지역단위의 취업박람회)을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둘째, 유학생이 증가함에 따라 보다 체계화 표준화된 교육 서비스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호주의 해외 유학생을 위한 교육법 서비스(ESOS)를 참조하여 교육기관 및 유학 관련 제도에 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유학생으로서의 권리를 일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체계를 중장기적으로 마련하고, 관련된 법적 제도적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셋째, 교육-이주-노동시장-국제협력을 연계하는 혁신적인 정책 디자인이 필요함. 유학생의 졸업 후 한국 취업에 대한 지원 뿐 아니라, 개발도상국 인력양성에 필요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한국의 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방안, 개발원조(ODA)와 연계되는 교육기회 제공, 외국인 유학생에게 취업 비자 및 영주권 취득 기회를 확대하는 이민정책(포인트제도 등) 등을 폭넓게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아울러 현재 외국인정책의 틀 안에서 제공되는 기초적인 서비스(인권침해나 위기에 처한 이주민을 위한 긴급지원, 폭력 피해자 센터, hot-line 서비스)에 외국인 유학생들도 접근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바람직함. 또한 아시아 역내 유학의 흐름과 유학생 정책, ‘CAMPUS Asia’와 같은 새로운 지역협력 모델에 대한 학술적인 연구의 축적도 중요한 과제임.

# **목 차**

<b>I. 서 장</b>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
2. 연구 방법 .....	8
1) 문헌 연구 .....	8
2) 현지 조사 및 전문가 인터뷰 .....	9
3.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	10
1) 배경: 교육의 글로벌화, 국제유학생과 교육이주 .....	10
2) 교육이주에 대한 이론적 접근 : 기존 연구 검토 .....	15
 <b>II. 한국 내 교육이주 추이 및 정책 현황</b> .....	21
1. 한국 내 유학생 현황 .....	23
2. 국내 유학생 관련 연구 동향 .....	27
3. 유학생 관련 정책의 현황 .....	29
1) Study Korea 프로젝트 (2005) .....	30
2) Study Korea 프로젝트 발전방안 (2008) .....	34
3) 캠퍼스 아시아 (2009): 아시아 대학생 교류 및 대학 간 협력활성화 정책 .....	37
4) 외국인정책기본계획과 유학생 정책 .....	37
4. 소결 .....	39
 <b>III. 일본의 교육이주 추이와 정책 동향</b> .....	41
1. 도입 .....	43
1) 배경 .....	43
2) 선행 연구 검토 .....	43

2. 일본의 교육이주 추이 .....	48
3. 일본의 유학생 지원 정책 : 배경 및 형성과정 .....	54
1) 유학생 10만인 계획 : 국제공헌과 개발원조 .....	54
2) 아시아 게이트웨이 구상 .....	56
3) 유학생 30만인 계획 : 일본 사회의 글로벌화 전략 .....	58
4. 일본의 유학생 정책의 특징 및 주요 쟁점 .....	61
1) 대학 글로벌화의 추진 .....	61
2) 유학생의 일본 내 취업 지원 .....	63
3) 유학생의 일본사회 수용에 대한 관심 증대 .....	65
5. 소결 : 한국에의 시사점 .....	69
1) 유학생 정책에서 ‘그랜드 디자인’의 중요성 .....	70
2) 인재육성 및 확보와 연관성 있는 유학생 정책의 필요성 .....	70
3) 대학교육의 질 보증의 필요성 .....	72
4) 유학생 정책과 다문화 공생정책의 연관성 .....	72
5) 전담 조직 간의 협력체계 구축 .....	73
6) 교육이주에 대한 학계 연구의 심화 및 지원 필요성 .....	73
 <b>IV. 호주의 유학생 추이 및 정책 동향</b> .....	<b>75</b>
1. 도입 .....	77
2. 교육 이주의 현황 .....	79
3. 호주 교육산업 성장 배경 및 지원 정책(1950~2007) .....	84
1) 호주의 수출 교육산업 지원 기관 .....	86
2) 법·제도적 지원 .....	88
3) 하워드 보수연합정부의 교육 수출산업 지원정책(1996~2007) .....	90
4. 호주 교육이주 정책의 쟁점: 안전, 인권 의제 제기 .....	94
5. 변화를 위한 노동당정부의 정책적 대응 .....	100
1) 이민정책 .....	100

2) 해외유학생 교육 분야의 질과 권위 회복을 위한 정책:	
안보·안전, 인권 및 지역공동체 참여 .....	103
6. 소결 : 한국에의 시사점 .....	110
<b>V. 결 론</b> .....	113
1. 연구 요약 및 사례연구의 시사점 .....	115
1) 유학생 정책의 전개 과정 : 일본, 호주의 사례 .....	115
2) 한국에 대한 시사점 .....	119
2. 정책 제언 .....	123
1) 유학생 다변화에 대응하는 ‘지역거점 사업’의 선정 및 지원 .....	123
2) 유학생을 위한 교육서비스의 법제화 .....	124
3) 교육-이주-노동시장-국제협력을 연계하는 정책 디자인의 필요성 .....	125
4) 유학생 정책 및 아시아 유학생 흐름에 대한 연구 확대 .....	127
5) 이주민 정책과 유학생 정책의 연계 및 서비스 제공 .....	127
<b>■ 참고문헌</b> .....	129
<b>■ 부    록(일본 사례조사 자료)</b> .....	137
부록 1. 「유학생 30만인계획」 골자 .....	139
부록 2. 「글로벌 30」 거점 대학 사례 조사 : 동경 소재 조치(上智) 대학 .....	143
부록 3. 「신성장전략」에 있어서 기술 .....	148
부록 4. 2010년도 유학생 교류 관련 예산 개요 .....	150
부록 5. 유학생 관련 단체 .....	151
<b>■ Abstract</b> .....	153

## 표 차 례

<표 I -1> 유학생 출신지 별 목적지 비율과 변화 양상 (2007, %) .....	14
<표 II-1> 등록외국인 체류자격별 구성비 및 전년동기 대비 증감현황 .....	24
<표 II-2> 유학형태별 유학생 수 .....	24
<표 II-3> 출신지역별 유학생 수 .....	25
<표 II-4> 주요 국가별 유학생 현황 .....	25
<표 II-5> 유학생 1000명 이상 대학 - 과정별 재학생 수 .....	26
<표 II-6> 제1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에 나타난 유학생 관련 정책 (2009~2011) .....	38
<표 III-1> 전공별 유학생 수 (2010) .....	49
<표 III-2> 출신국 별 유학생 수 (2010) .....	49
<표 III-3> 국공립 · 사립별/ 대학 단계별 재학생 수 .....	51
<표 III-4> 교육비 재원에 따른 유학생 수(2010) .....	51
<표 III-5> 2008년 외국인 유학생 학위수여 상황 조사표 .....	52
<표 III-6> 졸업(수료) 후 외국인 유학생 진로상황(2008) .....	52
<표 III-7> 유학생 10만인 계획의 총괄 : 1983~2007 .....	56
<표 III-8> 2010년 유학생 관련 주요 예산 (문부과학성) .....	60
<표 III-9> 최종학력별 재류자격 변경 허가 인원 .....	65
<표 IV-1> 호주 내 해외유학생 등록 현황(1994~2010, 격년) .....	79
<표 IV-2> 2010년 호주 해외유학생의 교육 기관별 등록자 현황 .....	81
<표 IV-3> 2010년 8월 기준 호주 해외유학생의 국적별 현황 .....	82
<표 IV-4> WHMs 비자 발급 추이(2005~06에서 2009~10까지) .....	83
<표 IV-5> 2009년 멜번에서 발생한 인도유학생 폭행사건 일지 .....	95



## 그림 차례

[그림 I-1] 유학생 유입국 상위 15개국의 유학생 비율(1999, 2007) .....	15
[그림 II-1] 연도별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 .....	23
[그림 II-2] Study Korea 프로젝트 비전 및 기본방향 .....	31
[그림 II-3] Study Korea 프로젝트: 중점과제 및 주요내용 .....	32
[그림 II-4] Study Korea 프로젝트 발전방안 비전 및 기본방향 (2008) .....	35
[그림 II-5] 캠퍼스 아시아 추진방향 .....	36
[그림 III-1] 일본으로의 유학생 증가 추이 (1983~2009) .....	48
[그림 III-2] 일본 내 재학단계별 유학생의 시계열적 증가 추이(1983~2009) ..	50
[그림 III-3] 일본에서 해외로 나간 유학생의 추이 (1983~2008) .....	53
[그림 III-4] 최종학력별 재류자격 변경 허가 인원의 추이 .....	65
[그림 IV-1] 호주의 해외유학생 등록 현황 추이 (1994~2010) .....	80
[그림 IV-2] 국가별 WHMs 수 증가 추이(2005~2010) .....	83



# 서 장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11년 9월말을 기준으로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인 140만 명을 넘어섰다.<sup>1)</sup> 이제 외국인 체류자와 이주자의 증가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1990년대 후반부터 지속적으로 누적되는 한국사회의 새로운 사회현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주민에 대한 기존의 연구나 정책들은 주로 1990년대부터 급증하기 시작한 외국인 노동자, 그리고 200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늘어난 국제결혼 이민자를 주로 주목해 왔다. 그런데 이주민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이주민의 내적 구성도 더욱 다양해지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가장 주목할 만한 집단은 외국인 유학생이다.

2000년 이후 국내 고등교육기관에서 수학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의 수가 크게 늘고 있다. 유학생에 대한 통계수치는 법무부 출입국관리 통계, 교육부 통계 등에서 약간씩 차이가 있다. 유학(D-2 비자)을 목적으로 하는 입국자 수는 2003년 12,335명에서 2010년 87,480명으로 급증하였다. 유학 비자와 한국어 연구비자(D-4-1)를 합산하면 유학생의 규모는 2011년 9월 현재 93,232명에 이른다. 한편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국내 외국인 유학생은 2003년 12,314명, 2006년 32,557명, 2007년 49,270명, 2010년에는 83,842명에 이르고 있다.<sup>2)</sup>

이러한 유학생 규모는 물론 외국으로 유학을 떠난 한국인 학생 수 (2010년 기준 251,887명)<sup>3)</sup>에 비하면 훨씬 적은 것이며, 세계적인 유학생 목적국들에 비교할 때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OECD 국가와 비교해 볼 때 고등교육 단계 학생 중 외국인 비율은 영국 19.9%, 캐나다 13.1%, 일본 3.2%, OECD 국가 평균은 8.5%인데 반해, 한국은 1.3%로 아직 유학생 비율이 낮

1)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11년 9월호. 이 중 등록외국인은 996,607명, 거소신고 외국인 118,803명, 단기체류외국인은 302,739명이다. 단기체류자를 제외하더라도 진정한 ‘외국인 100만인 시대’에 접어들었다.

2) 교과부의 국내 외국인 유학생 통계에는 '03년도까지는 전문대학, 4년제 대학, 대학원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이 포함되며, '04년도부터 전문대학, 4년제 대학, 대학원대학, 원격대학, 각종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을 모두 조사한 수치이다.

3) 교육과학기술부 2010년 국외 한국인 유학생 통계(대학이상).

#### 4 ●●● 교육이주의 추이와 미래 정책과제

은 편이다. 그러나 최근 유학생의 증가 추세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2008년 OECD 자료에 따르면 2000년 대비 한국의 유학생 수는 11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OECD 회원국 평균치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이다.<sup>4)</sup> 한국이 일방적인 유학생 수출국에서 점차 벗어나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세계화, 국제교류와 인적 이동이 확대되는 가운데 유학생의 증가는 전세계적인 추세이다. 1950년에 10만 여명에 불과하였던 유학생 수는 2007년 약 280만 명으로 늘어났다. 이처럼 지난 57년간 약 28배로 증가한 현상은 가히 ‘유학의 폭발’이라고 부름직한 것이다(안영진·최병두, 2008: 476; UNESCO, 2009). 이제 한국도 더 이상 예외가 아니며 유학생의 급증은 한국의 새로운 이주 현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고향을 떠나 외국으로의 유학을 결정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매우 개인적인 선택이다. 그런데 대다수 국가들은 유학생의 흐름에 대해 지대한 정책적 관심을 보이고 있다. 다른 이주민과 달리 유학생의 역할과 의미에 대한 일정한 기대가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유학생들은 앞으로 출신국의 미래 엘리트로 성장할 것이고 이들이 국가간 교류·협력에서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유학생이 많다는 것은 그 나라의 학문적 문화적 수준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며 대외적 위상을 강화하는 의미가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 출신 유학생의 양성과 지원은 개발원조의 일환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유학생은 ‘문화사절’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다른 이주민과 달리 유치국에 위험요소로 작용하기 보다는 문화를 풍부하게 하는 요소로 인식된다. 현실적인 측면에서 유학생은 유치국의 국제적 개방의 표현이자 장·단기적으로 이익을 가져다주는 국제화 또는 세계화의 모터로 간주된다(안영진·최병두, 2008; Budke, 2003: 21).

이처럼 전체적인 국제 이주의 규모 면에서 볼 때 유학생이 차지하는 절대적 비중은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가에서 외국인 유학생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난민, 불법이주자, 저숙련 이주노동자와는 달리

---

4) 2000년 대비 변화지수는 OECD 국가 평균 263, 한국 1,195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2010 교육통계 분석자료집>).

유학생들은 경제적 부담이나 인도주의적 도전, 문화적 위협으로 인식되지 않으며, 일정 기간 동안 학비를 내고 공부한 후 고향으로 돌아가는 보이지 않는 이주(invisible migration), 긍정적인 이주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따라서 한국을 비롯한 선진국 정부들은 유학생을 더 많이 유치하는데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연구는 한국 내 외국인 유학생 증가 현상을 이주민 내부의 다양성 확대하는 요인이자, 더 나아가 중장기적으로 새로운 이주민 정책 및 다문화정책의 수요를 촉발하는 요인으로써 주목하고자 한다. 주지하다시피 기존의 유학생 관련 논의는 주로 유학생 유치를 통한 대학의 발전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차원에 집중되었고, 한국 노동시장에 필요한 글로벌 인재 유치의 필요성도 이제 논의가 시작되는 단계에 있다. 대학 발전이나 인재유치의 차원에서도 유학생 정책이 방향이 아직 명확히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외연을 확대하여 이주민 정책 및 다문화 사회통합과의 연관성을 논의한다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시기상조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한국의 이주민 관련 정책이나 담론이 매우 분절적(엄한진, 2008)이라는 지적은 유학생 정책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즉, 유학생 증가를 교육 및 대학정책의 차원에서만 논의한다면, 실제로 유학생이 일상생활 안에서 내국인 학생, 그리고 내국인 지역주민들과 접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갈등이나 파급효과, 더 나아가 유학생 정책이 교육정책 뿐 아니라 고용 및 노동시장 정책, 출입국관리 정책, 중앙 및 지역 수준의 다문화 정책과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서로 경쟁하는 이익집단들이 이주 정책을 놓고 상이한 입장들을 주장하며, 다른 한편 정책을 집행하는 국가와 관료제 내부의 관행과 관성, 그리고 서로 다른 행정부처나 기관들 간의 각축 등이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된다(Castle, 2007; 이혜경, 2008). 요컨대 유학생의 증가는 일차적으로 대학 캠퍼스 내의 변화로 나타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들은 지역사회의 주민이자, 장기간 한국에서 공부하는 동안 가족을 동반할 수 있으며, 학업 중에 아르바이트로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또 졸업 후 진학이나 취업으로 한국에 오래 체류할 가능성이 있다.

## 6 ●●● 교육이주의 추이와 미래 정책과제

주지하다시피 한국에서는 2006년 이후 이주민 관련 법제 및 정책이 확대되어 왔다. 아직 본격적인 이민정책은 도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각기 다른 성격의 이주민을 다루는 정책, 각 정책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의 정책을 종합한 형태의 ‘외국인 정책’이 수립되어 있다. 외국인 정책의 목적과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재한외국인정책기본법(2007년 제정)은 한국에서 생활하는 외국인들의 처우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들이 한국인과 상호 이해를 도모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지향한다. 이 법에서 ‘다문화에 대한 이해증진’(제 18조)이 간략히 언급되기는 하지만, 외국인과 한국인의 공존을 위해 한국사회가 지향해야 할 가치나 원칙들이 명확하고 적극적으로 제시되는 것은 아니다.<sup>5)</sup> 그렇다면 유학생이라는 새로운 이주민 집단의 양적 성장이 외국인 정책의 방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도 면밀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외국인 유학생은 최근에야 한국사회에 등장한 이주민 집단이며 따라서 교육이주에 대한 학문적 접근 및 정책 연구는 아직 많이 축적되지 않은 상황이다. 대학의 국제화, 유학생 유치, 유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등 단기적인 과제의 차원을 넘어서서, 교육이주의 증가를 전체적인 이주의 증가 및 다문화 정책의 확대라는 보다 광범위한 지평에서 분석하고, 교육이주가 한국 사회에 미칠 파급효과 및 중장기적 정책 과제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교육이주의 방향과 미래 정책과제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논의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한국의 유학생 추이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사례분석, 즉 일본과 호주의 유학생 정책을 고찰할 것이다.

아시아의 대표적인 유학생 목적국인 일본, 전 세계에서 유학생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인 호주<sup>6)</sup>의 사례는 유학생 정책의 도입단계에 있는 한국과는

5) 장명선은 ‘이 법 어디에도 외국인들의 다양한 문화를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 정보제공 및 상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장명선은 이 법에 나타난 외국인 정책의 주된 시각이 (다문화주의가 아닌) 동화주의에 가깝다고 평가하고 있다 (장명선, 2011 :342)

6) 2009년 OECD 자료에 따르면 호주의 경우 전체 학생 중 유학생 비중이 33.4%로 나타나 전 세계에서 유학생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이다.

사회적 배경이나 정책의 성격에서 상당한 차이점이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외국 사례에서 한국에 곧바로 도입할 수 있는 정책을 탐색하는데 있지 않다. 한국의 유학생 관련 정책, 더 포괄적인 교육 이주 정책의 중장기적인 방향을 탐색함에 있어 유학생의 규모가 한국보다 크고 정책의 경험이 상당기간 축적된 사례들을 포괄적으로 고찰하고 이로부터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유학생의 국제적 이동, 교육 이주를 이해하는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 그 개념 정의, 고등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적 인구 이동의 복잡성과 다양한 양상 및 역동성을 적절하게 분석할 수 있는 다차원적 분석틀을 고찰한다. 주지하다시피 고등교육의 글로벌화는 한국 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나타나는 흐름이며 학생들의 국제적 이동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런데 교육이주의 목적지나 특정 지역에 대한 편중성은 최근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주 연구에서 주목하는 새로운 경향들, 즉 영구 정착형의 이주가 아닌 초국적 이주의 증가, 이주 경로 및 동기의 다양화 등이 교육이주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이전에는 유학생의 대다수가 미국으로 모여들었다면, 최근에는 역내 국가로의 교육이주가 늘고 있으며 특히 한국과 일본 등으로 중국인 유학생이 유입되는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다. 교육단계 및 그 종류, 체류기간, 유학 목적 등에서 다양한 양상이 나타난다. 즉, 학부생 보다 대학원생이 늘어나고, 학위취득 목적과 아울러 특정 목적의 유학(학점 취득, 개인적 동기의 자발적 이동) 등이 늘고 있다. 이러한 유학생 이동의 글로벌한 맥락 및 아시아 지역의 변화를 바탕으로 하여, 한국의 교육이주 흐름을 전망하고 정책 과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한국과 일본, 호주의 유학생 추이, 유학생 정책의 형성과정 및 그 사회적 배경을 고찰한다. 대표적인 이민국가인 호주는 1950년에 이미 “콜롬보 플랜(Colombo Plan)”이라는 이름으로 해외유학생 유치정책을 도입한 바 있다. 호주에서 유학생 유치는 교육산업 발전 및 기술이민 확대의 차원에서 전개되었으며, 이후 1970년대 이른바 ‘다문화 호주’의 천명, 1980년대 이후 백호주의 대두와 보수당 집권 등 역동적인 과정에서 일련의 변화를 겪게 된다. 한편 일본은 경제대국의 위상에 부합하는 다각적인 국제적 영향력 확

대라는 맥락에서 1983년 “유학생 10만인 계획”을 도입하였다. 이후 이른바 버블의 붕괴와 경기 침체, 소자고령화(少子高齢化)로 인한 노동력 부족과 해외 인재의 필요성 인식, 대학의 글로벌화 지원정책 등이 역동적으로 작용하면서 유학생의 흐름 및 정책의 방향에도 의미 있는 변화들이 나타난다. 이러한 정책의 전개과정, 정책 아젠다의 전환 및 그 배경 등을 시계열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중장기적인 유학생 정책의 방향 모색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각 사례 국가에서 현재 가장 첨예하게 부각되는 유학생 정책의 쟁점을 고찰한다. 주지하다시피 유학생의 흐름은 세계적인 경제상황과 경기 흐름, 각 정부의 대학 정책 및 이민정책, 외국인 도입에 대한 국내 사회의 여론 반응 등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시기별로 유학생 증감이나 정책 지원에 상당한 변화가 있다. 향후 한국의 유학생 정책의 중장기 방향에 시사점을 얻기 위해서는 각 사례 국가에서 현재 주로 논의되고 있는 정책 쟁점, 유학생 정책을 둘러싼 갈등이나 논쟁 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가령, 호주 사례에서는 유학생에 대한 차별 및 시민권 보장이 주로 논의되고 있다면, 일본의 경우 지진 이후 유학생 안전 문제, 그리고 일본 특유의 다문화 공생 정책과 연관되어 있는 정책 흐름, 즉 지역사회의 유학생 문화교류 프로그램 등을 주목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분석에서 자연스럽게 좁은 의미의 ‘유학생 유치’에 국한되지 않는 광범위한 정책과의 연관성을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 2. 연구 방법

### 1) 문헌 연구

문헌 연구는 세 가지 방향으로 수행되었다.

- 고등교육의 글로벌화, 국제적인 유학생 이동의 경향을 분석하는 이론적 연구, OECD 등 국제기구의 관련 통계 등 교육이주의 전반적인 흐름



를을 파악할 수 있는 문헌 분석

- 한국, 호주, 일본 등 각 사례 국가에서의 유학생 관련 연구 및 유학생 정책을 다루는 연구 및 정책연구 보고서 등의 문헌 분석
- 최근 유학생의 흐름, 유학생 정책이나 사회문제 등을 다루는 언론 보도, 유학생 관련 기관에서 공개하는 최신 자료 및 보고서 등을 인터넷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수집 및 분석

## 2) 현지 조사 및 전문가 인터뷰

### 가. 일본 현지조사 및 전문가 인터뷰

연구진이 일본을 방문<sup>7)</sup>하여 대학, 유학생 관련 기관, 전문 연구자 등을 직접 면담하고, 유학생 정책의 동향 및 최근 일본사회에서 대두하는 쟁점, 향후 정책전개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였다.

- 일본 도쿄 소재 조치(上智)대학 국제협력실 방문 : 글로벌 30에 참여하고 있는 대학으로써 외국 유학생을 많이 유치하고 있는 대표적 대학인 조치 대학의 국제협력실을 방문, 유학생 현황 및 대학의 유학생 전담기구 현황, 대학 수준의 유학생 지원 정책, 일본 정부의 지원 현황과 정부-대학간 정책추진 체계 및 상호협력 현황 등에 대한 면담 조사
- 일본 문부과학성 산하(독립행정법인) JASSO(일본학생지원기구) 방문 : 일본 정부의 유학생 지원 업무 현황, 유학생 유치와 관련된 제도 변화, 유학생 기숙사 지원·유학생과 지역사회 간 문화교류·유학생 취업 지원 프로그램 및 취업 현황·유학생 귀국 후 사후관리 정책 등에 대한 면담 및 자료수집

---

7) 일본 현지조사는 2011년 8월 27일부터 9월 1일 사이에 진행되었다.

## 10 ●●● 교육이주의 추이와 미래 정책과제

### ■ 일본 내 유학생 정책 연구자 면담

: 조치(上智)대학 교육학부 스기무라 미키 교수가 주도하는 연구팀과 면담, 국제적인 학생이동과 다문화 정책에 대한 일본 내 연구현황에 대한 논의, 한국의 유학생 및 다문화 정책에 대한 소개, 관련 연구의 한일 협력방안 등을 논의 (참석자 : 분쿄대 다이스케 소노야마 교수, 아이치교육대 니이 키미코 교수, 동경대 시라이시 사야 교수, 국제개발 저널 사토시 미나모토 실장 등)

: 히토츠바시(一橋)대학 교육학부 히로시 오타교수 면담 : 일본 유학생 현황, 유학생 유치 및 지원정책의 도입 및 전개상황, 한국과 일본의 유학생 관련 정책 비교 등에 대해 면담 및 자료 수집.

### 나. 국내 전문가 FGI(Focus Group Interview) 및 인터뷰

: 국내 유학생 정책의 현황 및 향후 과제, 각 대학의 유학생 현황과 문제점 등에 대한 의견을 인터뷰 및 자문회의를 통해 수집함.<sup>8)</sup>

## 3.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 1) 배경: 교육의 글로벌화, 국제유학생과 교육이주

#### 가. 개념 정의

전지구화의 증가와 더불어 국경을 넘는 인간 이동, 곧 이주에 대한 연구가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반면, 학생 이주(student migration)에 대한 연구나 이론화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이주 연구들은 주로 경제적 이주에 해당하는 노동 이주, 그리고 정치적 이유나 재난으로 인한 난민, 인신매

---

8) IOM 이민정책연구원을 방문하여 전문 연구자들이 참석하는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 한국 유학생 정책의 방향 및 유럽의 ERASMUS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 등을 수집하였음. 그리고 인터뷰 및 서면자문의 형식으로 국내 각 대학의 유학생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였음(서울대, 고려대, 창원대, 부산대, 청주대 등).

매 등을 주로 다루고 있으며, 아시아에서는 결혼 이주가 주목을 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적으로 이동하는 학생’, 곧 유학생의 추이와 유학생 정책을 주로 분석하되, 교육이주라는 용어를 병행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국내 논의에서는 유학생 정책이 좁은 의미의 ‘유학생 유치’ 정책으로 통용되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교육기관의 유학생 유치 차원을 넘어서서 유학생의 증가를 전반적인 이주 및 다문화 정책의 차원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물론 교육이주라는 표현은 매우 포괄적이며,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이주는 여타의 이주형태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을 수도 있고<sup>9)</sup>, 또 초·중·고 수준의 유학 현상은 대학 이상의 유학생 흐름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는 문제도 있다. 교육 이주의 개념적 정의는 차후 더 많은 논의를 필요로 하며, 이 연구에서는 (3차 교육기관 이상 수준의) 유학생 유치, 대학 및 교육기관에서의 유학생 관련 정책 뿐 아니라, 유학생과 수용국 사회의 상호 작용, 교육과정을 마친 이후 유학생의 취업 및 진로와 사후 관리 관련 정책, 한시적 이나마 수용국의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유학생의 역할 및 참여, 유학생의 증가가 전체 이주 및 다문화 정책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포괄하는 의미로서 교육이주 정책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이다.

국제기관에서 사용되는 유학생의 정의를 먼저 살펴 보자. 유네스코 통계 연구소에서는 국경을 넘는 학생들의 이동을 ‘국제적으로 이동하는 학생들’(internationally mobile students, 이하 국제 유학생) 이라고 정의하며, 그 기준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첫째, 영주의 기준이다. 호스트 국가에서 영구적으로 거주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교육을 받는 경우가 국제 유학생에 해당한다. 둘째, 유학 이전의 선행 교육(prior education) 기준이다. 외국에서 공부하고자 하는 단계와 수준에 맞는 자격을 갖추고 입국하였을 때 국제유학생이라고 볼 수 있다. 전형적인 선행 교육의 예는 3차 교육기관에 등록한 학생들이 상위 2차 교육을 마쳤는가 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시민권 기준이다. 자신이 공부하고 있는

9) 현실적으로는 노동이주와 교육이주가 상호 배타적으로 구분되지 않을 수 있다. 교육과정을 마친 후 목적국에서 취업을 하거나 그 이후 영주를 하게 되는 사례도 있으며, 노동이주나 결혼이주 이후에 일정한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사례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국가의 시민이 아닐 때 국제 유학생이라고 할 수 있다. 유네스코에서는 비영주와 선행 교육의 두 가지 기준으로 국제 유학생을 정의하며, 비시민권 기준은 주로 유럽 공동체(EU)나 OECD 국가에서 사용하는 기준이다. 사실 국제 유학생을 정의하는 기준은 국가마다 서로 다를 수 있는데, 유네스코에서는 1년 이하의 단기 교환 프로그램은 유학생에 포함시키지 않는다(UNESCO, 2009: 36).

유학생의 규모와 그 증감, 유학생의 지리적 분포 등을 파악할 때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가에 따라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최근에는 원격교육, 교환학생 프로그램, 지역 캠퍼스 설치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고등교육의 글로벌화가 진행되고 있다. 유학생들이 진입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성격과 주관 기관의 성격도 다양한데, 가령 어학연수, 직업 학교, 대학(학부), 대학원, 기타 연수 프로그램 등의 성격을 구분해서 유학생 증감의 의미를 주의 깊게 해석해야 한다.

## 나. 국제적 학생 이동의 동향

2007년 전 세계적인 유학생의 규모는 280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수치는 2006년보다 123,400명, 백분율로는 4.6% 증가한 것이다. 유학생 규모는 1999년 이후 53% 늘어난 것이며, 1975년에 비하면 2.5배나 늘어났다. 또한 여성들의 유학도 늘어나 1999년 유학생 중 여성비율은 46%였으나 2007년에는 49%로 증가하여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유학생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중국 출신 학생이다. 2007년을 기준으로 최대의 유학생 송출국인 중국에서 421,100명, 그 다음으로 인도에서 153,300명이 외국유학을 떠났으며, 한국은 세계 3위의 유학생 송출국이다(105,300명). 한편 유학생들을 가장 많이 받아들인 국가는 미국(595,900명)이며 그 다음은 영국(351,500명), 프랑스(246,600명), 호주(211,500명)의 순이다.

1999년과 2007년 사이에 국제 유학생의 흐름에 새로운 동향이 나타나고 있다. 첫 번째는 유학생들이 이전에 비해 자신의 출신국가가 위치하는 지역 안에 머무르는 경향이 늘어나는 것이다.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우 5명

의 유학생중 2명 꼴(42%)로 이 지역 내에서 유학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수치는 1999년(35%)에 비해 현저히 늘어난 것이다.(UNESCO, 2009: 39)

둘째, 이동 학생은 목적지의 선택의 폭이 이전보다 확대되고 다각화되고 있다. 동아시아·태평양 지역 학생들의 주요 목적지는 1999년에는 미국이었고, 유학생의 43%가 미국으로 집중되었다. 그런데 이제는 42%에 달하는 학생들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에서 유학을 하고 있다. 동아시아·태평양 역내의 최대 목적지는 호주와 일본이다(UNESCO, 2009: 47). 가령, 1999년에는 중국 출신의 유학생 중 38%가 미국에서 공부를 했던 반면, 2007년에는 이러한 비중이 23%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유학생 목적지의 다각화, 그리고 지역 내 유학 목적지의 부상이라는 이러한 변화에서 주로 이득을 본 국가들은 호주, 독일, 뉴질랜드, 한국, 그리고 영국 등이다.

주지하다시피 한국은 대표적인 유학생 송출 국가 중의 하나이지만, 한국으로 들어오는 유학생이 급속하게 증가하는 현상도 주목할 만하다.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한국으로 입국한 유학생은 전체 유학생 중 1.1%(세계 15위)를 차지하며, 한국은 중국, 뉴질랜드 등과 함께 새롭게 부상하는 유학생 목적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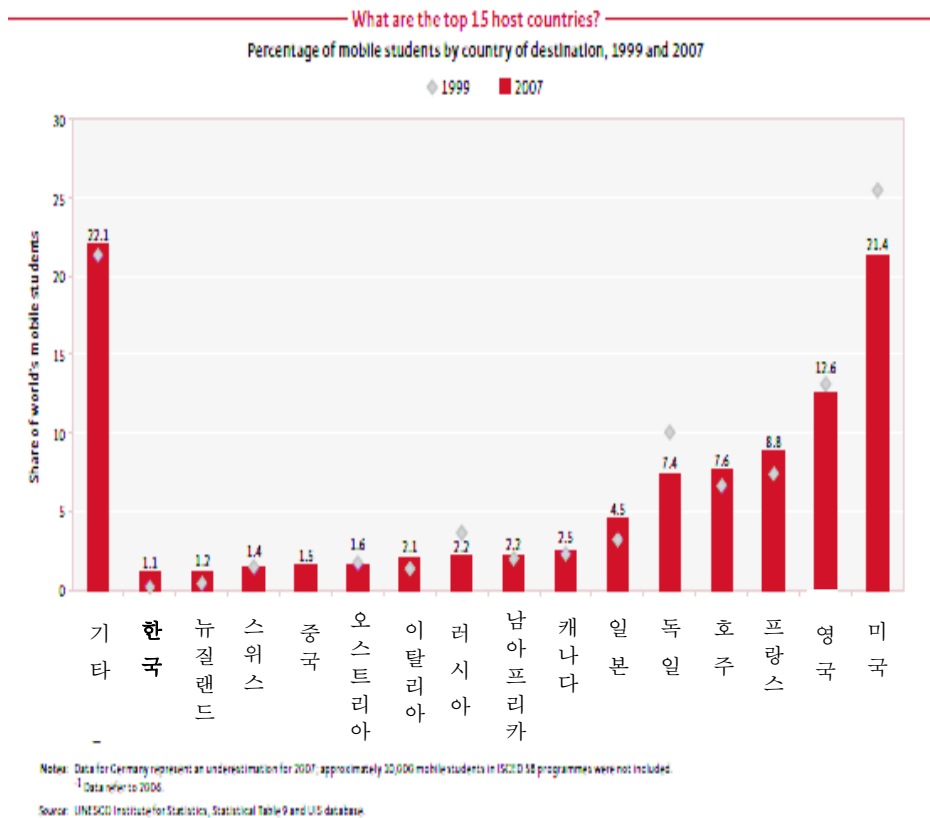
이처럼 한국으로의 유학생 유입이 2000년 이후 급증한 것은 주목할 만하지만, 여전히 한국은 중요한 유학생 송출국이며 교육 무역수지는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향후 한국의 교육이주의 흐름과 정책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학생 이주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분석 및 이론적 설명을 필요로 한다.

〈표 I-1〉 유학생 출신지 별 목적지 비율과 변화 양상 (2007, %)

출발지 도착지	아랍 국가	중부· 동부유럽	중앙 아시아	동아시아 · 태평양	중남미	북미	서유럽	서남 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계
아랍 국가	15.9 (+3.7)	5.6 (-2.8)	0.4 (-0.1)	4.7 (+3.5)	0.1 (0)	15.4 (-1.3)	56.9 (-3.1)	1 (+0.1)	0 (0)	100
중부·동부 유럽	0.2 (-0.1)	27.7 (+2.9)	3.1 (+0.7)	1.2 (+0.1)	0 (0)	12.3 (-2.9)	55.4 (-0.1)	0 (0)	0 (0)	100
중앙 아시아	0.3 (+0.1)	44.2 (-16.7)	34.7 (+6.7)	3.2 (+2.4)	0 (0)	4.9 (+1.3)	12.5 (+6.4)	0.1 (-0.2)	0 (0)	100
동아시아· 태평양	0.2 (-0.3)	1.3 (-0.4)	0.4 (+0.3)	41.8 (+6.0)	0.2 (+0.1)	33 (-10.0)	22.9 (+4.4)	0.2 (-0.1)	0 (0)	100
중남미	0.1 0	0.3 0	0 0	2.5 (+0.9)	22.9 (+12.2)	43.2 (-11.7)	30.9 (-1.4)	0 (0)	0 (0)	100
북미	0.4 (+0.1)	2.3 (+0.5)	0.1 0	15.4 (+6.4)	1.7 (-0.9)	39.1 (-0.6)	40.5 (-5.6)	0.5 (+0.1)	0 (0)	100
서유럽	0.6 (+0.4)	3.9 (-0.6)	0 0	3.7 (+1.0)	0.2 (+0.1)	14.4 (+0.1)	77.2 (-1.0)	0 (0)	0 (0)	100
서남서 아시아	0.8 (-0.4)	3.2 (-2.3)	1.8 (-0.1)	21.1 (+11.5)	0 (0)	45.7 (-5.7)	26.1 (-2.0)	1.3 (-1.4)	0 (-0.1)	100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3 (-0.5)	0.9 (-0.7)	0 0	4.3 (+2.4)	0.9 (-0.7)	17.4 (-2.0)	49.8 (-2.3)	0.8 (-1.2)	22.9 (+4.5)	100
세계	2.9 (-0.4)	7.1 (-0.1)	1.9 (+0.5)	18.4 (+5.0)	1.9 (+0.7)	23.7 (-3.2)	41.2 (-2.3)	0.4 (-0.1)	2.6 (0)	100

(출처: UNESCO, Global Education Digest 2009, p.39.)

주) 괄호 안 숫자는 1999년 대비 증가율(%)임.



(출처: UNESCO, Global Education Digest 2009, p43.)

[그림 I -1] 유학생 유입국 상위 15개국의 유학생 비율(1999, 2007)

## 2) 교육이주에 대한 이론적 접근 : 기존 연구 검토

사람들은 왜 자신의 고향을 떠나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공부하려고 하는 것일까? 국제적인 학생들의 이동이 늘어나는 데에는 밀어내기 효과(push effect)와 끌어당기는 효과(pull effect)가 함께 작용할 것이다. 자국의 교육환경이 열악하여 외부의 기회를 찾아 떠나는 사례도 있고, 외국의 대학이나 연구소의 우수한 교육프로그램과 유리한 지원제도 등이 유학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이러한 설명은 유학을 일종의 개인적 선택, 즉 유학의 수요 측면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일부 연구자들은 유학의 배경에 있는 계급·계층적 요인, 즉 중간계급 부모들이 자녀의 유학 배움을 부담함으로써 자녀에게 보다 희소하고 가치 있는 문화자본을 획득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분석한다(Waters, 2006). 유학생의 계급적 배경과 유학을 통한 문화자본 및 상징자본의 형성을 분석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해외 유학의 수요 측면만을 강조한다는 한계 또한 갖고 있다.

국제적인 학생 이동을 이해하고자 할 때 유학을 원하는 학생의 동기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며, 재능 있는 젊은이를 대학이나 여타 고등교육 기관에 유치하고자 하는 공급자들의 실천과 정책도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특히 최근 들어 고등교육의 글로벌화가 진행되었고 그 결과 유학생 유치는 매우 돈벌이가 되는 사업이 되었다. 공급 측 이론의 주장은 국제 학생의 이동이 글로벌 경제 내에서 엘리트의 고등교육 기회를 조직, 공급하고 마케팅 하는 측의 재정적 이익에 따라 강하게 형성된다는 것이다(Findlay, 2010: 163).

실제로 각국 정부들은 유학생 유치 전략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 예로,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는 1999년 7월 “총리의 국제교육 이니셔티브(the Prime Minister's Initiative on International Education)”를 발표하고 영국으로 들어오는 유학생을 100% 늘림으로써 글로벌 마켓의 25%를 차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유학생 유치 정책의 목적은 외국인 학생들이 지불하는 학비 재원으로 더 많은 영국인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었다. 즉 유학생 확대는 세금을 늘리지 않고 영국인의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정책으로 정당화되었다. 더 나아가 2006년에는 “PMI 2”라고 흔히 말하는 정책을 발표하고 유학생 졸업 이후의 노동시장 진출을 연계하는 방안을 강화하였다(Findlay 2010: 177).<sup>10)</sup>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인 유학생 유치

10) PMI 2 정책의 의미를 Findlay(2010: 179)는 다음의 네 가지로 정리하여 설명한다. 첫째, 학생 이주를 광범위한 이민 정책의 한 부분으로 통합하고, 영국 대학들이 영국 정부의 새로운 이민체계의 가장 대량 이용자가 되게 만들었다. 둘째, 경제적 순익의 측면에서 국제 유학생 유치 사업은 그들이 지불한 학비 및 기타 소비비용을 포함, 2005-6년간 15억 파운드의 이익을 냈다. 셋째, 2008년부터 시행된 새로운 이민 정책은 일종의 포인트 제도를 통해 유학생의 졸업 후 이민을 용이하게 하였다. 박사, 석사, 학사 학위자는 점수를 더 받았고, 특히 영국의 고등교육기관을 졸업한 경우 보너스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즉, 영국 유학은 영국으로 이주하



정책은 영국으로 유입하는 유학생이 증가하는 효과를 낳았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유학생의 지리적 분포와 증감 추이, 목적국의 분포 변화 등은 수요나 공급의 어느 한 요인만으로 설명될 수 없으며, 다차원적인 분석을 필요로 한다. 또한 유학 결정을 개별 유학생의 선택이나 행위 수준의 모델로 설명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유학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조건, 그러한 구조적 조건에 의해 형성되는 교육 이주의 유형 및 경로를 주목해야 한다.

교육이주의 흐름을 좌우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대다수의 연구자가 주목하는 것은 글로벌화(globalization), 특히 고등교육의 글로벌화이다. 글로벌화라는 큰 흐름 속에서 유학의 동인을 분석하는 시각은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안영진·최병두, 2008).

첫 번째는 숙련이주 접근(skilled migration approach)이다. 경제적 세계화가 심화됨에 따라 숙련된 고급 기술 인력의 유치가 각국의 경제성장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비숙련 단순 노동력의 이주와는 차별화된, 숙련된 전문 인력의 이주를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그러한 통로로서 학생 이주를 중시하는 시각이다.

두 번째는 수익 창출 접근(revenue-generating approach)이다. 고등교육을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서비스 산업으로 육성하고 추가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각국 정부 및 관련 기관들의 시각이다. 더 많은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공급자, 곧 각국 정부와 대학들의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세 번째는 능력형성 접근(capacity building approach)이다. 신흥경제국을 중심으로 인적 자원을 단기간 내에 축적하기 위해 고등교육기관의 수용 규모를 확대하려는 전략이다. 이민정책보다는 교육정책 및 인적자원 관리의 차원에서 유학생 이동을 중시한다.

네 번째는 상호이해 접근(mutual understanding approach)으로써, 학생의 이동과 교육의 교류 확대를 통해 송출국-유입국 간 국제적 상호 이해를 증진

---

는 좋은 경로가 되었다. 넷째, 학생 비자 발급 단계에서 정책기준이 보다 까다롭게 강화되었다. 과거에는 학습 과정에 대한 조사가 거의 없었으나, 새 체제에서는 유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는 기관의 수를 줄여서 인증 관리한다. 유학생이 입국할 때 더 엄격한 배경 검사를 하며 일부 국가 출신자의 경우 학생 비자 심사 기간이 길어지기도 한다.

하는 것을 중시하는 입장이다. 유학생은 양국의 언어와 문화를 모두 이해하고 일종의 문화 매개자로서 국제협력을 촉진하는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교육이주, 학생 이주를 이해하는 다양한 시각이 있을 수 있고, 또 교육이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일반적인 모델로 단순화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이민정책, 교육서비스의 수익창출, 인적자원 형성, 국제협력 증진 중 어느 차원에서 접근하고 또 어떤 측면에 정책의 중점을 둘 것인지는 각 국가의 배경에 따라, 그리고 시기에 따라 상이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교육이주 관련 정책에서 사례연구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일본, 호주 정부는 각각 어떤 시기에 어떤 목적을 위해 유학생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는지, 그리고 일정한 시간이 흐른 후에 정책의 방향 전환이 나타나는지, 그러한 정책 변화를 이끌어낸 요인들은 무엇인지 등을 사례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로부터 한국의 향후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아시아 내에서의 교육 이주는 또한 미국, 영국, 호주와 같은 영어권 국가로의 유학과는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아시아 학생들이 서구나 북미가 아닌 비영어권 아시아 국가로 유학을 가는 이른바 역내 유학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일본과 한국으로 진입하는 유학생 중 중국 출신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물론 중국은 세계 최대의 유학생 출신국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중국인의 비중은 아시아권 내에서는 더욱 압도적이며 이들이 서구나 영어권 국가가 아닌 비영어권 아시아 국가를 유학 장소로 선택하는 상이한 동기나 제도적 경로들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교육이주의 글로벌화와는 다른 차원에서, 아시아 역내 교육이주의 증가, 그리고 중국출신 유학생의 증가가 출신국 및 목적국에 미치는 영향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일본 내 중국인 유학생의 경험을 다룬 연구(Liu-Farrer, 2009)는 아시아 역내 이주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쟁점들을 잘 부각시키고 있다. 일반적으로 교육이주는 노동이주의 한 형태로 이어지며, 이 때 주로 논의되는 것은 두뇌 유출(brain drain), 또는 값싼 노동력을 끌어들이는 통로라는 두 가지 문제다. 전자

는 잠재적인 고급 전문 인력으로서의 유학생, 후자는 이른바 ‘가짜 유학생(bogus student)’과 관련된다. 그런데 일본에 유학하는 중국인 학생들의 경험은 흑백론과도 같은 두 가지 유형으로 설명될 수 없으며, 실제로 유학생들의 유형이나 경험은 훨씬 다양하다는 것이다. 류-파리는 중국인들의 일본 유학 이주를 ‘교육을 통한 국제 노동 이주(educationally channelled international labor mobility)’로 개념화한다.

류-파리에 따르면 1980년 중반 이후 약 20년간 중-일 학생 이주에서 네 가지 유형이 나타난다. 첫 번째는 ‘동전을 세는’ 학생들(coin-ranking student), 곧 돈을 벌기 위해 어학원 등에 등록을 하고 일본에 온 중국인이다. 두 번째는 ‘고학생’(laboring students)들인데, 일본에서의 학비를 벌기 위해 파트타임 노동, 주로 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직종에서 저임금 노동을 하는 학생들이다. 이들은 과도한 재정 부담과 노동 부담을 안고 있으며, 대학의 학위과정으로 진학에 성공하기도 하지만,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면서 일본의 최하위 비정규 노동시장에 머물러 있는 경우도 있다. 세 번째는 유학 비자 만료 후 불법 체류하는 집단이다. 공격적으로 중국인 유학생을 유치한 직업학교 등에서 이러한 집단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들 역시 대학 학위과정으로 진입하지 못하고 저임금 노동력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네 번째는 대학 졸업 후 일본 기업에 취업한 숙련 인력들이다. 이들은 주로 중국 진출을 계획하는 일본 기업에서 일하며, 자신의 전공 지식보다는 중국 현지의 문화와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매개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급증하는 중국인 유학생의 동기나 경험을 진짜/가짜 학생이라는 이분법적인 기준 만으로는 적절하게 이해하거나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유학생의 캠퍼스 밖의 저임금 노동이 현실적으로 노동시장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 그리고 유학생 집단의 유형이나 노동시장 내 위치가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교육 이주의 흐름은 몇 가지 모델로 일반화하는 식의 인과적 설명 보다는, 특정 시점, 특정 국가 및 지역에서 관찰되는 사례들의 특수성과 맥락을 질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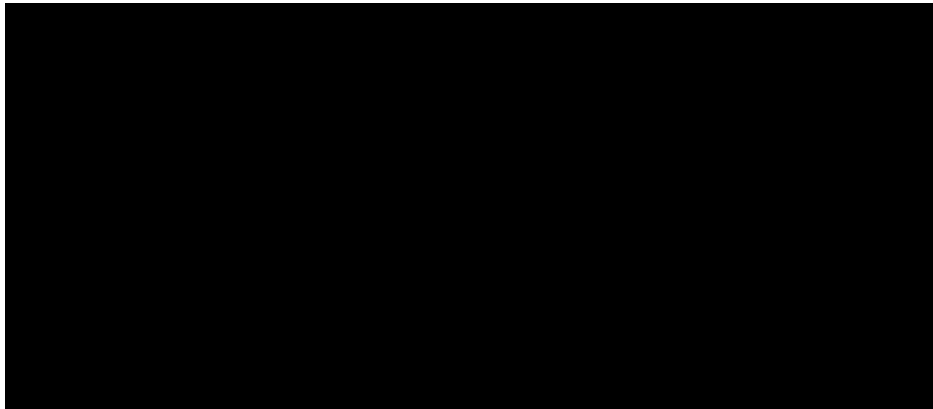
## Ⅱ

# 한국 내 교육이주 추이 및 정책 현황



## 1. 한국 내 유학생 현황

한국으로 유입하는 유학생의 규모는 2000년 이후 급속하게 증가하였다. 2003년 12,314명이었던 유학생은 2010년에는 84,455명으로 지난 7년의 기간 동안 6.8배 이상 급증하였다. 유학생의 규모가 이처럼 늘어남에 따라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 유학생이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늘었다. 2010년 6월을 기준으로 국내 등록외국인 중 유학생이 차지하는 비중은 방문취업, 비전문 취업, 거주에 이어 네 번째인 7.4%에 이르렀으며, 유학생의 수는 전년보다 14.4% 증가하였다.(표 II-1 참조)



(자료: 2010년도 국내 외국인 유학생 통계, 교과부)

[그림 II-1] 연도별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

유학 형태별로 보면 유학생 중 85.6%가 자비 유학생이며, 장학금을 받고 유학 온 학생의 비중은 낮은 편이다. 한국 정부가 초청한 장학생은 2.3%에 불과하다. 출신지역별로는 아시아 지역 출신이 85.7%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유학생들 중 다수는 인문사회 분야를 전공하고 있다. 어학연수나 기타 연수를 제외한 학위과정에 진학한 유학생을 기준으로 할 때 인문사회분야 전공자가 70% 정도를 차지한다. 유학생의 출신 국가별로는 중국 출신이 68.9%를 차지한다. 이처럼 한국의 유학생은 아시아 출신, 특히 중국 출신의 자비유학생으로 인문 사회계열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유학생의 출신국가별 전공분야별 다양성이 나타나지 않고 한 쪽에 치우쳐 있는 모습이다.

〈표 II-1〉 등록외국인 체류자격별 구성비 및 전년동기 대비 증감현황  
(단위: 명, %)

체류자격	2009년 6월 (구성비)	2010년 6월 (구성비)	증감율
방문취업(H-2)	313,151(35.9%)	295,724 (33.7%)	▼5.6%
비전문취업(E-9)	183,478 (21.0%)	203,974 (23.3%)	▲11.2%
거 주(F-2)	133,717 (15.3%)	134,261(15.3%)	▲0.4%
유 학(D-2)	56,755 (6.5%)	64,940 (7.4%)	▲14.4%
등록외국인 전체	872,535	876,401	△0.4%

(자료 :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표 II-2〉 유학형태별 유학생 수

유 학 형 태	2009년도	2010년도	증감
자비유학생	64,271	71,843	7,572
정부초청장학생	1,629	1,942	313
대학초청장학생	6,634	8,091	1,457
자국정부파견 장학생	503	493	-10
기타	2,813	1,473	-1,340
합 계	75,850	83,842	7,992

(자료: 2010년도 국내 외국인 유학생 통계, 교과부)

〈표 Ⅱ-3〉 출신지역별 유학생 수

지 역	어학 연수	과 정 별						기타 연수	합 계
		인문사회	공학계	자연 과학계	예체능계	의학계	계		
아시아	15,372	39,392	8,702	4,076	3,778	470	56,418	48	71,838
아프리카	162	433	112	47	5	11	608	809	1,579
오세아니아	64	118	14	9	11	6	158	1,154	1,376
북미	680	1,180	100	125	110	91	1,606	16	2,302
남미	152	227	57	14	10	3	311	4,693	5,156
유럽	634	699	106	41	47	6	899	58	1,591
합 계	17,064	42,049	9,091	4,312	3,961	587	60,000	6,778	83,842

(자료: 2010년도 국내 외국인 유학생 통계, 교과부)

〈표 Ⅱ-4〉 주요 국가별 유학생 현황

국 가	중국	일본	미국	베트남	대만	몽골	기타	계
유학생수	57,783	3,876	2,193	1,914	1,419	3,333	13,324	83,842
비율 (%)	68.9	4.6	2.6	2.3	1.7	4.0	15.9	100

(자료: 2010년도 국내 외국인 유학생 통계, 교과부)

각 대학별로 유학생 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을 기준으로 1000명 이상의 외국인 유학생이 재학 중인 대학은 23개교로 나타난다<sup>11)</sup>. 학위 과정에 따른 외국인 학생들의 분포는 학교마다 다양하다. 이화여대, 연세대는 어학연수생의 숫자가 매우 많다는 특징이 있다. 학부 재학생의 수는 경희대, 성균관대, 건국대 등에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는 석사, 박사과정 대학원에서 공부하는 유학생이 가장 많았다. 고려대, 연세대의 경우도 대학원 석

11) 국내 대학의 외국인 재학생 중에는 재외동포 자녀들이 포함되어 있다. 재외동포 2세의 비중 및 그 차별적 의미 등은 별도의 분석이 필요하다.

박사 과정의 유학생이 많았다. 이처럼 대학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을 주로 유치하는 학위 과정에 차이가 나타났다.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대학원 과정에 외국인 재학생이 많은가 혹은 학위과정 외의 어학연수 및 기타 연수에 외국인 학생이 많은가 여부는 각 대학의 학문적 평판이나 특성, 그리고 대학별 유학생 유치 전략의 차이를 드러내는 것이라 하겠다.

〈표 II-5〉 유학생 1000명 이상 대학 - 과정별 재학생 수

(단위: 명)

	대학명	어학연수	대학(학부)	석사과정	박사과정	기타연수	합계
1	경희대	891	1,739	482	168	197	3,477
2	연세대	1,665	681	489	166	403	3,404
3	이화여대	1,834	165	226	31	777	3,033
4	성균관대	269	1,420	335	154	299	2,477
5	건국대	317	1,332	298	119	396	2,462
6	서울대	518	673	567	256	224	2,238
7	고려대	705	348	490	141	390	2,074
8	중앙대	407	892	384	31	-	1,714
9	상명대	787	723	76	7	39	1,632
10	청주대	171	1,096	100	6	34	1,407
11	동국대	161	878	235	33	63	1,370
12	전북대	64	573	329	133	157	1,256
13	경북대	196	664	188	101	76	1,225
14	인하대	198	570	171	173	88	1,200
15	선문대	341	718	97	21	8	1,185
16	한국외대	386	422	101	37	214	1,160
17	계명대	140	823	117	9	44	1,133
18	전남대	247	548	218	98	20	1,131
19	배재대	179	626	142	25	128	1,100
20	영남대	125	608	201	72	90	1,096
21	충남대	218	343	295	119	80	1,055
22	우석대	105	850	89	1	-	1,045
23	부산대	164	475	257	98	34	1,028

(자료: 2010년도 국내 외국인 유학생 통계(교과부)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함)



이처럼 외국인 유학생이 급증한 배경은 정부의 적극적인 유학생 유치 정책, 그리고 각급 대학의 적극적인 유치 정책이 맞물린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1997년부터 외국인의 정원 외 입학에 대학 자율에 맡겼으며, 2001년 ‘외국인 유학생 유치확대 종합방안’, 그리고 이를 확대 보완한 Study Korea (2004)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Study Korea 프로젝트”가 당초 목표로 삼았던 외국인 유학생 5만 명 유치가 2007년에 조기 달성되자, 2008년에 “Study Korea 발전방안”을 통해 2012년까지 유학생 10만 명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확대 방침이 발표되었다 (안영진, 2009: 344).

물론 정부와 대학의 적극적 유치 전략이라는 공급 측면의 요인만으로 유학생 증가를 모두 설명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한류의 확산, 아시아 젊은이들 사이에 한국의 긍정적 이미지나 전망이 확대된 것도 한국을 유학 목적지로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다른 한편, 외국인 유학생 급증에 대한 몇 가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국내 청년들의 실업, 특히 대졸 청년들의 실업이 심각한 가운데 외국인 유학생이 늘어나고 한국 대학 졸업장을 가진 외국인들이 국내 노동시장으로 진입한다면 청년층 실업 문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유학생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학생들이 중도에 학업에서 이탈하거나, 학교에는 나오지 않고 취업에만 관심을 갖는 등의 문제가 일부에서 나타나고 있다.

## 2. 국내 유학생 관련 연구 동향

한국으로 유입된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로 양적으로 연구가 많지 않은 상황이다. 이 연구들은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학교생활, 한국생활 적응 문제 등을 조사 분석한 연구들이다(박은경·김민일, 2009; 권양이, 2008; 안영진, 2009). 두 번째로 유학생 유치 전략이나 글로벌 교육의 방향 등 정책에 대한 전략적 연구 보고서들이 있다.

먼저 해외 유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이나 국내 생활에서의 경험을 조사하는 연구들은 소규모 표본 집단에 대한 연구가 대다수이며, 전체 유학생 집단을 대표할 만한 대표성과 신뢰성이 있는 조사 결과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유학생 400명 대상을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한 안영진(2009)의 연구이다. 유학생의 이주 경로 및 결정과정을 조사한 이 연구에 따르면, 한국 유학에 대한 정보는 주로 학교와 연구소에서 접하며, 본국의 대학이나 본국 소재 유학원을 통해 한국으로 유학을 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유학생 응답자 중 45.6%는 공부를 마친 후 한국에 남기 보다는 본국으로 돌아가 취업하기를 희망하였고 한국 내 취업 희망자는 14.0%에 불과하였다. 그밖에 제3국 취업 및 제3국 진학이 각각 8.9%, 귀국 후 진학이 8.1%, 한국 내 진학이 7.0%로 나타났다.

한편, 유학생과 관련된 정책 연구들은 주로 대학의 국제화 및 발전과 관련하여 유학생 유치 전략을 다루는 문헌들이 많다. 이기정 외(2009)의 연구는 국내 고등교육기관의 외국인 학생 유치 및 관리현황을 점검하고, 국가별 지역별로 외국인 학생들의 교육적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입학제도, 학사제도, 교육프로그램 등의 측면에서 우리나라 대학과의 연계 방안을 도출, 국가별 지역별로 외국인 학생의 유치 확대를 위한 대학 마케팅 전략 등을 검토하고 있다. 김우종 등(2011)은 한국과 일본의 중국인 유학생 유치 전략을 비교하고, 중국인 유학생을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국내 한국의 교육서비스 브랜드 구축, 해외에서 한국어 능력시험 확대, 한류를 활용한 교육서비스 마케팅, 지자체의 적극적 역할, 국내 대학의 유학환경 개선 등을 제시하고 있다.

단순한 유학생 유치를 넘어서 보다 광범위한 ‘글로벌 교육’ 전략의 확대를 주장하는 연구도 있다(배상훈 외, 2010). 여기에서 글로벌 교육은 국제문제와 글로벌이슈에 대한 학습과 타국의 문화, 사회, 경제, 정치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며, 나아가 국내 학생들의 해외 유학지원과 해외인재의 유치를 통한 학생교류, 이를 통해 국가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는 네트워크 형성과 한국문화의 전파까지도 포함하는 신개념 교육전략을 의미한다. 글로벌교육에 대해 해외 유관기관에서의 다양한 정의들이 존재하는데, 미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교육기관인 IIE에서는 ‘Mutual understanding, Educating Global Citizen, Developing Leaders’ 세 가지 측면을 강조하면서, 다른 국가와의 교육협력관계 구축, 고등교육기관과의 연계, 개인과 기관의 국제적 변화에 대응하는 역량 강화 등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한다(배상훈 외, 2010: 8).

한편 해외 유학생의 확대를 외국인 전문인력의 활용으로 연결하고자 하는 연구도 있다. 한국 경제가 고부가가치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고급 전문 인력이 필요한데, 한국에서 고등교육을 받아 한국 문화에 비교적 익숙한 외국 유학생들을 국내 IT업체 등에 취업시킨다면 인력난을 겪고 있는 국내 중소형 IT 업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또 외국 인력 유입으로 인한 문화 간 갈등도 줄어든 수 있다는 주장이다(송영관·양주영, 2009).

이러한 정책연구들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고등교육 기관의 세계화, 한류 마케팅, 유학관련 해외 네트워크 형성 등 “스터디 코리아 프로젝트”에서 제시된 방향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는다.

### 3. 유학생 관련 정책의 현황

한국은 유학생을 배출하는 대표적인 국가이며, 외국인들이 유학을 목적으로 한국을 찾게 된 것은 최근에 일어난 변화이다. 국비장학생 제도는 이미 1967년부터 도입되었지만 규모가 한정된 명목상의 제도였다. 본격적인 변화가 시작한 2001년 정부가 “외국인 유학생 유치확대 종합방안”을 수립, 시행한 것이었다. 일반적으로 국민국가 정부가 유학생 유치에 관심을 갖게 되는 배경으로는 전반적인 글로벌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학생 유치 필요성, 그리고 지식기반 산업이 요구하는 해외인재 유치와 산업경쟁력 강화,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는 외국인 인력양성의 필요성 등을 들 수 있다. 한국 정부 역시 고등교육의 글로벌화를 추동하는 인적 이동의 증가와 외국 정부들의 적극적인 정책을 참조하면서 이러한 정책들을 도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한국 정부가 추진해온 유학생 관련 정책의 흐름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한국에서 나타나는 정책 도입의 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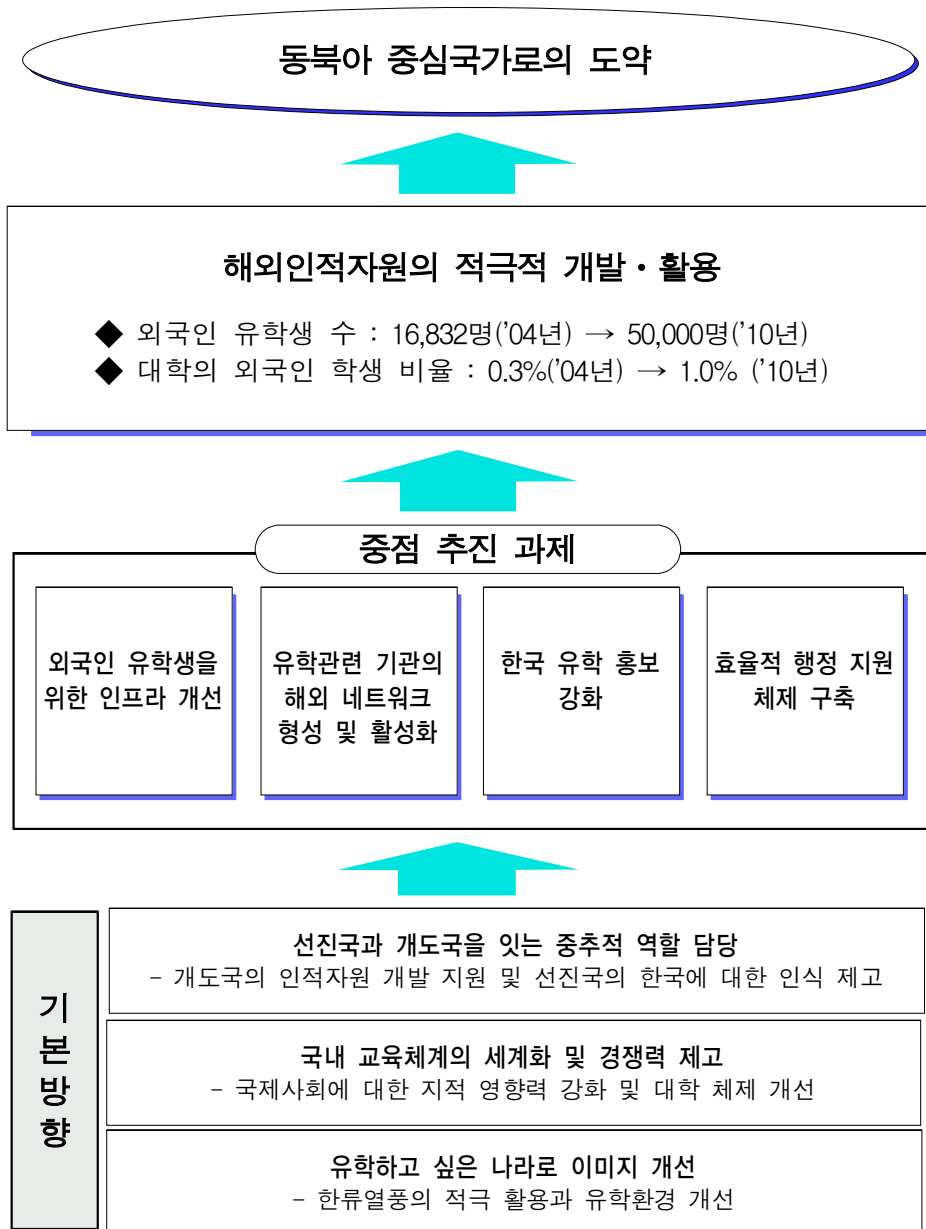
경, 정책의 중점 추진방향, 핵심 정책의 변화과정 등을 고찰하고자 한다.

## 1) Study Korea 프로젝트 (2005)

한국 정부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유학생 유치 및 지원 정책을 발표한 것은 “Study Korea 프로젝트”가 최초라고 할 수 있다. “스터디 코리아 프로젝트”는 2004년 대통령의 지시로 초안을 마련하는 작업이 시작되었고 관련 부처의 의견을 수렴한 후 2005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 “스터디 코리아 프로젝트”에 앞서 2001년에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확대 종합방안”이 시행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해외 유학박람회를 통한 한국대학 홍보('01~)
- 국제교육진흥원 기숙사 신축('02)
- 온라인 한국유학안내시스템 운영('03~)
- 대학의 기숙사 신·증축비 지원('03)
- 유학생 사증발급 첨부서류 3~4종으로 간소화('04.3)

2001년 종합방안의 내용은 크게 유학생 유치를 위한 홍보와 정보제공, 기숙사 지원, 그리고 출입국관리절차 간소화로 요약할 수 있다. “스터디 코리아 프로젝트”는 이러한 홍보 및 유치 확대 전략을 좀 더 확대하여 체계화한 것이며,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전략적인 비전을 제시한 것이다. “스터디 코리아 프로젝트”는 “동북아 중심국가로의 도약”을 비전으로 표방하고 이를 위해 해외 인적자원을 적극적으로 개발 및 활용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삼았다. 유학생 유치 확대가 단지 대학의 발전 방안을 넘어서서 거시적인 국가정책의 추진 방향과 연계된다는 인식을 분명하게 밝힌 점이 주목된다. 이 프로젝트의 중점 과제는 모두 6가지 영역, 곧 외국인 유학생 초청 사업 확대, 해외 네트워크 형성 및 활성화, 한국 유학 홍보 강화, 외국인 유학생 수학·생활환경 개선, 한국어·한국문화 보급 확대, 효율적 행정지원체제 구축이다.



출처: 교육인적자원부 국제교육정보화국, <Study Korea 프로젝트 세부추진계획> (2005. 4)

[그림 Ⅱ-2] Study Korea 프로젝트 비전 및 기본방향

외국인 유학생 초청 사업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사업’ 확대·개편</li> <li>◆ 아시아 개도국 미래지도자 초청 학부유학 지원 사업</li> <li>◆ 개도국 청소년 초청 교육 사업</li> <li>◆ 해외 한국 기업을 통한 유학생 유치</li> </ul>
해외 네트워크 형성 및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외공관 및 한국교육원의 유학생 유치기능 강화</li> <li>◆ 교육관 증원 및 한국교육원 신설</li> </ul>
한국 유학 홍보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유학안내시스템 기능 및 관리 강화</li> <li>◆ 해외 유학박람회 개최방식 다변화 및 연계체제 구축</li> <li>◆ Emblem을 통한 홍보효과 제고</li> </ul>
외국인 유학생 수학 · 생활환경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어 전용강좌 개설 지원</li> <li>◆ 한국어 연수프로그램 개설 지원</li> <li>◆ 유학생의 기숙사 확충 및 수용률 제고</li> <li>◆ 대학별 외국인 유학생 데이터베이스 구축 권장</li> <li>◆ 외국인 유학생의 복지혜택 강화</li> </ul>
한국어 · 한국문화 보급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어능력시험 실시지역 확대</li> <li>◆ 외국 초·중등학교 한국어 채택 지원</li> <li>◆ KOSNET을 활용한 한국어 학습 콘텐츠 제공</li> <li>◆ 외국인을 위한 해외 한국어·한국문화반 개설 지원</li> <li>◆ 한국문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활용</li> </ul>
효율적 행정 지원체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입국 관리문제 공동 해결</li> <li>◆ 유학생 유치업무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li> <li>◆ 유학생 유치확대를 위한 자문위원회 구성</li> <li>◆ 외국인 유학생 취업 지원</li> </ul>

출처: 교육인적자원부 국제교육정보화국, <Study Korea 프로젝트 세부추진계획>(2005. 4)

[그림 Ⅱ-3] Study Korea 프로젝트: 중점과제 및 주요내용

스터디 코리아 프로젝트 추진 계획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프로젝트의 도입 배경에서 무역 외 수지의 적자개선이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다. 한국인 학생들이 해외 유학에 많은 비용을 쓰고 있어 유학·연수 수지 적자가 심각한 문제로 인식된 것이다. 유학생 유치정책의 필요성 및 정당성을 국민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무역외 수지 적자 개선)으로부터 찾은 것이다.

둘째, 아시아 지역에 대한 관심이 계획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다. 전체적인 비전을 동북아시아 중심국가로의 도약으로 삼았고, 세부 계획에도 아시아 개도국 미래 지도자 초청 학부유학 지원 사업, (아시아를 포함한) 개발도상국 청소년 초청 교육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을 확대하기 위해서 아시아 및 BRICs 국가의 초청 비중을 강화하며, 한류 열풍 등 친(親) 한국 정서가 고조되고 있는 베트남, 캄보디아 등 아시아 출신 유학생을 국비장학생 증원분의 50%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외국인 공무원 및 교수 초청 활성화 방안에서도 부존자원이 풍부하고 경제성장 가능성이 높은 BRICs 국가 및 개발도상국을 우선적인 대상국가로 명시하였다. 이는 유학생 유치를 통해 아시아 개발도상국과의 협력관계를 확대하고 ‘선진국과 개도국을 이어주는’ 한국의 역할과 영향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전략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셋째, 각 대학에 외국인 전용강좌 개설을 지원하고, 이를 대학 평가사업 및 예산 지원과 연동함으로써 유인하는 정책을 강화하였다. 또한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 연수프로그램을 대학에 설치하는 것을 지원하였다. 유학생 유치 정책은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글로벌화 정책과 결합되어 외국어 강좌 등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유인정책이 된 것으로 보인다.

넷째, 유학생의 출입국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증발급 절차를 개선하는 등 출입국 관리정책을 전반적으로 개선하였다. 출입국 절차의 완화 및 비자제도의 변화는 유학생, 특히 중인 유학생의 증가에 긴밀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sup>12)</sup>

12) 유학생 증가에 영향을 주는 출입국 관리제도의 변화들을 보면, 첫째, 유학생의

## 2) Study Korea 프로젝트 발전방안 (2008)

스터디 코리아 프로젝트는 2010년까지 유학생 5만 명 유치를 목표로 설정하였다. 그런데 이 목표가 2007년에 앞당겨 달성됨에 따라 2008년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스터디 코리아 발전방안”을 발표하였다.

이 “발전방안”은 그간의 정책 추진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외국인 유학생의 특정 국가 및 특정 지역에 대한 편중, 외국인 유학생 관리 소홀로 이탈자 및 불법 체류자의 증가, 유학생 기숙사 등 지원시설이 미흡하고 졸업 후 국내 취업이 저조하다는 점 등으로 평가하고, 이의 개선을 위한 정책들을 보장하고 있다.

“발전방안”에서는 이전의 “스터디 코리아 프로젝트”와 다른 정책 추진방향 및 특징이 나타난다. 무엇보다 정책 비전이 크게 달라졌다. ‘동북아 중심 국가’가 삭제되고 ‘국외 인적자원의 개발·활용’이 새로운 비전으로 설정되었다. 아울러 아시아 개도국 학생을 우선적으로 초빙하고 이 지역의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사업들은 모두 삭제되었다. 오히려 아시아 출신 학생들로 유학생이 편중되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유학생 유치정책을 국제사회 공헌 및 아시아 지역과의 협력관계와 연결하는 전략적 인식은 약화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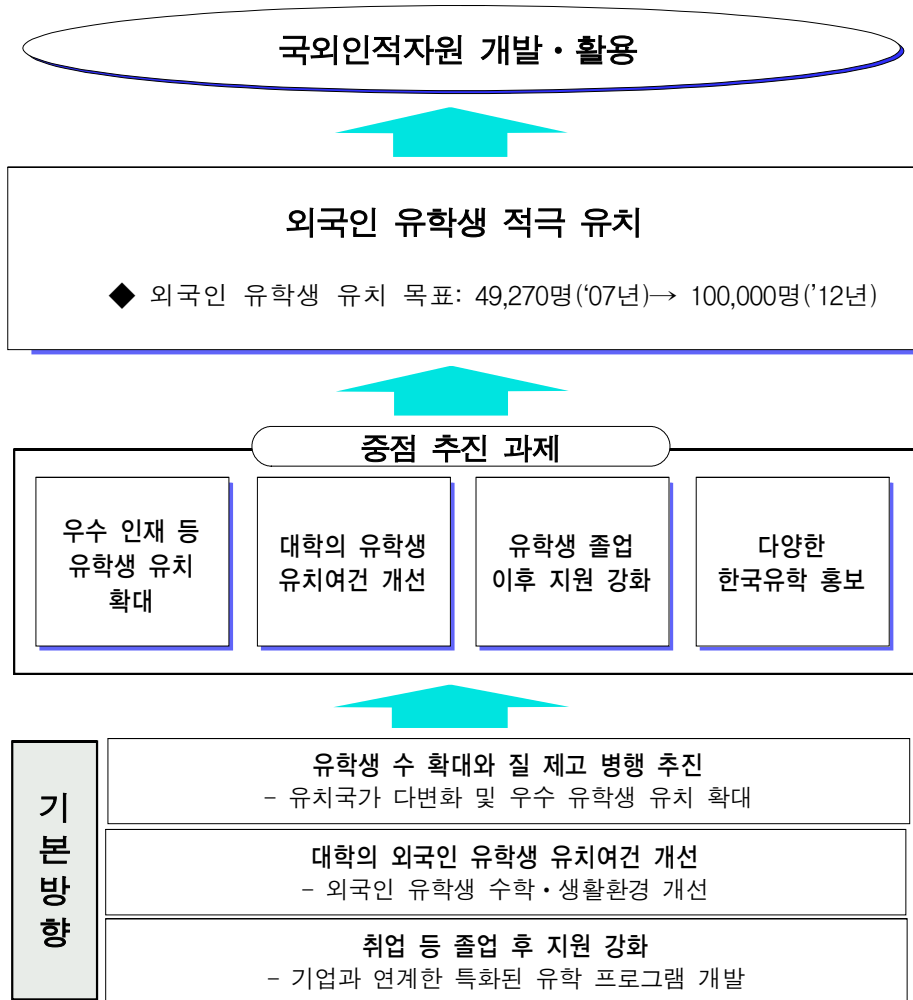
둘째, 유학생 취업 지원이 이전보다 강조되고 있다. 유학생이 학업을 마칠 시점에서 졸업 이후의 진로 및 취업이 중요한 정책과제가 되는 것은 한 편으로 당연한 것인데, “발전방안”에서는 특히 대학과 기업이 연계하여 기업이 원하는 인력을 주문형으로 양성하는 방안을 강조하고 있다.

셋째, 유학생 유치 일변도에서 벗어나, 유학생이 귀국한 후의 추수지도를 강화하는 방안이 도입되었다. 국외 인적자원 DB 구축, 귀국자 재초청 연수 실시, 동문회 등 현지 네트워크 구축 지원 등이 계획에 포함되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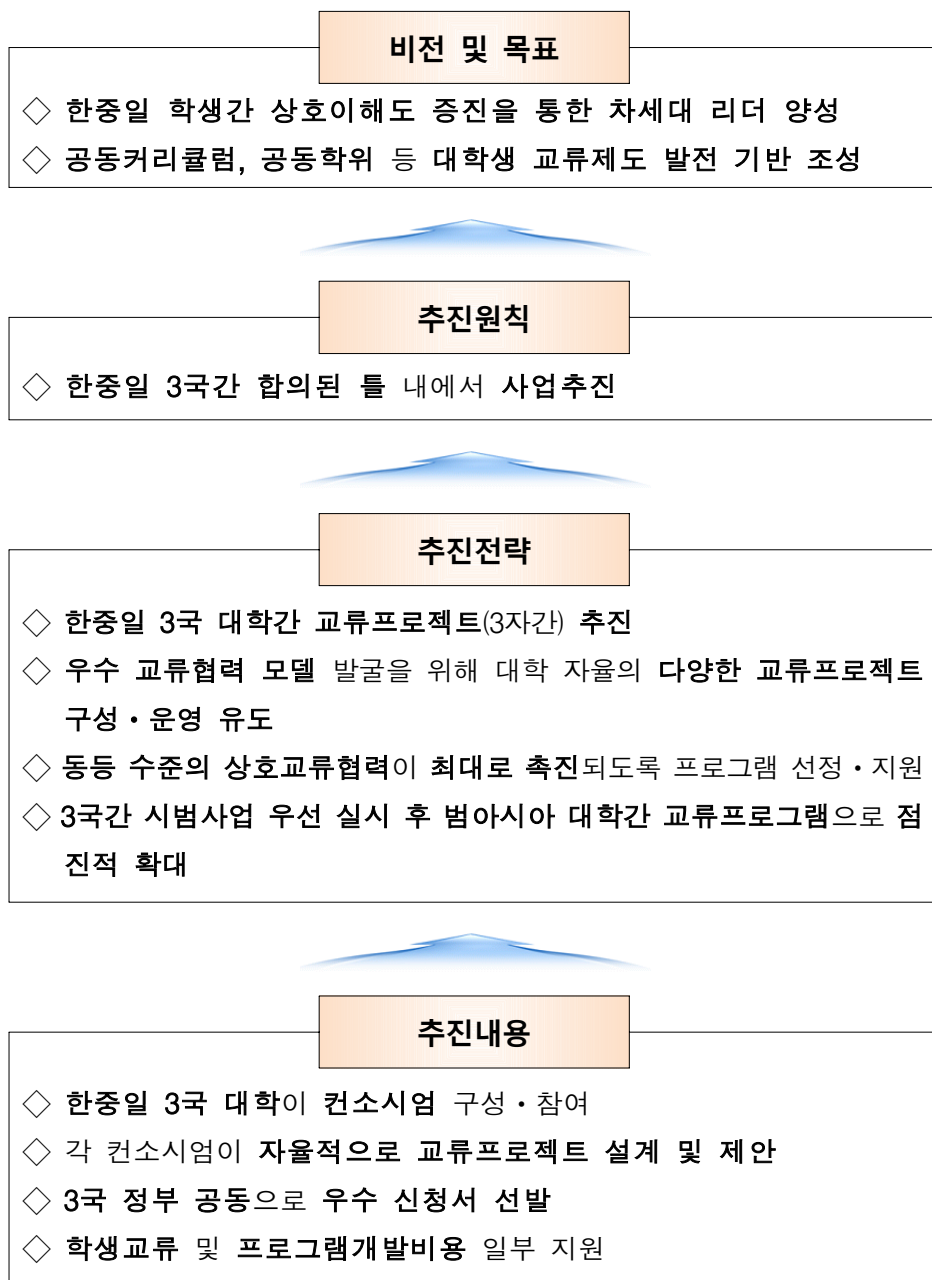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조치가 있다. 유학생(D-2) 비자 소지자는 학기 중 평일에는 주당 20시간, 공휴일 및 방학 중에는 시간 제한 없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다. 2008년 4월에는 연수(D-4) 비자 소지자에게도 아르바이트가 허용되었다. 둘째, 유학(D-2) 자격으로 1학기 이상 재학 중인 자의 부, 모, 배우자에 방문취업(H-2) 자격이 주어진다. 이 제도는 2007년 3월부터 도입되었다.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재외동포교육과, <스터디 코리아 프로젝트 발전방안>, 2008. 7)

[그림 Ⅱ-4] Study Korea 프로젝트 발전방안 비전 및 기본방향 (2008)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글로벌협력전략팀, <CAMPUS Asia 시범사업 추진계획>, 2011. 5)

[그림 II-5] 캠퍼스 아시아 추진방향

### 3) 캠퍼스 아시아 (2009): 아시아 대학생 교류 및 대학 간 협력활성화 정책

“캠퍼스 아시아(CAMPUS Asia: Collective Action for Mobility of University Students in Asia)”는 아시아 내부의 대학생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학 간 학생교환 프로그램으로서, 2009년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유럽에서 1987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에라스무스(ERASMUS: European Region Action Scheme for the Mobility of University Students)” 프로그램을 모델로 삼고 있다. 아시아 국가 간 이해 및 상호 연대감의 증진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기반으로 하여 ‘미래 아시아를 이끌 차세대 리더’를 양성한다는 목표 하에 추진되고 있다.

### 4) 외국인정책기본계획과 유학생 정책

유학생 정책은 교육 당국을 중심으로 하여 관련 부처들이 협의하여 중합시책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다. 스터디 코리아 프로젝트, 스터디 코리아 발전방안 등은 모두 이런 형식으로 발표 및 추진되어 왔다. 그런데 2007년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이 발표되고 이에 따라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이 수립되었으며, 외국인 유학생 정책도 이 계획 속의 항목으로 포함된다.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 편입된다고 하여 실무적인 정책 추진에서 큰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정책의 비전 및 방향성에서 새로운 성찰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즉, 외국인 유학생도 광범위한 체류 외국인 내의 한 집단이며, 전반적인 외국인 처우에 대한 기본 정책 및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에 대한 대응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유학생 정책의 위상을 통합적 시각에서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제1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은 크게 네 분야, 즉 적극적인 개방을 통한 국가 경쟁력강화, 질 높은 사회통합, 질서 있는 이민행정 구현, 외국인 인권 옹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부에서 발표한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sup>13)</sup>을 살펴보면, 유학생, 교육이주 관련정책은 두 분야에 분포해 있다.

13) 중앙정부의 시행계획만을 검토하였음.

〈표 Ⅱ-6〉 제1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에 나타난 유학생 관련 정책(2009~2011)

1. 적극적인 개방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1-1. 우수인재 유치를 통한 성장 동력 확보				
1-1-2. 국가 차원의 우수인재 유치 지원				
사업 내용	2009년	2010년	2011년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사업 확대 (교과부)	장학생 초청목표 1,550명	1,750명	2,010명	
유학생에 대한 취업지원 강화 (해외우수기술인력 유치지원사업) (지경부)	골드카드 발급 지원, 캠퍼스 설명회 및 중소규모 채용박람회	골드카드 발급 지원, 글로벌유학생 채용박람회 개최	골드카드 발급지원, 글로벌 유학생 채용박람회, 캠퍼스 채용설명회 개최, 석박사 유학생 기업 연수	
유학생 등에 대한 취업지원 강화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와 대학 연계한 유학생 직업상담 및 취업알선, 취업캠프, 잡스쿨, 적성검사 등.	좌동 (워크넷 기반, 비예산 사업)	(계획없음)	
3. 질서 있는 이민행정 구현				
3-1. 외국인의 체류질서 확립				
3-1-3. 합법체류 외국인의 체계적 관리				
사업 내용	2009년	2010년	2011년	
유학생 어학연수생 체계적 체류 관리 (법무부, 교과부)	유학생정보시스템 활성화, 대학별 지원체계 구축	좌동	대학의 유학생 관리실태 점검, 결과 공시 및 재정지원과 연계, 유학생 지원 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 수립	

표 (Ⅱ-9)에서 보듯이 한국의 유학생 지원 정책은 국가경쟁력 강화의 차원에서 인재 유치를 위한 정부 장학생 확대, 그리고 해외 우수인재 유치의 연장선상에서 유학생 취업박람회 개최를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유학생이 증가함에 따라 유학생의 이탈이나 불법 체류를 막기 위해 대학과 연계한 학생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그 외 외국인 유학생의 안전이나 인권 문제, 문화다양성이나 다문화적 통합과 관련된 정책에서는 유학생 문제가 전혀 거론되지 않고 있다.

#### 4. 소결

이 장에서는 한국으로 이입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증가 추세, 외국인 유학생 관련 국내 연구현황, 그리고 2005년 스터디 코리아 프로젝트 발표 이후 한국 정부의 외국인 유학생 관련 정책의 흐름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고등교육기관 재학생 중 외국인 유학생의 비율은 아직 이른바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이며 유학생 정책이 수립된 역사도 짧기 때문에 정책 전반에 대한 본격적인 평가는 시기상조인 면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터디 코리아 프로젝트 발전방안(2008년)에서는 일정한 정책방향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유학생 정책을 전반적인 외국인 정책 및 다문화 정책과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라는 새로운 문제들이 대두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정책 흐름을 살펴보면 한국의 유학생 정책은 교육수지의 적자 개선, 대학의 경쟁력 강화, 그리고 글로벌 인재유치 및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는 인재양성을 위한 방안으로 추진되어 왔다. 실제 정책의 핵심은 유학생 유치의 양적 증대를 위한 홍보 강화와 대학의 외국어 강좌 및 한국어 연수 프로그램 확대, 유학생의 입국 편의 증진을 위한 출입국 관리정책의 개선 등이다.

중장기적 시각에서는 유학 이후의 진로 및 한국 내 취업 전망, 국내 기업의 유학과 외국인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 유학생 귀국 후 본국-한국과의

관계에 대한 파급효과나 국가 이미지 제고 등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한 포괄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최근 들어 유학생의 졸업 후 취업을 지원하는 정책 방안들이 마련되고 있으나 통상적인 직업 박람회나 홍보행사의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에 비해 외국인 유학생의 사회통합 문제, 즉 인권이나 안전, 지역사회에서 내국인과의 교류 및 공존에 대해서는 정책적 관심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통상 유학생은 단기간 머무르다 본국으로 돌아갈 학생이므로 사회통합의 대상으로 간주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외국의 정책 사례를 보면 유학은 곧 장기 체류 및 영구 이주로 전환되는 하나의 단계가 될 수 있다. 또한 글로벌화가 진행될수록 영주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유학이나 취업을 목적으로 이동하는 외국인이 늘어날 것이고 이들과 내국인과의 공존 및 사회통합 문제가 새로운 과제로 대두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교육이주에 관한 분석 및 정책 논의가 좀 더 확대되기 위해서는 유학생의 증가가 이후에 초래할 다각적인 사회적 파급효과, 그리고 교육정책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관련 정책과의 연쇄효과 등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 유학생 유치 정책은 이들의 졸업 후 진로 및 노동시장에서의 외국인 노동력 문제, 그리고 유학생의 체류자격 및 취업자격 전환과 관련된 출입국 관리 정책(이민정책) 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또한 글로벌 시대의 청년 문화, 국경을 넘는 문화 교류와 문화적 혼종성이 함축하는 다문화 정책에의 영향, 외국인 유학생의 존재가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 등을 폭넓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유학생의 유입과 교육이주의 확대가 파급하는 다양한 사회적 변화와 새로운 정책 수요나 전망 등을 사례 분석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Ⅲ

일본의 교육이주 추이와  
정책 동향



## 1. 도입

### 1) 배경

일본은 비영어권 아시아 국가 중 대표적인 유학생 목적국이다. 이미 1983년부터 “유학생 10만인 계획”을 표방함으로써 유학생 지원 정책의 역사가 어느 정도 축적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정책의 방향성 및 의제의 변화과정을 엿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례이다.

일본의 과거 유학생 정책은 상호이해나 국제교류를 기본 이념으로 하는 이른바 ‘지적 국제공헌’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개발원조(ODA) 계획의 일환으로서 개발도상국 지원이라는 색채를 강하게 띠고 있었다. 그러나 2003년에 “유학생 10만인 계획”을 달성한 후에는 양적 측면에서 질적 측면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일정한 정책의 전환이 나타난다. 나아가 2007년 아베 총리 정부에서 발표한 “아시아 게이트웨이” 구상에서는 ‘아시아 고도인재 네트워크의 허브를 목표로 한 유학생 정책의 재구축’과 ‘대학의 세계화’가 중요항목으로 책정되고, 국제적인 인재를 유치하고 육성하는 사업을 전략적으로 전개한다는 방침이 정해졌다. 이는 세계적인 글로벌화 및 일본의 소자고령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고도인재 획득경쟁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음을 시사한다.

한편 2008년 후쿠다 정부가 발표한 “유학생 30만인 계획” 및 “아시아판 에라스무스 계획”<sup>14)</sup>등의 유학생 정책은 유학생 유치를 둘러싼 경쟁 및 대학의 국제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배경을 염두에 두고 본 장에서는 일본의 유학생 정책의 추이와 현황, 현재 당면하고 있는 과제 및 쟁점을 자세히 살펴보고, 나아가 한국의 교육이주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언하겠다.

### 2) 선행 연구 검토

일본에서의 유학생 연구는 크게 두 가지 흐름, 즉 1990년대 이후 아시아 역내(域内) 유학권의 형성과 관련하여 국제적인 시각에서 일본의 유학생 정

14) 한중일 정부가 공동 합의한 <CAMPUS Asia> 정책을 의미함.



책에 접근하는 연구, 그리고 일본 국내에 들어와 있는 유학생의 생활이나 취업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연구로 크게 대별할 수 있다. 우선, 아시아 역내 유학의 새로운 흐름 안에서 아시아 각국의 고등교육전략과 유학생 정책을 다루는 연구들을 살펴보겠다.

히라노(平野, 2008)는 아시아 지역에서 유학지도의 구조적 변화는 1990년대에 이미 시작되고 있었고, 이러한 유학생의 움직임은 보다 넓은 ‘사람들의 국제이동’의 일부로 생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최근 아시아에서 유학 목적국이 다각화된 것은 종래 엘리트층의 유학과는 다른 유학의 대중화, 곧 ‘보통’ 젊은이들이 유학의 대열에 참여한 것과 연관이 깊다. 아시아 국가들 사이의 국제적인 인적 이동이 활발해 짐으로써, 국가들 간의 집합체로서의 아시아 지역과는 별도의 차원에서 ‘아시아 사람들’로 구성되는 새로운 의미의 아시아 지역이 형성되기 시작했다고 히라노는 주목한다. 그리고 아시아 역내 유학의 확대는 개인 수준의 인적 이동과 더불어 정부 및 국가 수준의 변화가 함께 연동하는 중층적인 구조를 띄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아시아 내의 유학 흐름은 글로벌한 변화 및 아시아 지역의 연구를 중층적으로 고찰해야 하고, 그런 의미에서 아시아의 유학 연구는 글로벌한 지역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주장한다.

스기무라(杉村, 2008)는 유학생 정책이 무엇보다도 ‘고등교육의 글로벌화’라는 특성을 갖고 있다고 보고, 오늘날 아시아의 유학생 정책의 특징을 크게 3가지로 들고 있다. 첫째, 정치적·경제적 국가전략으로서의 유학생 정책, 둘째, 사비 유학 등 민간 섹터를 끌어들이는 유학의 대중화, 셋째, 트랜스내셔널(transnational) 프로그램의 보급과 유학형태의 다양화이다.

또한 스기무라는 아시아에서의 유학생 이동에서 다음 네 가지의 특징이 나타난다고 분석한다. 첫째, 1980년대 이후 오세아니아를 포함하여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구미 영어권으로의 유학이 양적으로 확대되었다. 둘째, 구미로의 유학생 이동 뿐 아니라 아시아 역내의 유학생 이동 루트가 새롭게 늘어남으로써 보다 다양한 이동의 양상이 나타났다. 셋째, 동아시아를 기점으로 하는 유학생의 이동이 활성화되었다. 넷째,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와 같은 새로운 유학생 이동의 거점이 부각되고 있다. 아시아의 유학생 이동의

구조는 국가의 정치·경제 전략과 더불어 개인들이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 유학을 선택하고 이동하는 중층적인 구조를 띠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학생 이동의 새로운 과제를 스기무라 교수는 세 가지로 들고 있다. 우선 ‘스텝 업(step-up) 형’의 유학생들이 거쳐 가는 중계거점이 되는 지역에서는 유학생이 늘어나더라도 직접적으로 인재 육성이나 인재 확보의 효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둘째,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 오고가는 과정에서의 사회통합의 과제가 제기된다. 셋째, 트랜스내셔널 프로그램의 급증에 따른 교육의 질과 성과의 수준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곧 질 보증의 과제이다.

아시아 지역 내에서 고등교육의 국제화는 지역 간 그리고 대학 간 제휴교육을 활성화시키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캠퍼스 아시아(CAMPUS Asia)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실시되면 이러한 흐름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이처럼 아시아 역내의 트랜스내셔널 프로그램의 과제 및 방향을 다루는 연구들이 다수 있다. 스기무라 교수는 역내 대학 간 제휴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새로운 여건형성 및 과제들이 제기된다고 본다. 즉, 학생이동에 따른 출입국 관리와 비자, 교육 프로그램 실시 언어의 결정, 교육 프로그램 내용 및 프로그램의 질 보증 문제, 프로그램 운영의 재정적 기반의 중요성, 프로그램 운영과 의사결정자(key person)의 리더십 등을 들 수 있다(杉村, 2009).

또한 니노미야(二宮, 2009)는 국경을 넘는 국제적인 대학 간 협력과 일본의 국제교류정책의 과제로서, 어떠한 인재를 양성할 것인가를 명확히 하고, 글로벌 시대에 있어서 국제 교육시장의 교육요구에 대응해야 하며, 국제 유학시장의 수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지역 간 및 대학 간 협력관계가 활발해 짐으로써 아시아 각국에서는 트랜스내셔널 고등교육이 전개되고 있는데, 트랜스내셔널 고등교육의 효용은 여기에 참여하는 당사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먼저 호스트 국가와 학생 입장에서 교육의 기회확대, 선택지 확대, 고등교육의 노하우나 인프라비용의 절감, 고용창출 및 지역 활성화, 외화유출 억제, 두뇌유출 억제, 이(異)문화 접촉으로 인한 갈등을 방지하고 글로벌화로 인한 대학의 도태 등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학위수여국의 입장에서는 라이선스(license)

수입 등 추가수익 창출, 고용창출, 고등교육 네트워크 형성, 고등교육 인프라 수출 등의 효용이 있다. 반면 트랜스내셔널 고등교육의 확대가 수반하는 부작용이나 과제로는 학위의 질 보증 문제, 학위의 가치하락, 호스트 국가 고등교육시장에 대한 압박, 호스트 국가 교육문화풍토와의 충돌을 들 수 있다(杉本 均, 2011).

이와 다른 연구의 흐름은 일본 내에서 수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의 실태, 대학의 지원 프로그램, 유학생 진로 의식 조사, 졸업 후 취업 상황 등을 다루는 연구들이다. 가미야(神谷, 2010: 143)는 일본에서 외국인 유학생 취업 실태를 연구하였다. 전체 유학생 중 약 85.3%가 일본에서 취업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기업이 유학생에게 요구하는 자질은 커뮤니케이션 능력, 기초학력, 협조성 등이며, 취직을 원하는 유학생들이 가장 불안으로 느끼는 문제들은 직장의 인간관계, 비자 수속, 근무지 문제 등이다. 그리고 일본에서 취업을 원하는 유학생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유학을 매력적인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대학·기업·행정, 곧 산-관-학이 연계하여 유학생의 일본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아사노(淺野, 2010: 26)는 국제화 거점 정비사업의 거점대학으로 채택된 리쓰메이칸(立命館) 대학이 2010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유학생 커리어 형성 지원 특별 프로그램’의 중간 보고를 발표한 바 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사전에 기업의 수요를 조사하여 외국인 유학생에게 요구되는 능력·자질을 ‘엣지 있는 강한 개성’과 일본인과 함께 일할 수 있는 ‘협조성’에 두고, 그 중 유학생에게 부족하기 쉬운 협조성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나아가 학생이 자신의 성장을 스스로 성찰하고, 개인의 독자적인 교육적·직업적 발달계획을 수립하고 수행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포트폴리오를 도입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토 등은 야마나시 대학에 재적하는 유학생을 대상으로 졸업 후의 진로에 관한 의식을 조사하였다(伊藤, 2009). 조사 대상은 2007년 야마나시 대학에 재학 중인 유학생 199명이며, 이들 중 70%가 공학 전공, 60%가 중국 및 대만 출신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졸업 후의 진로희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몇 년간 일한 후 귀국’을 희망하는 학생이 49명으로 가장 많고, 이들을 포

함하여 일본에서의 취직을 생각하고 있는 학생 수는 응답자 157명 중 103명이나 되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실제로 취직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있는 사람은 27.8%에 불과했다. 취직 활동에 관한 정보는 주로 웹사이트에서 얻고 있으며, 대학의 지원과 지도의 활용률은 떨어지지만 이에 대한 기대는 크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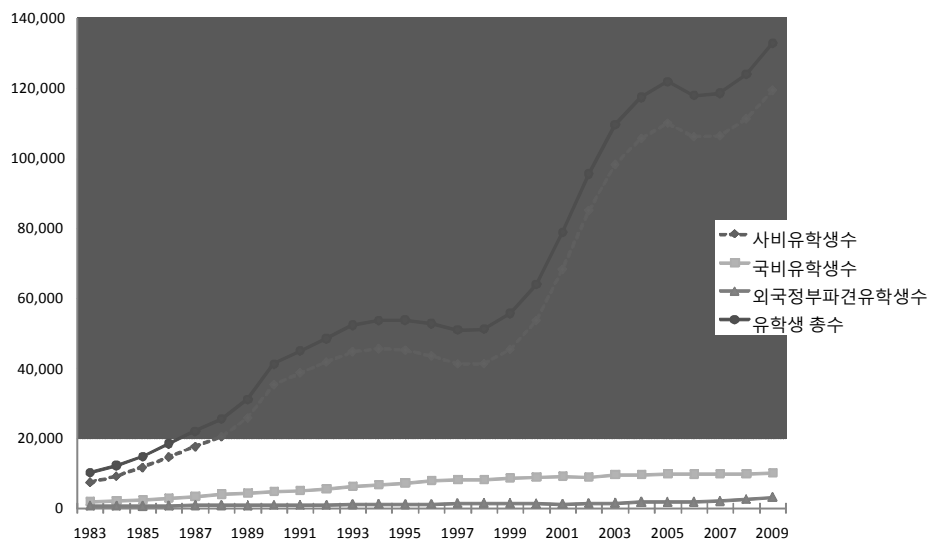
스기모토는 치바현의 외국인 유학생 취업 상황을 조사하여 발표했다(杉本, 2010). 그에 의하면, 1999년부터 2008년까지 치바현에 본사를 두는 기업들의 연간 외국인 유학생 채용 수는 60명에서 240명으로 4배나 증가하였다. 2008년에 치바현에 취업한 외국인 수는 497명인데 이 중 절반이 유학생으로 채워졌다.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외국인 유학생을 채용하면 ‘다른 사원과과의 커뮤니케이션’이나 ‘회사 생활에의 적응과 정착’ 등에서 불안한 요소가 있을 것이고, 이러한 우려가 유학생 취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한편, 실제로 일본 기업에 취직한 유학생은 대체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조사 결과도 있다. 외국인 유학생은 외국어 구사 능력과 대학 교육 등을 통해 다른 외국인과 일본인을 연계하는 다리 역할을 기대할 수 있으며, 유학생의 취직문제 해결은 외국인과 일본인의 다문화공생 문제 해결을 용이하게 하는 측면이 있을 것이라고 그는 지적하였다.

이상과 같이 일본에서는, 아시아 지역의 유학생 증가를 ‘고등교육의 글로벌화, 트랜스내셔널화’라는 시각에 입각하여 분석하고, 다가올 아시아 지역 및 대학 간의 교육연대에 일본이 어떻게 참여할 것인지를 일찍부터 논의해 왔다. 그리고 일본내에 고도의 외국인 인재를 유치하기 위하여 유학생의 취직에 관해서도 200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조사 및 연구가 행해지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유학생 연구의 방향성 및 성과는 같은 아시아 지역의 한국이 교육이주의 추이를 예상하고 정책을 세우고자 할 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일본의 교육이주의 추이부터 살펴보겠다.

## 2. 일본의 교육이주 추이

2009년 세계 주요 국가의 고등교육기관 재학생 중 유학생 비율을 살펴보면, 호주가 33.4%로 가장 높고 두 번째가 영국(27.0%), 독일과 프랑스가 각각 12.0%, 미국이 6.1%로 나타났다. 일본은 3.8%에 불과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적은 편이다. 그러나 국비 유학생 수를 보면 일본이 10,168명으로 프랑스(11,278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1983년에 “유학생 10만인 계획”을 발표한 이후 유학생 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1993년에 5만 명을 돌파했다. 그 후 일본 경제의 침체기인 1998년까지 유학생 수는 늘어나지 않고 정체하다가, 1999년부터 2003년까지 4년 동안 2배로 급증하여 정책의 목표치로 삼았던 10만 명을 달성했다. 여기에는 무엇보다 입국관리국의 유학비자 관련 정책 완화가 크게 기여했다.



주) 이 표에서 대학 및 전문학교 등의 외국인 재학생이란 일본의 대학, 대학원, 단기대학, 고등전문학교, 전문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으로서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별표 제 1에 규정된 <유학>재류자격에 의해 재류하는 자를 말함.

(자료: 문부과학성 고등교육국 학생·유학생과, 2010,<일본의 유학생 제도 개요>)

[그림 Ⅲ-1] 일본으로의 유학생 증가 추이 (1983~2009)

10만 명 계획 달성 후에는 ‘양에서 질로의 전환’을 주장하며 비자정책을 강화했기 때문에 유학생 수는 다시 정체기로 들어섰다. 그러나 2008년에 “유학생 30만인 계획”을 발표한 것을 계기로 다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Ⅲ-1)에서 보듯이 유학생 수는 글로벌 경제위기의 영향을 받은 2006~2007년 동안 잠시 지체하였다가 다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2010년 현재 유학생은 141,774명이며, 2020년까지 유학생 30만 명을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표 Ⅲ-1〉 전공별 유학생 수 (2010)

전공 분류	사회 과학	인문학	공학	자연 과학	예술	기타	합계
학생 수	54,668	33,657	22,567	5,106	4,604	21,172	141,774
%	38.6	23.7	15.9	3.6	3.2	14.9	100

(자료: 문부과학성 고등교육국 학생·유학생과, 2010, <일본의 유학생 제도 개요>)

〈표 Ⅲ-2〉 출신국 별 유학생 수 (2010)

출신국	중국	한국	대만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기타	합계
학생 수	86,173	20,202	5,297	3,597	2,465	2,429	21,611	141,774
%	60.8	14.2	3.7	2.5	1.7	1.7	15.2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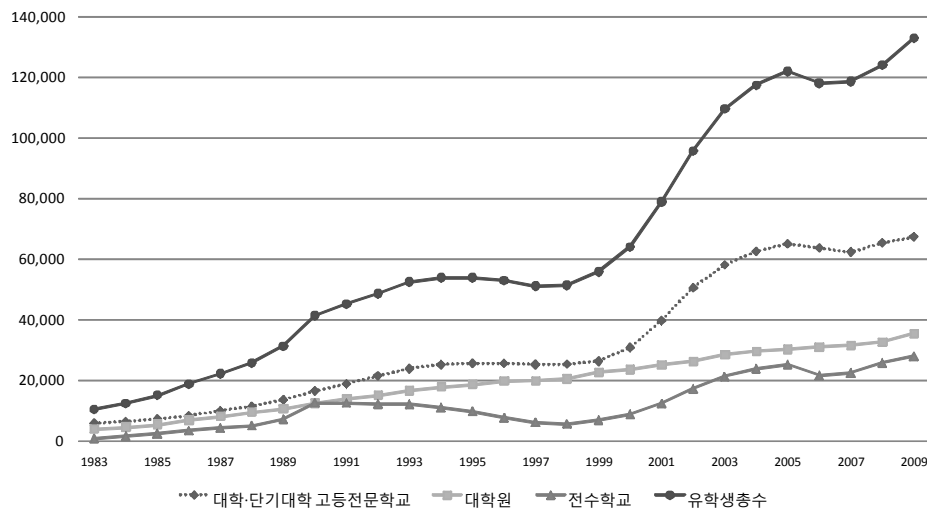
(자료: 문부과학성 고등교육국 학생·유학생과, 2010, <일본의 유학생 제도 개요>)

유학생의 출신지역은 아시아가 90% 이상이며 특히 중국에 압도적으로 편중되어 있다. 2010년의 통계에 따르면 중국 출신 학생이 60.8%, 한국이 14.2%로 양국 학생이 유학생의 대다수를 구성하고 있다. 전공별로는 사회과학이 38.6%로 가장 많으며 인문학 23.7%, 공학 15.9%, 자연과학 3.6% 등의 순이다.

재학단계별 유학생 수를 보면, 학부생이 48.5%, 대학원이 26.7%, 전수학교가 21.0%이다. 그러나 국비 장학생의 경우에는 대학원이 79.2%로 가장 많

으며 학부생은 15.5%이다. 2000년대 초반부터 학부·단기대학·고등전문학교, 그리고 전수학교에 재학하는 유학생 수가 배증하고 있으며, 이들의 증가가 2003년 10만인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의 유학생 분포를 보면, 국립대학이 24.3%, 공립이 2.1%, 그리고 사립대학이 73.5%이다. 즉, 외국인 유학생의 3/4이 사립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다. 국립대의 경우 대학원생이 학부생보다 더 많은 반면, 사립대에서는 학부재학생이 반 이상이며 그 다음은 전수학교 재학생이다. 지방별 분포를 보면, 관동지역이 거의 50%를 차지하고, 긴키 지역 17.6%, 규슈 지역이 11.5%, 중부 지역이 11.1%를 차지하여, 반수 이상이 관동지역에 몰려있다. 그 중에서도 2대 도시인 도쿄에 42,371명, 오사카에 10,289명이 재학하고 있다. 유학생들의 학비 재원을 기준으로 하면 90% 이상이 사비 유학생이다. 일본정부 장학금을 받고 있는 학생은 7.3%, 외국 정부 장학생은 2.5%로 나타난다.



(자료: 문부과학성 고등교육국 학생·유학생과, 2010, <일본의 유학생 제도 개요>)

[그림 Ⅲ-2] 일본 내 재학단계별 유학생의 시계열적 증가 추이(1983~2009)

〈표 Ⅲ-3〉 국공립·사립별/ 대학 단계별 재학생 수

	학부	대학원	단기대학	고등전문학교	전수학교	준비교육과정	합계
국립	9,907 15.4%	21,884 61.8%	0 0.0%	472 84.7%	0 0.00%	0 0.0%	32,263 24.3%
공립	1,313 2.0%	1,493 4.2%	5 0.2%	0 0.0%	8 0.03%	0 0.0%	2,819 2.1%
사립	53,107 82.6%	12,028 34.0%	2,219 99.8%	85 15.3%	27,906 99.97%	2,293 100.0%	97,638 73.6%
합계	64,327 100.0%	35,405 100.0%	2,224 100.0%	557 100.0%	27,914 100.0%	2,293 100.0%	132,720 100.0%

(자료: 문부과학성 고등교육국 학생·유학생과, 2010, <일본의 유학생 제도 개요>)

〈표 Ⅲ-4〉 교육비 재원에 따른 유학생 수(2010)

구분	사비 유학	일본정부 장학금	외국정부 장학금	합계
학생 수	127,920	10,349	3,505	141,774
%	90.2	7.3	2.5	100

(자료: 문부과학성 고등교육국 학생·유학생과, 2010, <일본의 유학생 제도 개요>)

2008년의 유학생 학위수여상황을 보면 박사학위 수여자는 2,445명, 석사학위 수여자는 7,252명이고, 각 과정 입학자 중 표준수업 기간(박사 3년, 석사 2년) 내에 학위를 받은 비율은 박사가 52.5%이고, 석사가 88.2%이다. 그리고 2008년에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의 졸업 후 진로를 보면 약 25% 정도가 일본 내에서 취직을 하며 일본 내에서 진학하는 학생은 38% 정도이다. 졸업 후 일본에 계속 체류하는 비율이 75%를 훨씬 넘어서고 있다. 반면 모국으로 돌아가는 경우는 23.2%로 나타났다.



〈표 Ⅲ-5〉 2008년 외국인 유학생 학위수여 상황 조사표

전공분야	박사과정		석사과정	
	2008년 학위수여수 (人)	표준수업기간내 학위수여상황(%)	2008년 학위수여수 (人)	표준수업기간내 학위수여상황(%)
인문과학	108	14.1	644	79.8
사회과학	206	28.6	2,513	87.7
이학	91	60.6	103	90.2
공학	673	61.0	1,348	92.0
농학	327	68.3	320	93.7
보건	376	74.1	121	93.8
가정	4	0.0	22	91.7
교육	23	11.1	420	83.1
예술	29	44.2	137	93.6
그 외	608	48.7	1,614	88.4
합계	2,445	52.5	7,252	88.2

(자료: 문부과학성 고등교육국 학생·유학생과, 2010, &lt;일본의 유학생 제도 개요&g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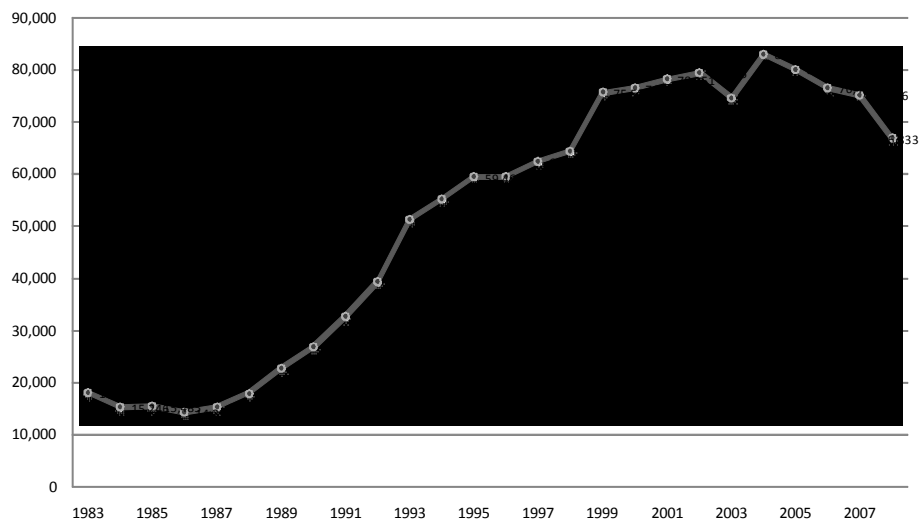
〈표 Ⅲ-6〉 졸업(수료) 후 외국인 유학생 진로상황(2008)

지역	진로				불분명	졸업·수료생 총수
	취직	진학	기타	소계		
일본국내	8,736 (25.3)	13,388 (38.7)	3,998 (11.6)	26,122 (75.6)	1,713	36,271
출신국가	2,813 (8.1)	346 (1.0)	4,860 (14.1)	8,019 (23.2)		
이외 지역	122 (0.4)	170 (0.5)	125 (0.4)	417 (1.2)		
합계				34,558 (100.0)		

(자료: 문부과학성 고등교육국 학생·유학생과, 2010, &lt;일본의 유학생 제도 개요&gt;)

한편, 일본으로 들어오는 외국인 유학생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외국으로 유학을 나가는 일본인은 2005년 이후로 계속 감소 추세이다. 2007년은 75,156명이었고 2008년은 66,833명이다. 7만 명 이하로 감소한 것은 1999년

이후 처음이다. 일본인이 유학하는 지역은 북미가 제일 많고, 아시아와 유럽이 뒤를 잇는다. 나라별로 보면, 66,833명 중에 미국이 29,264명이고 중국이 16,733명이다. 해외로 유학하는 일본인은 학부학생이 대학원 학생보다 거의 3배가 많다.



(자료출처: 유네스코 문화통계연감, OECD 『Education at a Glance』, IIE 『Open Doors』, 중국교육부, 대만교육부)

[그림 Ⅲ-3] 일본에서 해외로 나간 유학생의 추이 (1983~2008)

### 3. 일본의 유학생 지원 정책 : 배경 및 형성과정

#### 1) 유학생 10만인 계획 : 국제공헌과 개발원조

1983년 나카소네 일본 총리가 “유학생 10만인 계획” 계획을 발표하면서 일본의 적극적인 유학생 정책이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당시 미국, 영국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해 일본에는 외국인 유학생의 수가 매우 적었고, 일본의 경제적 성공에 비해 취약한 문화적, 학문적 영향력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이 대두하였다.

10만인 계획의 이념은 한마디로 ‘원조 모델(aid approach)’이라고 할 수 있다(Ota, 2003). 개발도상국 출신의 유학생이 일본 사회와 문화를 폭넓게 배우고 이해한 후 본국에 돌아가 일본에 우호적인 지도자가 된다면 일본의 국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이 기본 인식이다. 문부성에서는 외국인 학생을 ‘미래에서 온 대사관’으로 칭하며 해외 국가의 인재 양성에 기여하는 동시에 일본의 안전 보장과 평화를 유지하고, 사회에서의 지적 영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여 ‘국제사회에 대한 지적 공헌’이라는 정책의 구체적인 실행방향을 제시하였다(이기정 외, 2009: 55).

이 계획이 실행되자 1만 명 정도였던 유학생이 급증하여 10년 후인 1993년에는 5만 명을 넘어섰다. 그런데 이러한 성과는 법무성 입국관리국의 외국인 학생 아르바이트 해금<sup>15)</sup>, 일본어 교육기관의 난립 및 일본어 학교에 의한 입학허가서 남발 등 제도적 허점으로 인한 문제들을 수반하는 것이었다. 어학연수를 목적으로 일본어학교에 입학하는 취학생이 급증하였으나 불법체류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1990년부터는 외국인 학생에 대한 재류자격 심사를 강화하고 출입국 관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고 이는 일본 버블경제의 붕괴와 맞물려 1994년~99년까지 유학생 수가 정체하였다(이기정 외 2009: 56).

15) 일본의 유학생 정책이 성공한 데에는 아르바이트 해금 조치가 큰 기여를 하였다. 본 연구진이 면담한 오타 히로시 교수(히토츠바시 대학, 교육학)에 따르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유학을 할 수 있는 모델을 일본이 처음으로 만들었다(주 20시간 아르바이트). 영국, 호주 등은 일본의 모델을 모방하여 유학생에게 아르바이트를 허용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유학생은 단순노동자 이민이 금지되어 있는 일본에서 유연한 저임금 시간제 노동력으로 기능하고 있다. (2011. 8. 30 면담)

### 유학생 10만인 계획

: 84년 유학생 문제 연구조사 합동위원회가 제시한 정책 방향(요약)<sup>16)</sup>

#### <기본 전망>

- 비영어권 국가이자 규모가 일본과 유사한 프랑스를 모델로 삼아 21세기 초두까지 당시의 프랑스의 유학생 수인 10만 명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 1992년까지를 전기, 일본의 18세 인구가 감소경향으로 바뀌는 1993년 이후를 후기로 하고, 전기에는 유학생 수용 기반의 정비에, 후기에는 유치의 증가에 중점을 둔다.
- 국비유학생과 사비유학생의 비율은 1:9 정도로 하며, 국비유학생은 사비유학생을 확대하는 견인력의 역할을 하도록 한다.

#### <기본 정책>

##### 1. 대학 등에 있어서 유치태세의 정비

###### (1) 교육지도

- ① 유학생에 대한 교육지도체제의 충실
- ② 유학생의 학습에 배려한 코스 등의 확충
- ③ 유학생을 위한 입학선발 사업의 해외 실시 (일본 입국 전 입학자 선정)

###### (2) 유학생 상담과 유치 후의 케어 업무

- ① 유학생 상담 등을 위한 체제의 정비
- ② 일본국제교육협회의 역할 강화
- ③ 대학의 사무조직 정비 및 강화 등

##### 2. 유학생을 위한 일본어 교육(국내외에 있어서 일본어 교육의 추진)

##### 3. 유학생을 위한 기숙사의 확보

: 유학생 40%의 기숙사 수용을 목표로 함

- ① 대학의 유학생 기숙사 및 일반 학생 기숙사의 정비
- ② 민간 등에 의한 유학생 기숙사 정비 등

##### 4. 민간 활동 등의 추진

##### 5. 귀국유학생에 대한 여러 방책

- (1) 귀국 유학생의 활동에 대한 지원의 강화
- (2) 귀국 유학생에 대한 여러 사업의 강화

16) 일본 문부과학성 홈페이지 ([http://www.mext.go.jp/a\\_menu/01\\_f.htm](http://www.mext.go.jp/a_menu/01_f.htm), [http://www.mext.go.jp/b\\_menu/shingi/chukyo/chukyo7/](http://www.mext.go.jp/b_menu/shingi/chukyo/chukyo7/)) 검색일: 2011. 9. 30.

이후 일본 유학생 수는 경제 상황과 정부 정책의 세부적인 변화에 따라 정체 및 증가를 반복하며, 2003년에 10만 명을 넘어섬으로써 10만인 계획의 목표를 달성하였다. 일단 목표가 달성되자 유학생 비자 관리가 다시 강화되었고 이때부터 2008년까지는 유학생 정책의 공백기라고 할 수 있다. 1983년부터 유학생 30만인 계획이 도입되기 직전인 2007년까지 변화를 총괄해서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유학생이 11배로 늘었으며 국비유학생이 5배 증가한 데 비해 사비 유학생이 14배나 크게 급증하였다. 유학생 지원 예산은 80억 엔에서 400억 엔으로 늘었다.

〈표 Ⅲ-7〉 유학생 10만인 계획의 총괄 : 1983~2007

	1983년	2007년	비고
유학생 수	10,428	118,498	11배
국비	2,082	10,020	5배
사비	7,483	106,297	14배
예산	80억엔	400억엔	5배 (2001년 558억엔-최고액)

(자료: 横田雅弘 等, 「留學生交流の將來予測に關する調査研究」, 2007)

## 2) 아시아 게이트웨이 구상

2006년 당시 총리였던 아베 신조는 국회 연설에서 ‘활력에 가득찬 개방된 경제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 ‘일본이 아시아와 세계의 징검다리가 되는 아시아 게이트웨이 구상을 추진’한다고 선언하였다. 이후 네모토 경제재정담당 총리보좌관 하에 아시아 게이트웨이 전략회의가 조직되었고, 2007년 5월16일에 “아시아 게이트웨이 구상”이 공표되었다(내각부 2007, 이하 ‘구상’이라 한다).

이에 따르면, 구상의 목적은 ①아시아의 성장과 활력을 일본에 도입하여 새로운 ‘창조와 성장’을 실현, ②아시아의 발전과 지역질서에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한다, ③매력 있고, 신뢰받고, 존경받는 ‘아름다운 나라’를 목표로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구상의 기본 이념은 ①개방적이고 매력 있는 일본을 만든다(방문하고 싶은, 배우고 싶은, 일하고 싶은, 살고 싶은 나라), ②열린 아시아를 함께 만든다(경제를 중핵으로 개방적인 지역질서의 유지, 심화), ③서로를 존중하고 공생한다(다양성을 전제로 상호 이해, 상호 신뢰의 관계를 구축)는 것이다.

아시아 게이트웨이 구상은 글로벌화라는 세계적인 추세 하에서 일본이 나아가야 할 미래상을 나타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구상은 ‘전략적’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최중요 항목 10개와 중점 7분야를 지정하였는데, 최중요 항목 중 세 번째가 ‘아시아 고도인재 네트워크의 허브를 목표로 한 유학생 정책의 재구축’이고, 그리고 네 번째가 ‘세계에 열린 대학 만들기’이다. 그리고 중점 7개 분야 중 두 번째가 국제인재 유치·육성전략으로 되어 있다.

최중요 항목 중 세 번째인 아시아의 고도 인재 네트워크의 허브 구축은 일본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실현하고 소프트 파워를 강화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언급된다. 그 가운데서도 유학생 교류의 확대는 그러한 인재네트워크의 구축을 향한 미래에의 커다란 투자이고, 산업계나 지역사회를 포함하여, 외국인에게 매력 있는 환경을 사회전체에 구축해 가는 시금석이라고 설정된다. “유학생 10만인 계획”으로부터 25년이 지난 시점에서 새로운 유학생 전략 책정을 향한 기본 방침으로 ①유학생 유치의 일정한 세어 확보, ②일본인의 해외학습 기회의 확대, ③진로 방향(career path)를 고려한 산학협력의 추진, ④해외현지 기관의 기능 강화, ⑤일본문화의 매력을 홍보함으로써 유학생 유치 증가, ⑥국비 외국인 유학생 제도의 강화, ⑦단기유학생 유치 촉진 등이 포함되었다.

최중요 항목 중 네번째인 ‘세계로 열린 대학 만들기’는 일본의 대학을 아시아 및 세계의 학문적 거점으로 육성하는 것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 각 대학이 국제교류 확대, 해외대학과의 연대를 촉진하고 대학의 국제화를 진행해나가는 것이 강조된다. 이러한 관점 하에서 ①대학의 국제화 상황에 관한 조사의 실시·공표, ②대학의 국제화를 향한 경쟁적인 자금 배분의 확대, ③각 대학 및 제3자 기관에 의한 대학의 국제화 평가를 충실히 한다는 것

이다.

그리고, 중점 7 분야에서 두 번째 항목인 ‘국제인재 유치·육성 전략’에서는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고도인재획득 경쟁에서 일본이 뒤처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국제 인재의 수입·육성은 이노베이션을 낳는 가장 중요한 원천이며 국제화에 뒤처진 일본의 대학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언급된다. 이를 위한 정책으로 고도인재에 대한 재류(체류)자격제도 등의 재검토, 우수한 외국인 연구자의 유치 촉진을 통한 연구환경의 국제화, 생활자로서의 외국인에 대한 지원의 확충, 외국인 재류관리제도의 재검토, 기업의 글로벌 인재 경영의 촉진, 아시아의 산업인재의 육성, 외국인 연수·기능실습제도의 재검토 등을 들고 있다.

아시아 게이트웨이 구상에 나타나는 유학생 정책·전략에서 보이는 특색은 첫째, 국가전략으로서 유학생 정책을 위치시키고 있다는 것, 둘째, 유학생 유치 목표에 있어서 ‘세어’론을 도입하고 있는 점, 셋째, ‘단기교류형 유학’을 기축으로 하는 유학생 정책·전략을 제언하고 있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구상은 이후 후쿠다 정부가 발표되는 “유학생 30만인 계획”과 아시아판 에라스무스 계획에도 영향을 끼쳤다고 평가 할 수 있다. (二宮, 2008)

### 3) 유학생 30만인 계획 : 일본 사회의 글로벌화 전략

2008년 발표된 유학생 30만인 계획은 급속하게 진행되는 글로벌라이제이션에 대한 대응, 그리고 ‘소자고령화’로 표현되는 인구구조의 변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일본사회 글로벌전략 전개의 일환으로서 30만인 계획의 골자가 발표되어, 2020년까지 유학생 30만인을 유치한다는 구상이 나왔다. 사회경제가 글로벌화하는 가운데 유학생 정책도 종래의 ‘국제공헌’을 위한 유학생 유치에서 고도인재 획득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시야에 넣은 ‘국제전략’으로서의 유학생 유치라는 새로운 구상이 나온 것이다. 전 세계에 개방된 일본사회를 만들기 위한 ‘아시아 게이트웨이’로써 유학생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최근 고등교육의 글로벌화로 국제적인 학생이동이 늘어나고 싱가포르,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의 유학생 유치가 활발해지자 일본 정부에서도 새로운 대응책을 마련한 측면도 있다.

2003년 유학생 수가 10만을 넘어서면서 일정한 성과를 나타낸 후 새로운 과제로 부상한 것이 유학생의 졸업 후 진로에 관한 것이었다. 일본에서의 취직을 희망하는 유학생이 늘었지만 10만인 계획은 유학생 유치에 대한 시책은 적극적이었지만, 졸업 후의 진로에 관해서는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았다. 이와 달리 30만인 계획은 일본유학의 입구(모집, 입시, 입국, 입학까지의 과정)에서 실제 유학기간 중의 일본사회로의 적응과 지원, 일본 유학의 출구(일본에서의 취직이나 귀국 등 졸업·수료 후의 진로)에 이르는 지원을 아울러서 강화하고 있다. 개발원조나 국제협력 차원의 유학생 정책에서 유학생이 교육과정을 마친 후 본국으로 귀국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것과 달리, 일본 문화를 잘 이해하는 외국인 유학생이 일본 기업 등에 취업하여 ‘글로벌 인재’로 활동해줄 것을 기대하게 된 것이다. 즉, 저출산 고령화로 심각한 노동력 감소를 걱정하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인재를 유치·육성하여 일본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겠다는 목적을 분명히 하였다(이기정 외, 2009: 61). 또한 청소년 인구의 감소로 대학의 학생 모집이 어려워진 점도 각 대학이 유학생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2010년에는 법정 학생정원을 채우지 못한 사립대학이 38.1%였고 2년제 대학은 이러한 비율이 62.5%에 이르렀으며, 지방대학에서 문제가 더 심각하였다(Ota, 2011).

이러한 변화는 유학생 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이 ‘원조 및 국제협력 접근’에서 ‘숙련 이주 접근(skilled migration approach)’ 그리고 ‘수익 창출 접근(revenue-generating approach)’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시사한다(Ota, 2011). 핵심적인 추진방향은 대학의 글로벌화와 관련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 간의 종합적인 협력체계 구축이다. 2008년 7월에 확정된 「교육진흥기본계획」에서는, 고등교육기관의 국제화와 유학생 교류 추진을 위하여 중앙정부의 6개성(문부과학, 외무, 법무, 후생노동, 경제산업, 국토교통)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유학생이 졸업 후 일본사회에 정착해서 활약하기 위해서는 특히 산-학-관이 연계하여 취직지원이나 유치, 체류기간의 갱신 등 사회전체에서 유학생 시책을 추진하는 것을 강조하였다. 구체적으로 대학 내에 전담조직 설치 등을 통한 유학생 취직 지원의 대처 강화, 인턴쉽과 잡 카드 등의 활



용, 취직상담창구 확충 등이 있다. 30만인 계획을 구성하는 5개 사업 내용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문부과학성, 2010).

- 일본유학 홍보 : 적극적인 유학정보 발신, 유학 상담 강화, 해외 일본어 교육 충실화, 일본 유학을 유치하기 위한 대학 해외거점- 재외공관 - 독립행정법인 해외사무소 연계.
- 입시, 입학, 입국 관리 개선 : 대학의 정보발신 강화, 일본에 입국하기 전에 각종 수속 및 입학허가 가능하도록 추진, 입국심사 간소화.
- 대학의 글로벌화 추진 : 국제화 거점대학(글로벌 30) 중점 육성, 영어로 운영되는 강좌 및 코스 확대, 이중학위(double degree)와 단기유학 등의 추진, 외국인교수 확충 등 대학의 전문적인 조직체계 강화.
- 유학생 유치 환경 마련 : 외국인 유학생 기숙사 제공, 국비장학생 제도 개선, 지역과 기업 등과의 교류지원 추진, 국내 일본어교육 강화, 유학생의 생활 전반에 대한 지원 강화.
- 졸업 후 수용 프로그램 추진 : 산-학-관 협력하여 취업 지원, 졸업 후 재류 자격 변경 규정 등을 재검토, 유학생 귀국 후의 사후관리(follow-up) 충실화.

〈표 Ⅲ-8〉 2010년 유학생 관련 주요 예산 (문부과학성)

(단위: 백만엔)

정책 세부 항목		금액
해외에서의 정보제공 및 지원 일체화		609 ( 1.7%)
	일본유학 정보발신 기능 확충	315
	일본유학시험 실시	294
외국인 학생 수용환경 내실화		34,172 (96.1%)
	외국인 학생 기숙사 확보	1,109
	외국인 학생의 취업 지원 (취업박람회, 정보제공 등)	15
	외국인 학생 장학금 제도 확충	31,249
일본인 학생의 해외유학 추진		763 ( 2.2%)
합 계		35,544 (100.0%)

(출처: 문부과학성 고등교육국 학생 유학생과, 2010, <일본의 유학생제도 개요>)

## 4. 일본의 유학생 정책의 특징 및 주요 쟁점

### 1) 대학 글로벌화의 추진

대학의 글로벌화는 유학생 30만인 계획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이다. 과거 일본에 온 유학생은 일본어를 익히고 일본어 수업을 통해 학위를 취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런데 전세계적인 고등교육의 글로벌화와 국제적으로 이동하는 유학생의 증가, 아시아 각국의 유학생 유치경쟁 심화 등으로, 일본의 대학도 글로벌 기준에 맞는 운영을 하지 않을 경우 유학생을 유치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현실적인 인식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이다.

대학의 글로벌화를 추진하는 핵심 사업은 “국제화거점 정비사업(속칭 글로벌 30)”이다. 국제화거점 정비사업(대학의 국제화를 위한 네트워크 형성 추진사업)은, 유학생 30만인 계획의 달성을 목표로 유학생 유치 체제의 정비를 비롯한 대학의 국제화를 향한 노력을 실시하고, 유학생과 절차탁마하는 환경 속에서 국제적으로 활약할 수 있는 고도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9년에 거점대학으로 13개 대학을 선정하였다.<sup>17)</sup>

거점대학에서는, 영어를 이용한 수업만으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코스를 대폭적으로 증설하고, 유학생 유치를 위한 체제를 충실화하며, 일본어와 일본문화에 관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전략적인 국제연대를 추진하고, 7개국 8개 도시에 일본유학의 창구가 되는 ‘해외대학공동이용사무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이 사업의 핵심은 영어로만 진행되는 교육과정을 확대하고 외국인 교원을 확대함으로써 더 많은 유학생을 유치하고 장기적으로 영어권 대학과 경쟁할 수 있는 글로벌 역량을 양성하는데 있다.

17) 13개 거점대학은 다음과 같다. 東北大學、筑波大學、東京大學、名古屋大學、京都大學、大阪大學、九州大學、慶應義塾大學、上智大學、明治大學、早稻田大學、同志社大學、立命館大學.

### 글로벌 30 대학의 주요 사업<sup>18)</sup>

- (1) 영어 수업만으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과정의 대폭 증설  
: 영어 수업만으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과정을 2009년부터 학부 33과정, 대학원 124과정 개설함. 2009년 이전 개설된 과정을 포함하면 현재 13개 대학에서 약 300 과정 개설되어 있음.
- (2) 유학생 유치 제도의 충실화  
: 학습 및 학내외 여러 가지 수속에 대한 전문스텝의 지원, 일본어·일본문화 학습 기회 제공, 인턴십 프로그램으로 일본기업에서의 취직 체험의 장 제공 등, 유학생 지원 체제의 충실화를 기함. 그 외 국제화에 적극적인 대학의 직원을 대상으로 한 실무 연수, 어학능력 및 국제회의 개최 실무 능력향상 등의 기회를 제공함.
- (3) 전략적인 국제연대의 추진  
: 채택된 한 대학 당 2개국 이상의 해외사무소를 설치, 해외의 입학희망자가 현지에서 입학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학생 및 연구자 교류의 거점으로 운영함.
- (4) 일본유학 설명회의 개최  
: 채택된 13대학에서는 공동으로 해외의 우수한 고교생·대학생을 대상으로 일본유학 설명회를 개최함.
- (5) 산업계와의 제휴  
: 산업계와 협력 강화, 2010년 8월 2일 일본경제단체연합회와 협력하여 『제1회 글로벌30 산학 연대 포럼』을 개최함(약 400명 참가), 2011년에는 제 2차 산학연대포럼을 개최하여 산업계, 대학 등에서 412명이 참가함.
- (6) 지진 재해에의 대응  
: 채택된 13대학에서는, 동일본 대지진 및 원자력발전소 사고의 영향으로 유학생이 일본에 오는 것을 취소 또는 연기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대응하여, 외국인 유학생을 다시 불러오기 위한 시책 및 지진 재해의 대응을 마련함.

18) 글로벌 30에 채택된 13대학은 여기에 소개한 6가지 사업을 주로 추진하고 있다. 이하 6가지 사업 내용은 jump(글로벌30 채택대학 웹사이트)의 <글로벌30이란?>에 실려 있다. (<http://www.uni.international.mext.go.jp/ja-JP/>, 검색일 2011.11.30)

그런데 글로벌 경제위기, 일본정부의 재정적자, 지진 복구정책 등으로 인해 유학생 관련 예산들이 삭감되고 있다. 글로벌 30 사업은 원래 30개 거점 대학을 선정하여, 향후 5년간 매년 2~4억 엔의 중점적인 재정지원을 제공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2009년에 13개 대학을 선정한 이후 추가적인 예산이 배정되지 않아서 사실상 ‘글로벌 13’으로 축소된 상황이다. 또한 2007년부터 경제산업성과 문부과학성이 연계하여 아시아 우수 유학생의 일본기업 취업을 지원하고자 하였던 “아시아 인재자금” 역시 예산 부족으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집권당이 자민당에서 민주당으로 교체된 이후에도 유학생 30만인 계획은 큰 변화 없이 추진되고 있으나, 예산감축으로 인해 유학생 지원 사업 항목 간의 재조정(예를 들면 외국인 장학금과 일본학생 등록금 지원 간의 형평성 논란, 단기 연수 지원 사업 강화 등), 사업 규모의 축소 등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로 인해 전체적인 정책 추진 방향에 어떤 영향이 나타날 것인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일본사회가 글로벌화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한다. 일본의 이른바 명문대학은 정규 학위과정을 일본어 수업으로, 입학시험과 학사관리 등도 일본의 방식으로 운영해 왔는데, 이러한 일본중심적인 문화가 대학의 글로벌화나 유학생 확대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우려도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 대학의 글로벌화를 선도하고 있는 것은 전통적인 명문대학이 아니라 일부 사립대학들이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인들의 해외유학이 감소하는데 대해서도 일본 젊은이들의 ‘내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전문가들이 많았다. 단지 대학 뿐 아니라 일본사회 전반의 자기문화 중심성과 내향적 경향이 대학의 글로벌화 및 유학생 정책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주목된다.

## 2) 유학생의 일본 내 취업 지원

“유학생 30만인 계획”은 이전의 10만인 유치 계획과는 달리, 학업을 끝낸 유학생의 일본 내 취업 지원이라는 목표를 확실하게 내세우고 있다. 졸업생들이 일본사회에 정착해 활약하기 위해서 대학 등은 처음부터 산학관이 연

제한 취직지원과 수용, 체류기간의 재검토 등 사회 전체로서의 수용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① 대학 등의 전문적인 조직 설치 등을 통한 유학생의 취직지원 강화, ② 인턴십·잡카드의 활용·취직상담창구 확충 등 산학관이 연계한 취직지원이나 창업지원의 내실화, ③ 기업측의 의식개혁과 수용체제 정비를 촉진, ④ 취업 가능한 직종의 명시 등 체류자격의 명확화와 취업의 탄력화, 취직활동을 위한 체류기간의 연장 검토, ⑤ 귀국유학생 동창회의 조직화 지원, 활동 지원 등 귀국 후의 전(前)일본유학생 사후관리(follow-up) 내실화를 도모하여 전(前)일본유학생에게 일본의 이해자·지원자로서 활약해 주기 위한 인적 네트워크 유지·강화할 것 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산관학 연계의 대표적 사업이었던 “아시아 인재기금 구상”이 예산문제로 폐지되었고, 유학생의 취업 확대에 대해서는 일본 경제의 불황탓인지 아직까지는 일부 기업만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정도이며, 국민의 일반적인 동의를 끌어내지는 못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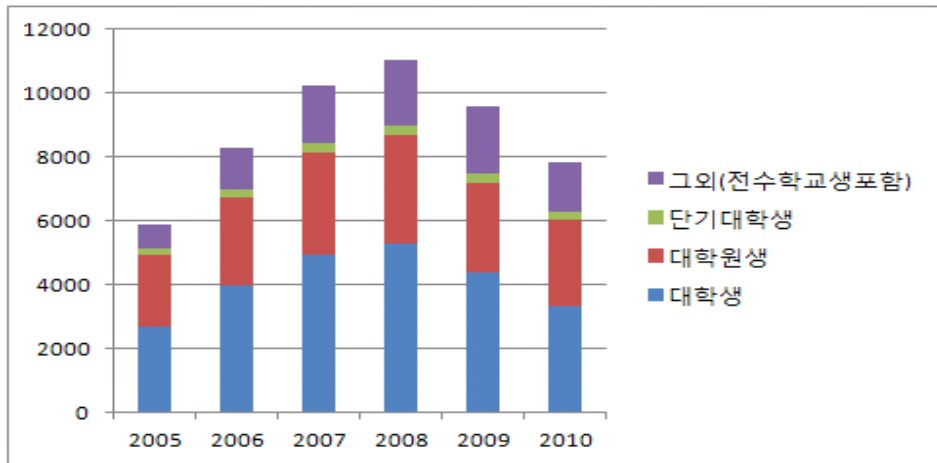
법무성 입국관리국에서 2011년에 발표한 유학생의 일본기업 취직 상황에 의하면, 2010년에 유학생이 일본에서의 취직을 목적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한 건수는 8,467명(전년대비 1,763명 감소)이고, 그 중 허가를 받은 수는 7,831명(전년대비 1,753명 감소)으로 전년에 비하여 감소했다. 허가율은 92.5%로 전년과 거의 같다. 국적·출신지별 허가 수 상위 5개국은 중국 4,874명, 한국 1,205명, 대만 279명, 네덜 141명이며 아시아 국가 출신자가 전체의 95.4%를 차지한다. 체류자격별 허가 수의 내역을 살펴보면, ‘인문·지식·국제업무’가 5,422명, ‘기술’이 1,390명으로, 이 두 가지 체류자격이 전체의 86.9%를 차지한다.

취직한 업종은, 비제조업이 6,093명(77.8%), 제조업이 1,738명(22.2%)이다. 취직의 주요한 직무내용은, ‘번역·통역’(3,247명), ‘판매·영업’(704명), ‘정보처리’(605명), ‘조사연구’(503명) 이다. 2010년에 일본기업 등에 취직을 목적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한 7,831명의 최종학력은, 대학졸이 3,131명, 대학원졸이 2,734명으로 양자가 전체의 77.2%를 차지한다. 유학생 취업은 2008년에 11,040명을 기록한 이후 3년 간 감소추세이다.

〈표 Ⅲ-9〉 최종학력별 재류자격 변경 허가 인원

일본에서의 학력	대학생	대학원생		단기대학생	전수학교생	그 외	합계
		석사	박사				
허가인원	3,313	2,051	683	215	1,391	178	7,831
		2,734					
구성비	42.3%	34.9%		2.7%	17.8%	2.3%	100.0%

(자료: 법무성 입국관리국 「유학생등의 일본 기업 취직 상황」, 2010)



(자료: 법무성 입국관리국 「유학생등의 일본 기업 취직 상황」, 2010)

[그림 Ⅲ-4] 최종학력별 재류자격 변경 허가 인원의 추이

### 3) 유학생의 일본사회 수용에 대한 관심 증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일본의 유학생 정책은 유학생 유치의 확대 뿐 아니라 교육과정을 마친 후 일본사회에의 취업 및 수용에 대한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 일차적으로 대학의 유학생 상담창구 및 오리엔테이션 등의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기숙사 시설 확충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주목할 것은 유학생을 ‘지역주민’, 즉 지역사회의 구성원인 동시에 외국에서 온 손님에 대한 배려라는 차원에서 지역주민과의 각종 교류사업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이다. 유학생 기숙사와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문화행사와 지역 문화유산 방문, 홈 스테이, 가정방문 확대 등이 있다. 지역에서 민관이 함께 협력하는 추진체계로서 2009년 현재 46개 지역에 유학생 교류추진회의가 구성되어 있다.

유학생 지원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일본학생지원기구(JASSO)<sup>19)</sup>에서는 민간재단인 나카지마 재단의 자금을 활용하여 매년 유학생과 일본인 주민 간의 상호이해를 촉진하는 각종 교류 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2011년에 선정된 과제는 33건으로 주로 대학이나 지역의 국제교류센터가 운영하는 일본의 사회·문화 체험이나 지역의 취직알선 사업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예를 들면, 나고야대학 유학생센터의 사업은 ‘일본조직 친숙해지기 학원’으로, 아르바이트를 통해 일본의 조직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재단법인 오사카부 국제교류재단은 유학생을 위한 ‘취직 매치포인트 사업’, 사이타마 대학에서는 산-관-학-민을 연계하는 ‘사이타마 다문화 공생 네트워크 모델’구축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유학생 취업관련 사업이 최근 늘어나고 있는 것은, 일본의 지방 중소기업체의 인력부족으로 인하여 유학생 유치를 활성화하려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이다.

---

19) 일본학생지원기구(JASSO)는, 문부과학성 소관의 독립행정법인으로, 주로 장학금 대여 사업, 학생 생활 지원 사업, 유학생 지원 사업을 행하고 있다. 즉, 일본학생과 유학생 모두 이 기간에서 일괄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 JASSO의 유학생 지역교류사업 지원 사례 (1)

국제이해교육 촉진 및 이바라키현 유학생 친선대사 교류 사업(2010)<sup>20)</sup>

- 주관단체: 재단법인 이바라키현 국제교류협회
- 참여자: 외국인 유학생 117명, 지역주민·기업 등 10,273명, 합계 10,390명
- 프로그램 내용 :
  1. 이바라키현 유학생 친선대사 임명식
  2. 국제이해교육 강사 파견사업(통칭 월드 캐러번) : 현내 각지의 초·중·고등학교에서 개최
  3. 퀘스트(quest) 이바라키 유학생 연수 : 이바라키현 도예미술관, 가사마이나리신사, 미쓰비시원자연료 주식회사 등 방문
  4. 일본발/세계발 청년의 메시지 유학생 심포지엄
  5. 국제이해교육연수회
- 사업 내용: 이바라키 현 내의 9개 관련 단체에서 협의회를 조직하여 실시함. 현내의 유학생을 친선대사로 임명하고, 학교(초·중·고교)나 평생학습 기관, 현내의 다양한 단체가 실시하는 국제이해 관련 이벤트나 강좌 등에 파견함으로써, 현민과 유학생의 지역에서의 교류를 꾀하는 동시에, 유학생의 일본체제 중의 체험의 기회를 확대하여, 일본사회에 대한 이해를 심화함. 강사로서 파견한 유학생에게는 사례금을 지불하여, 일본에서의 학비를 지원함.
- 사업 특징 : 2000년부터 개시된 월드 캐러번 사업은 올해로 11년째가 되어 인지도가 상당히 높아졌음. 이에 따라 학교 등으로부터의 신청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파견 기관도 현내에서 계속 확산되고 있음.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시교육위원회가 예산을 부담하는 사례도 있었음. 파견 기관의 수요에 부합한 활동을 전개하여 높은 평가를 받았음.

20) 이 사례는 JASSO가 제공한 「재단법인 나카지마기념국제교류재단 조성에 의한 유학생지역교류사업 실시보고서」에 의함. (JASSO 내부 문건)



### JASSO 의 유학생 지역교류사업 지원 사례 (2)

『일본기업・일본문화 체험형 실천강좌

『Let's try! 취직활동 스킬업 in 가나가와』』 part 2<sup>21)</sup>

- 주관단체: 유학생직의용(職議用)능력개발센터(CDC) (NPO 단체임)
- 참여자: 외국인유학생 415명, 지역주민・기업등 23명, 그 외 372명, 합계 810명
- 프로그램 내용: ① 비즈니스 일본어1- 5월-1월 전16회  
 ② 비즈니스 일본어2- 5월-1월 전16회  
 ③ 취직지원강좌- 5월-1월 전16회  
 ④ 대학・국제회관 출장 강좌-5월-1월 전10회
- 사업 내용: 대학 4학년, 석사 2학년생을 대상으로 취직세미나를 운영함. 기업이 강사가 일본에서의 기업경험을 바탕으로 취직활동에 관한 격려와 구체적인 어드바이스를 제공함. 제1회 취직 세미나 『킵오프 취직활동 스타트 1,2』는 후지제록스 종합연구소의 이케다씨 및 산업 카운셀러 사토씨 등의 강사가 일본에서의 취직활동의 흐름, 방법, 일본기업의 변화 그리고 일본기업이 원하는 인재, 글로벌화에 대응하는 인재상 등을 강의함. 제2회 취직세미나 『기업연구의 방법-당신은 얼마나 기업을 알고 있는가?』는 좋은 기업을 만나기 위한 기업연구의 방법, 활용의 방법을 소개함. 제3회 취직세미나 『일본의 비즈니스 사회를 안다』에서는 일본기업이 기대하는 인재에 관한 강연, 제4회 취직세미나 『엔트리시트, 이력서 작성과 면접대책』에서는 이력서를 작성하는 훈련을 하였음. 유학생 자신도 면접관이 되는 역할놀이를 통해 자신의 이력서를 평가하는 기회를 가짐. 제5회 취직세미나 『매너 강좌』에서는 취직활동에 필요한 면접 등의 에티켓을 다룸.
- 사업 특징 : 유학생들이 고독한 취직활동을 강요당하는 상황에서, 대학・회관과의 공동주최로 강좌를 실시하고, 각 대학의 유학생을 모아 강좌를 실시한 것은 의미있는 성과이며, 참여한 유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았음. 본 단체강좌, 출장강좌에 참가한 유학생의 개인 상담이 늘고 있음. 본 단체가 유학생의 취직상담소의 역할을 담당하여 연간 상담업무에 대응하였음.

21) 이 사례는 JASSO가 제공한 『재단법인 나카지마기념국제교류재단 조성에 의한 유학생지역교류사업 실시보고서』에 의함.

## 5. 소결 : 한국에의 시사점

일본은 아시아 최초로 국가전략적인 차원에서 유학생 정책을 수립하여, 1983년 유학생 10만인 계획을 발표하였다. 2003년 10만인 목표 달성 후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고 못하고 있다가 2008년에 30만인 정책을 발표하였다. 30만인 계획의 가장 큰 특징은 유학의 입구에서 출구까지 토털 케어하는 점, 일본에서의 유학이 끝난 후 유학생의 일본 내 취업까지 시야에 넣고 있는 점, 유학생의 양적확보에서 질적 확보로 전환한 점이라 할 수 있다. 유학생 정책의 전환 배경으로는 대외적으로는 전세계적인 글로벌화와 트랜스내셔널 교육의 증가, 대내적으로는 소자고령화에 따른 인적자원 부족, 기업 내 글로벌 인재에 따른 수요 증가 등을 들 수 있다. 30만인 계획 달성을 위하여 일본대학의 국제화를 꾀하여, 대학 내의 영어프로그램 설치를 지원하는 글로벌 30 정책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1차적으로 13개 대학을 선정 한 후 예산이 폐지되었다.<sup>22)</sup> 또한 유학생의 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산학연대프로그램인 아시아인재기금구상을 발표했으나 이 역시 폐지되었다. 유학생 유치의 목표는 세웠지만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부분은 아직도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모색 중이라 할 수 있다.

일본은 유학생 중 아시아 지역 출신이 90%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유학 후 일본 내의 취업을 원하는 학생이 많다. 한편, 일본 역시 글로벌화와 소자고령화를 눈앞에 두고 과거의 국제공헌이란 슬로건에서 인적자원 확보로 유학생을 보는 시각이 변하고는 있지만, 정부와 기업 그리고 사회가 느끼는 위기감과 필요성에는 온도차가 있어서 유학과 취업, 그리고 이주를 함께 묶어서 생각하는 통합적인 교육이주정책이 아직은 체계적으로 수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여기에서는 일본의 유학정책 사례가 한국에 시사하는 점을 몇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22) 1차 선정된 13개 대학에 대해서는 대학의 국제화를 지원하는 다른 사업의 예산이 지속적으로 지원되고 있음.

## 1) 유학생 정책에서 ‘그랜드 디자인’의 중요성

유학생 정책은 대학이나 교육담당 부서의 업무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유학생 30만인 계획에서도 문부과학성을 비롯한 6개 정부부처, 그리고 기업과 지역 간의 민-관-산-학의 협력관계 구축이 강조되고 있다. 그런데 서로 다른 목표와 조직을 갖추고 있는 정부부처나 민-관을 가로지르는 협력체계의 긴밀한 작동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한마디로 일본의 유학생 정책을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그랜드 디자인’이 부재하며 상황에 따라 패치워크 식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고령사회인 일본에서는 노인이나 만성질환자를 돌보는 간호사 인력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어 필리핀 등 동남아 지역에서 간호사를 받아들였다. 그런데 필리핀 국내 간호사 자격을 갖춘 이들이 일본에 입국한 뒤 다시 일본의 간호사 자격시험을 치르도록 요구하는 바람에 대다수가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사례가 있다. 이들이 필리핀에서 이수한 교육과정과 학점을 확인하여 일본의 교육과정과 일치하는 과목은 부분적으로 인정해 주고 부족한 부분을 선택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시스템, 즉 국경을 넘어 적용할 수 있는 국제적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대학과 기업이 협력하여 유학생 교육하는 프로그램도 거의 없다.<sup>23)</sup> 이것은 외국인 인력에 대한 사회적 수요와 대학의 교육과정, 그리고 글로벌한 교육 스탠더드 등을 상호 연계하는 정책의 큰 디자인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 2) 인재육성 및 확보와 연관성 있는 유학생 정책의 필요성

일본의 유학생 정책은 10만 명 계획을 달성한 2003년 이후 양적 중시에서 질적 중시로 전환한다. 그리고 2007년 아시아 게이트웨이 구상을 계기로 국가전략으로서 유학생 정책을 위치시키고, 이전까지의 국제공헌과 개발원조를 대신하여, 고도 인재 획득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이 유학생 정책의 목

23) 오타 교수와의 면담(2011. 8. 30)에서 논의된 사례임.

표로 명시되었다. 유학생 교류의 확대는 장래의 일본이나 아시아의 이노베이션의 담당자, 일본의 매력의 이해자 및 발신자, 일본의 서포터를 육성한다는 의의를 포함하여 국가전략적 과제로서 재인식되었다. 그 결과 나온 정책이 2008년에 발표된, 유학생 유치에서 유학 후의 취업까지 시야에 넣은 토탈 케어를 목표로 하는 “유학생 30만인 계획”인 것이다.

국제적으로 활약하는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글로벌 30”과 같은 대학의 국제화를 위한 네트워크 추진사업에 2011년도 예산 29억 엔이 배정되었고, 대학의 세계 전개력 강화사업에 22억 엔이 신규로 배정되었다. 이 사업의 하나는 “캠퍼스 아시아” 중핵거점형성 지원사업으로, 캠퍼스 아시아는 한중일 정부가 책정하는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단위 상호인정이나 성적관리, 학위수여 등을 공통의 프레임 속에서 행하는 협동교육 프로그램이다. 다른 하나는 미국 대학 등과의 협동 교육 창설 지원이다. 이는 미국 대학 등과 협동하여 교양 교육의 공통기반을 육성하고, 이-러닝(e-learning) 등을 활용한 협동의 전문 교육을 개발하고, 이중학위(double degree) 프로그램을 확충하는 것이다. 또한 학생의 쌍방향 교류 추진에 신규로 22억 엔이 배정되어, 3개월 미만의 단기 방문 유학생에게 경비를 지원한다.<sup>24)</sup>

또한 유학생이 귀국한 후의 사후 관리(follow-up)에 대한 정책도 도입되고 있다. JASSO는 일본유학생 동창들 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비롯해 일본과의 연관관계가 지속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한다. 가령, 일본에서 유학하고 모국으로 돌아가 교육, 학술연구, 행정 등에서 활동하던 외국인을 일본의 대학으로 다시 초빙 (체류기간 60~90일)하여 공동 연구 및 국제교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귀국 후 3년 이상 경과한 유학출신 외국인을 대상으로 매년 60명 정도를 선정하고 있다. 또 일본 유학을 마치고 모국의 대학 등에서 교육·연구에 종사하는 외국인의 능력을 고양하기 위해 일본 유학 당시의 지도교수가 제자를 방문하는 사업을 지원한다.

2011년 6월 22일에 있었던 글로벌 인재 육성 추진 회의에 따르면, 동일본 대지진 이후의 외국인 유학생의 일본이탈을 막기위한 조치를 강구한다. 특히 학생들의 일본이탈이 많은 국가에서 전략적 유치 캠페인을 실시하는 것

24) 각각 7000명에게 한 달에 8만 엔씩 지급한다.

이 논의되었다. 그리고 국가별·지역별의 유학생 교류 전략의 확립과 국제적 학장회의 등의 전략적 활용, 아시아 근린 국가 및 아프리카, 중동 등을 포함한 기동적이고 전략적인 유학생 교류를 촉진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文部科學省, 2011).

한국은 2012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10만인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한국 역시 10만명 달성 후 유학생 정책의 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한국사회의 수요에 부합할 뿐 아니라, 한국을 찾는 유학생들의 수요에 부합하는 정책을 개발하여 제시하지 않으면 아시아에서 전개되는 고등교육의 국제화와 인재 쟁탈을 둘러싼 경쟁에서 뒤처지게 될 것이다. 인재 육성 및 확보와 연관된 구체적인 정책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 3) 대학교육의 질 보증의 필요성

일본대학의 국제화에서 가장 우려되는 문제가 교육의 질보증이다. 영어 프로그램 개설을 통한 국제화란 측면에서 일본보다 한 발 먼저 앞서가고 있는 한국의 사례를 일본에서도 주목하고 있다. 유학생의 증가와 함께 영어 수업 역시 양적 팽창에서 질적 팽창으로의 전환을 어떻게 이루어낼 것인가? 한국이 이 문제를 잘 극복한다면 다른 아시아 지역 국가의 벤치마킹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4) 유학생 정책과 다문화 공생정책의 연관성

일본의 경우, 지역주민과 유학생이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지자체나 대학을 중심으로 발달하여 있다. 대표적인 예가 일본학생지원기구(JASSO)에서 주관하는 나카지마 국제교류재단 지원의 유학생교류 사업이다. 한국에서는 유학생이 지역사회와 유리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유학시절에 학교를 벗어나서 지역사회와 교류함으로써 한국의 사회와 문화를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지역사회 수준의 교류사업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정부 뿐 아니라 대학, 기업, 지방 정부, 그리고 사회의 다양한 민간단체들(NPO, NGO)들의 협력체계가 매우 중요하다.

### 5) 전담 조직 간의 협력체계 구축

일본 정부 내에서 유학생 정책에 관여하는 부처는 문부과학성 외에도 다양하다. 우선 유학생 출입국을 담당하는 법무성, 교육을 담당하는 문부성, 취업은 경제산업성 및 후생노동성이 관련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처들 간의 연계가 원활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유학생 비자로 입국한 뒤 학업보다는 취업활동(아르바이트)에 사실상 전념하고 있는 유학생 문제에 대해서도 법무성은 매우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반면, 문부성이나 경제산업성은 인재유치를 위해서는 이러한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유학생 지원정책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유학생 인재를 원하는 기업과 유학생으로 야기되는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회 여론 등 각 분야에서 느끼는 온도 차가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다. 교육이주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정부 각 부처 간의 협조를 통해 일관된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며, 또한 기업을 포함한 사회 각 기관들이 다 같이 참여하고 공감하는 분위기의 형성이 중요한 과제이다.

### 6) 교육이주에 대한 학계 연구의 심화 및 지원 필요성

일본에서는 2007년 후쿠다 총리가 「아시아판 에라스무스 계획」을 언급한 후, 지역 및 대학기관별 제휴교육의 실태, 국제교육교류 정책의 입안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정리 분석하고 일본의 과제를 제시한 보고서가 2009년에 발간되었다. 이에 따르면, 아시아판 에라스무스 계획의 중점적인 4가지 과제는, 대상 지역을 둘러싼 과제, 사업 내용(엘리트형 or 대중형), 세계적 자리매김, 지역통합의 방향성(교육적 측면 외에 정치경제적 방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으로 요약되고 있다(黒田, 2009). 또한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고등교육기관의 국제교육 교류의 과제로는 전략적인 접근, 복합형 다중형 국제연대로의 중심 이동, 양과 질의 향상 모두를 목표로 할 것, 혁신적이고 매력적일 것 등이 요구되고 있다(二宮, 2009). 이러한 연구가 축적된 결과, 2011년에 “캠퍼스 아시아”라는 프로그램이 체계화 될 수 있었다. 앞으로 캠퍼스 아시아가 아시아 지역의 새로운 역내 유학 형태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아시아 각국에서 지속적인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한국에서도 교육이주에 관한 글로벌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학계의 국제 공동 연구 추진 및 이에 대한 지원이 우선적으로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IV

호주의 유학생 추이 및  
정책 동향





## 1. 도입

1970년대 중반부터 다문화주의를 국가의 주요한 통치 원칙으로 수용한 호주는 다문화주의 제도의 법제화 및 실천을 통해 그동안 영국계 백인 위주로 구성된 국가 규범과 가치체계 등을 변화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오고 있다. ‘다문화 호주’라는 대내외 정체성을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한 호주의 제도적 노력의 결과, 호주는 이민국가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그 결과 양질의 해외 이민자를 유치하는 데도 성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1990년대 이후 세계 유학생 시장의 경쟁이 높아지면서 호주정부 또한 교육이주, 즉 유학생 유치를 통한 자국의 교육산업 성장 및 이민인구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전개했다. 또한 정부의 예산 삭감에 직면한 호주 교육기관들도 해외유학생을 통한 수익 증대라는 자구책 마련에 주력했다. 이는 곧 기술노동력 부족이라는 자국 노동시장의 문제를 양질의 해외유학생을 통해 해결한다는 목표 하에 호주 교육기관에서 학업을 마친 유학생에게 영주권 획득의 기회를 넓히는 정부의 이민정책으로 연계되었다. 이러한 해외유학생 유치를 위한 이민정책 및 민-관 협력은 주로 하워드 보수연합 정부(1996~2007)에 의해 주도되었으며, 그 결과 해외유학생 수는 단기간에 성공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중국, 인도, 한국계 유학생 수가 급증했다.

하지만 이러한 해외유학생의 수적 증가에 반해 현재 호주사회 내에서 그들에 대한 안전과 권리 보호 등을 위한 법제도와 정책이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교육기관들이 우후죽순 생겨났으나 그들 중 상당수가 부실경영 및 자격미달인 것으로 드러났고, 이로 인해 유학생들의 정신적, 경제적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더욱이 과거 백호주의로 재현된 유색인종에 대한 인종차별주의가 호주인들의 일상의 삶에 여전히 잔재해 있다. 특히 이러한 인종차별주의는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경기침체 기간 동안 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젊은층을 중심으로 심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결국 이러한 호주인의 해외유학생에 대한 인종과 계급을 토대로 한 갈등은 2009년 멜번 도심에서 백인 호주인들에 의해 자행된 인도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일련의 폭력사건으로 인해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그동안 호주 사회 내에서는 크고 작은 인종차별 관련 폭력과 시위 등이 산발적으로 일어나기는 했었다. 이를 계기로 노동당 정부는 그동안 경제적 효과를 위해 해외유학생 유치에 초점이 맞춰진 이민정책 및 국제교육정책에 대한 대폭적 개혁을 시도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해외유학생 유치 및 그들을 중심으로 한 기술이민정책이 호주의 노동시장에 심각한 왜곡을 가지고 왔다는 점 또한 노동당 정부의 이민 및 해외유학생 정책 개혁에 계기를 마련해주었다.

결과적으로, 지난 2009년 이후 호주정부는 해외유학생 관련 이민정책 및 그들에 대한 교육, 안전, 복지, 사회통합 정책 등에 대해 재검토한 후 개선점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부실교육기관 폐쇄 및 유학에서 기술이민으로 직접적으로 이어지는 연계 고리를 약화시킨 이민정책이 도입된 결과 2010년에는 처음으로 해외유학생 수가 감소 추세로 돌아섰다. 특히 그동안 기술이민을 목적으로 호주유학을 선택하였던 중국 및 인도 유학생 수가 급격히 감소되었다. 이런 측면에서, 호주의 해외유학생 정책은 국내 교육산업 뿐 아니라 이민정책, 노동시장 정책, 나아가서 사회통합 정책과 밀접히 연동되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더욱이 이민을 통한 인구증가 및 다문화 정책을 포함한 사회통합 정책을 놓고 호주 정치권 내부에서 일정한 경합이 있다는 측면에서, 호주의 유학생 정책의 초점은 정부 교체에 따라 상당 부분 달라지고 있다. 다른 한편, 최근 호주에서 나타난 해외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일련의 폭력 사태로 제기된 그들의 안전 및 안보, 인권 등의 사안은 유학생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그들을 수용하는 국가 및 지역공동체, 교육기관 등이 구조적·제도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본 장에서는 호주의 교육이주의 역사 및 현황, 최근의 쟁점 및 정부의 정책적 대응 등에 관해 자세히 살펴보겠다.

## 2. 교육 이주의 현황

호주는 전 세계 해외유학생 시장을 10% 이상 점유할 정도로 규모가 큰 유학생 유치 국가이다. 지난 20 여 년 동안 호주의 유학생 수는 거의 매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먼저, 호주에서 해외유학생이 등록할 수 있는 교육과정은 아래 다섯 개 영역으로 구분된다.

- 고등교육기관(대학교 · 대학원, Higher Education, HE)
- 직업교육훈련기관(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VET)
- 해외유학생을 위한 영어집중코스(English Language Intensive Courses for Overseas Students, ELICOS)
- 초 · 중 · 고교(School Education)
- 기타(Others)<sup>25)</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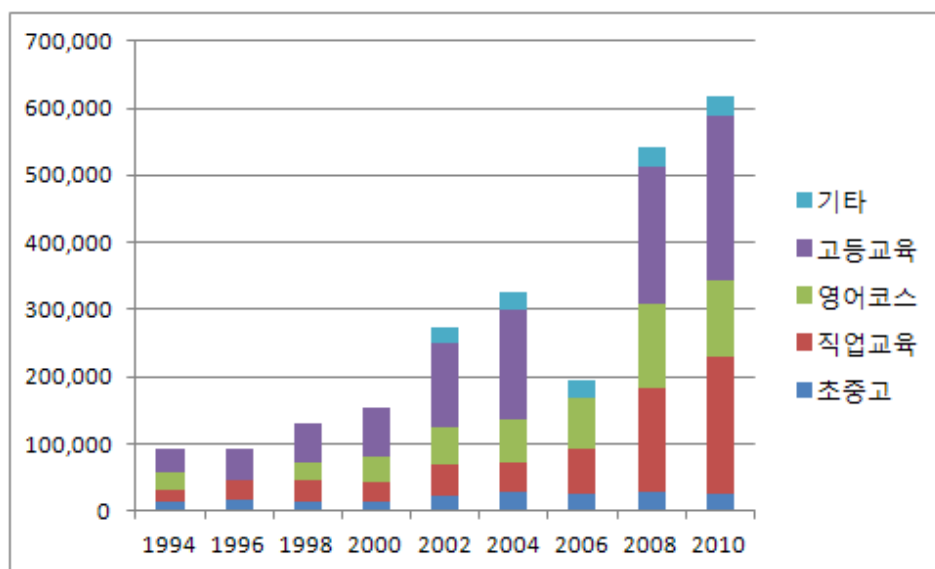
아래의 <표 IV-1>과 <그림 IV-1>은 1994-2010년 기간 동안에 호주 해외유학생의 교육 과정별 등록 현황 추이를 보여준다. 2010년에 호주의 이민정책 및 국제 교육산업 정책 변화로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는 양상을 보인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표 IV-1> 호주 내 해외유학생 등록 현황(1994~2010, 격년)

분야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초중고	12,180	16,663	14,803	13,129	23,223	27,311	24,479	28,303	24,235
직업교육	19,479	28,483	29,937	30,759	44,786	45,547	67,018	153,881	206,581
영어코스	26,123	43,307	27,356	36,767	57,452	61,743	76,905	127,247	113,477
고등교육	35,290	46,773	56,810	72,717	124,666	164,008	185,44	202,270	243,591
기타					23,993	25,952	26,437	30,122	31,235
총계	93,772	135,226	128,906	153,372	274,060	324,561	380,288	541,823	619,119

출처: Australian Education International(AEI), 'International Student Data,' 2010.

25) 호주 교육기관에 의해 정식으로 학위를 받을 수 없는 프로그램. 즉, 학교 입학 전 등록하는 어학 및 전공 브릿징 코스 등 포함.



출처: Australian Education International(AEI), 'International Student Data', 2010.

[그림 IV-1] 호주의 해외유학생 등록 현황 추이 (1994~2010)

1994년 이래로 최근까지 모든 교육 영역에서 해외유학생의 수가 증가했다. 그 중 고등교육기관과 직업교육훈련 기관의 등록 현황이 가장 많이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 2010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호주의 공식적인 해외유학생의 수는 619,119명에 이르며, 이는 호주 전체 인구의 약 3%에 이른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은 학생인 243,591명이 고등교육기관(HE)에 등록되어 있고, 다음으로 직업교육훈련기관(VET)에 206,581명의 학생이 등록되어 있다. 그리고 다음으로 해외유학생을 위한 영어집중코스(ELICOS)와 초·중·고교(SE) 순으로 분포되어 있다.

〈표 Ⅳ-2〉 2010년 호주 해외유학생의 교육 기관별 등록자 현황

분야별 등록	2010(명)	비중(%)
고등교육기관	243,591	39.3
직업훈련기관	206,581	33.4
영어집중코스	113,477	18.3
초중고교	24,235	3.9
기타	31,235	5.0
전체	619,119	100

출처: Australian Education International(AEI), 'International Student Data', 2010

해외 유학생들을 집중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지역은 주로 시드니가 위치한 뉴사우스웨일즈와 멜번이 속한 빅토리아 주이다. 뉴사우스웨일즈 주의 경우에는 2009년에 약 235,000명의 학생을 수용했고, 빅토리아 주는 약 200,000명의 학생을 수용했다. 한편, 2010년 8월 기준 해외유학생을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이 전체 비중 약 27.1%를 차지하며 호주에 유학생을 가장 많이 보내고 있다. 인도가 16.1%로 두 번째, 우리나라가 5.5%로 세 번째, 다음으로 베트남, 태국 순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들 5개국에서 보내는 유학생 수가 2010년 한 해 호주 해외유학생 총 수의 56.9%를 차지하고 있다. 기타 국가 중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 프랑스, 필리핀 출신의 유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표 IV-3〉 2010년 8월 기준 호주 해외유학생의 국적별 현황

국적	2010	비중%
중국	162,147	27.1
인도	96,223	16.1
대한민국	32,867	5.5
베트남	24,953	4.2
태국	23,877	4.0
기타	257,711	43.1
총	597,778	100

출처: Australian Education International(AEI), 'International Student Data,' 2010

호주로 유입된 해외유학생들이 가장 많이 집중된 분야는 고등교육기관, 즉 대학·대학원이고 경영과 상거래(51.6%) 분야에 가장 많은 학생들이 분포되어 있다. 다음으로 VET의 같은 전공분야(42.6%), 음식·요식·개인서비스 분야(25.7%)에 유학생의 집중도가 높은 편이다.

한편, 호주의 교육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는 학생들 중 일부는 워킹홀리데이 메이커들(Working Holiday Makers, WHMs)이다. 유학생과 마찬가지로 호주에서 단기체류 할 수 있는 비자인 WHMs 비자(하위번호 417)를 발급받아 유입되는 이들은 주로 저숙련 직업군(농장, 식당 종업원, 청소 등)에 분포되어 일하며, 여행 또는 공부를 병행한다. WHMs 비자 소지자는 체류기간 동안 최대 4개월까지 교육프로그램에 공식적으로 등록할 수 있다. 대체로 WHMs 5명 중 1명은 체류기간 내에 호주 교육프로그램에 등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sup>26)</sup>

아래 <표 IV-4>은 최근 5년 동안 호주 정부가 발급한 WHMs 비자 수를 보여준다. 최근에 WHMs 프로그램 협약을 맺고 있는 국가 수의 증가와 해당 비자 발급 조건의 완화로 인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애초 1975년에 처음 도입된 이 프로그램은 그 당시에 영국과 캐나다의 18세 이상 30세 이

26) The 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Citizenship, 'Evaluation of Australia's Working Holiday Maker(WHM) Program', 27 Feb 2009. National Institute of Labour Studies, Flinders University, Adelaide, Australia.

하의 젊은이들이 호주에서 일하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후 현재까지 약 24개국이 호주와 WHMs 프로그램 협약을 맺고 있으며, WHMs 비자 발급 수는 매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최근 2009-10년에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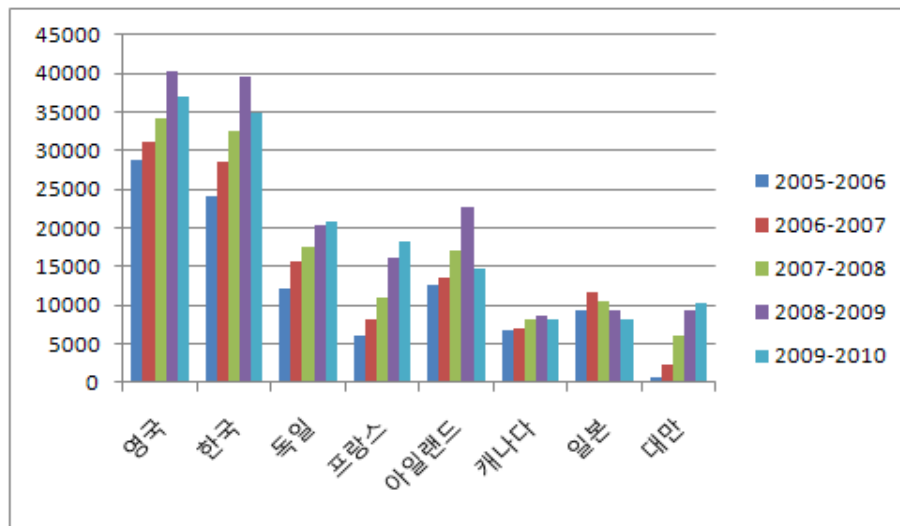
〈표 IV-4〉 WHMs 비자 발급 추이(2005~06에서 2009~10까지)

(단위: 명)

2005-06	2006-07	2007-08	2008-09	2009-10
113,935	134,612	154,148	187,696	175,739

아래 <그림 IV-2>는 국가별 WHMs의 수를 보여준다. 가장 많은 WHMs를 호주로 보내고 있는 국가는 영국이고 한국이 아주 근소한 차이로 그 뒤를 잇고 있다. 다음으로 독일, 프랑스, 아일랜드, 캐나다, 일본, 대만 순으로 나타난다. 이들 국가로부터 유입되는 인구가 전체 호주 WHMs 입국자의 총 80% 정도를 차지한다.

(단위: 명)



출처: DIAC, Total Working Holiday Visa Grant by Citizenship, <http://www.immi.gov.au/media/statistics/pdf/visitor/2005-06-to-2009-10-whm-wah-visa-grants.pdf>. (검색일: 2011/10/10)

〔그림 IV-2〕 국가별 WHMs 수 증가 추이(2005~2010)

대체로 1년 이하 단기간 동안에 호주에 체류하며 주로 일, 여행, 학습을 하는 이들 WHMs은 그 수가 매해 증가함에 따라 그들이 호주의 노동시장 및 관광, 교육 산업에 미치는 영향 또한 점차 증가하고 있다. 고용은 WHMs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WHMs의 69% 이상이 호주에서 취업하고 있다. 그들 대부분은 저숙련 직업군에 분포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직종으로는 농장(27%), 웨이터·웨이트리스(13%), 청소(8%), 주방보조(5%) 등을 들 수 있다. 산업측면에서 봤을 때 ‘숙박·음식 서비스업’(35%)과 ‘농업, 수산업, 산림업’(26%)이 WHMs가 종사하는 가장 대표적인 산업이다.

### 3. 호주 교육산업 성장 배경 및 지원 정책(1950~2007)

호주정부는 1950년에 해외유학생 유치를 위한 정책을 최초로 도입했는데, ‘콜롬보 플랜(Colombo Plan)’이 바로 그것이다. 아시아 지역 여러 나라의 우수 인재들을 선발해서 호주 유학 기회를 부여한 것이 이 정책의 주요 골자이다. ‘콜롬보 플랜’이 도입된 배경에는 2차 세계대전 이후 호주로 들어온 아시아 출신 전쟁 난민 유입과 유럽 제국의 호주 내 영향력 약화 등의 시대적 특성을 들 수 있다. 호주 정부는 ‘콜롬보 플랜’을 통해 국내로 유입된 아시아 인재들에게 영어실력 향상, 호주의 가치 및 신념에 대한 이해 증진을 통해 그들과 호주 사이에 강한 연계를 맺고자 했다. 특히, 무엇보다도 아시아 지역 내 확산되어 있던 호주의 백호주의에 대한 적대감을 완화하는 것이 호주정부가 ‘콜롬보 플랜’을 통해 크게 얻고자 한 것이었다. 실제 당시 백인우월주의가 팽배한 호주에서 교육받은 젊은 아시아인의 등장은 호주 대학의 젊은 백인들을 중심으로 백호주의를 약화시키는데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Jakubowicz & Monami, 2010: 5).

이후 1966년에 ‘호주정부는 모든 유형의 인종차별을 없애기 위한 국제협약’(ICERD,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에 서명했으며, 그로부터 일 년 후에 호주 원주민인 애보리진에게 호주백인들과 동일한 시민권을 부여했다. 이와 함께, 1973년에 이민



정책에서 인종차별주의 문구들을 삭제하기에 이른다.

1975년에 호주 노동당 정부는 다문화주의를 국가 주요 정책의 근간으로 공식적으로 채택했지만, 호주 사회 내 뿌리 깊게 확산되어 있던 백인중심 인종차별주의를 성공적으로 제거하지는 못했었다. 이후 1983년에 들어선 호크(Hawke) 보수정권 시기에 인종 간의 화합에 역점을 둔 다문화 정책을 폐지하고 아시아인들의 이민 유입에 제약을 두기 시작했다. 그리고 1980년대 중반으로 접어들면 호주정부는 정부 제공 해외유학생 재정 지원을 전면 중단했으며, 호주의 유학생 교육을 일명 교육 수출산업으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정부의 교육 정책 변화로 인해 호주의 대학들은 등록금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되었으며, 뿐만 아니라 학생 모집부터 학생 지원 및 교육, 관련 시설, 서비스 등에 대한 모든 사안이 시장메커니즘에 따라 결정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호주 대학들 내에 해외유학생 업무 담당 부서가 설립되었고, 학생 모집부터 입학, 졸업에 이르는 과정을 지원, 관리하는 프로그램 및 네트워크 등이 설계되었다. 또한 이러한 변화에 따라 민간 영역의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기 시작했는데, 이때부터 직업훈련, 영어 교육과 대학 연계 프로그램 등이 도입되었다(Adams, 2007: 411-412).

이러한 호주 교육 수출산업정책은 1996년부터 2007년까지 집권한 하워드 보수연합 정부에 의해 더욱 강화되었다. 호주의 유럽적 백인 정체성을 중요시했던 하워드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아시아 등을 중심으로 한 이민자 유입을 제약하기 시작했다. 특히, 하워드 정부는 아시아 출신 난민들의 가족 재결합 및 저숙련 노동력의 이민 유입이 호주사회에 이롭지 않다는 판단 하에 이들의 이민 유입을 최소화하는 반면에 고학력, 고숙련 이민자들의 유입을 확대하고자 노력했다. 한편, 신자유주의 정책의 신봉자였던 하워드 전 총리는 정부의 교육산업 투자를 최소화하는 대신에 등록금 전액을 지불하는 국내 및 해외 유학생 유치가 호주의 교육산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방안 이라고 판단했다. 이 당시 하워드 정부는 호주의 교육산업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시장 지향적 서비스 체계를 갖춘 민-관 파트너십에 기반을 둔 교육 서비스이다. 이때 시장 지향적 서비스란 엄격한 국가적 규제 틀 내에서 교육 기관에 잉여를 창출하며 우수한 교육 및 지원 서비스를 학생에게 제공하고, 또한 국가에 수출 이익을 가져다주는 것이다.”(Adams, 2007: 410)

결과적으로, 호주의 교육산업을 주요 수출 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하워드 정부는 다양한 민-관 파트너십에 기반을 둔 교육산업 지원정책과 법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또한 해외유학생 유치와 더불어 그들이 호주의 기술이민자로 장기 거주토록 하기 위해 교육산업과 기술이민프로그램을 직접 연계하는 이민정책을 고안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하워드 정부의 다양한 제도적 노력으로 인해 호주 교육기관의 해외유학생 유치는 성공적으로 이뤄졌으며, 이들 유학생 중 상당수가 호주의 기술이민자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2008년에 집권한 노동당 정부는 하워드 정부의 기술이민정책이 호주 노동시장의 왜곡을 가지고 왔다는 판단과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응한다는 측면에서 이민자 수를 확대하되 그 성격을 바꾸기 위한 정책 개혁을 시작했다. 아래에서는 하워드 정부 전후시기를 중심으로 호주의 수출 교육산업 및 이민정책에 대해 자세히 살펴본다.

### 1) 호주의 수출 교육산업 지원 기관

먼저, 호주의 IDP Education Australia(현재 Education Australia Limited로 명칭 변경됨)는 호주의 유학생 입학과 영어 시험 서비스(IELTS)를 제공하는 글로벌 회사이다. 호주의 전 대학들이 출자해서 만든 비영리 기업으로서, 현재 29개국에 걸쳐 75여개 이상의 네트워크 오피스를 운영하고 있다. 애초에는 아시아 지역의 학생들을 리쿠르트 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나, 점차 유럽, 중동, 미국 등으로 확산되어 나갔다. IDP는 국제영어시험시스템인 IELTS를 1989년에 처음 도입했으며, 이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영어실력평가시험으로 현재 약 133개국에서 치러지고 있다.<sup>27)</sup> 교육기관들은 미국 등 여러 국가에서 민간 중개자로 구성된 네트워크를 설립하여 학생들을 모집

27) IDP Education Australia 홈페이지 정보 참조. <http://www.educationaustralia.com/>

하고 있다. 이런 민간 기관을 통해 호주 유학생 중 약 절반 정도가 유입되고 있다. 이와 함께, 호주무역위원회(Austrade)는 해외 교육박람회 및 해외 시장 마케팅 자문 등을 통해 교육 수출을 지원하고 있다.

다음으로, 호주 교육인터네셔널(AEI, Australian Educational International)을 들 수 있는데, 이는 호주교육·고용·노사관계부(DEEWR, Department of Education, Employment and Workplace Relations) 산하 기관으로서, 외국 유학생 정책을 포함한 국제교육을 전담하는 기구이다. AEI는 호주의 교육을 전세계에 알리고 유학시장 개발을 위해 호주교육센터를 설치했고, 주요 국가에는 호주 교육상담가를 파견해서 수출 활동과 정부 대 정부 간 관계를 향상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한편, 사립교육기관, 즉 사립전문대학 또는 준공립 교육기관은 패스웨이 프로그램(pathway program)을 통해 자 기관에서 영어 교육을 받거나 디플로마(diploma) 학위를 받은 학생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는 대학 및 대학원, 직업훈련기관에 진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현재 호주 대학에 진학한 학생의 약 50% 이상이 이 경로를 통해 입학한다. 이처럼 호주의 대학들은 왕성한 국제교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학업 성취를 위해서도 역할을 다하고 있다. 대학들은 경쟁력과 자주성을 유지하는 한편 상호 모범관행(best practice)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sup>28)</sup>

다른 한편, 호주국제교육컨퍼런스(AIEC, The Australian International Education Conference)는 해외시장 개척 및 유학생 모집에 강점을 두며 전문적인 개발을 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2006년에는 AIEC가 IDP와 새로운 협력 관계를 맺었고, 이후 호주국제교육연합회(IEAA)와 호주의 교육에 대해 소개하기 위해 국제회의를 빈번하게 개최하고 있다.<sup>29)</sup> 마지막으로, 호주정부는 호주원조청(AusAID)을 통해 저임금국가 출신 유학생에게 장학금을 제공함으로써 교육수출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이 장학금은 현재 호주정부의 Endeavour Scholarship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수많은 저임금국가 출신 유학생이 호주에 유입되고 있다.<sup>30)</sup>

28) AEI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http://www.aei.gov.au/>) 참조.

29) AIEC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 (<http://www.aiec.idp.com/>) 참조.

30) AusAID가 제공하는 저임금국가(원조 수원국)에 제공하는 교육 지원 정보는 홈페이지 장학금 정보에서 찾을 수 있음(<http://www.ausaid.gov.au/scholar/default.cfm>).

## 2) 법·제도적 지원

호주의 교육수출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대표적인 법제도 서비스로는 교육서비스법(ESOS, Education Service for Overseas Students Act 2000)과 2007년 제정된 ‘외국인 유학생 교육기관 및 등록기관을 위한 행동 지침(National Code 2007)’을 꼽을 수 있다. 호주정부는 이 두 법제도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을 보호하는 각종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sup>31)</sup> 한편, 외국 유학생 교육기관 및 교육과정 등록 제도도 운영되고 있다. 이는 외국유학생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교육기관은 연방정부의 심의를 받아 크리코스(CRICOS)라는 DB등록부에 등록을 하고, 학생 비자를 받은 외국 유학생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교육기관에서 공부하며, 이 DB에 등록된 강의만을 수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CRICOS 등록은 학생들이 공부하는 과정과 교육기관들이 외국 유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높은 교육 수준을 충족하도록 보장한다. 유학생들은 위치를 포함해 등록한 교육 과정에 대한 세부 내용이 CRICOS 정보와 일치하는지 잘 확인해보도록 제언한다.

앞서 소개한 ESOS 제도를 자세히 살펴보자. 호주의 교육과학부(Department of Education, Science and Training)는 ESOS에 따라 유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을 만든다. ESOS 법률규정의 목적은 수업료 및 재정 보증을 제공하고 서비스 제공자 등록에 대한 국내적으로 일관성 있는 접근을 함으로써 학생 비자로 호주에 오는 모든 사람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 법률은 또한 비자 관련 보고 요구사항을 통해 해당 산업의 올바른 업무를 확실하게 한다. 구체적으로, ESOS는 다음과 같이 학생들의 권익을 보호한다.<sup>32)</sup>

31) AEI, 2011. “ESOS Act”, <http://www.aei.gov.au/regulatory-information/Education-Services-for-Overseas-Students-ESOS-Legislative-Framework/ESOS-Act/Pages/default.aspx> (검색일, 2011-9-1)

32) 호주정부가 제공하는 유학사이트의 ESOS에 대한 한국어 소개 ([www.studyinaustralia.gov.au/.../757/ko-ESOSFramework.pdf.aspx](http://www.studyinaustralia.gov.au/.../757/ko-ESOSFramework.pdf.aspx)) (검색일, 2011-9-2)

- 학생은 교육기관에 등록하기 전에 교육기관 및 교육기관 대행 유학원 으로부터 수강할 과정, 수강료, 수업 방식, 기타 내용에 관한 정확한 최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학생이 18세 미만일 경우 학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학생이 숙박할 곳, 학생 지원 및 복지가 마련된 후에만 비자 발급을 허용된다.
- 학생은 등록금을 지불하기 전이나 지불할 때 교육기관과 제공될 서비스, 지불할 비용 및 수업료 환불에 대한 정보가 명시된 서면 계약서에 서명할 권리가 있다. 학생은 서면 계약서의 사본을 보관해야 한다.
- 학생이 수업료를 지불한 수업을 받을 권리가 있다. ESOS 제도는 교육 기관에서 학생이 등록한 강좌를 제공할 수 없을 경우 학생에게 환불을 하거나 다른 과정으로 대체하도록 하는 소비자 권익 보호 내용을 포함 하고 있다.

ESOS 제도는 외국 유학생들에게 교육 및 연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호주 교육기관들이 갖추어야 할 기준 또한 마련하고 있다. 이 기준들은 다음과 같이 학생들이 알 권리가 있는 다양한 정보와 학생들에게 제공되어야 할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

- 오리엔테이션과 학생들이 공부하고 호주 생활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학생지원 서비스
- 외국 유학생들의 연락 담당자
- 학점 신청
- 등록의 연기, 일시 중지 및 취소
- 공부하는 과정에서 만족스런 성과를 얻기 위한 교육기관의 요건 및 학생의 성적이 부진할 때 제공될 수 있는 지원
- 학생이 등록한 과정의 출석이 체크되는지에 대한 정보
- 불만 및 이의 제기 과정

이들 기준 중 하나로, 호주의 교육 과정 중 마지막 6개월을 마치지 않은

채 다른 과정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학생에게 다른 교육기관에 등록하는 것을 허가하지 않는 조항이 있다. 교육과정의 마지막 6개월을 마치지 않고 다른 과정으로 이전하고자 한다면 현 교육기관의 허가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학생 비자로 호주에서 공부하는 유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책임을 가진다.

- 학생비자 요건 만족
- 호주에 거주하는 기간 동안 해외 유학생 의료보험(OSHC) 유지
- 교육기관과 서명한 서면 계약서 조항 이행
- 주소를 변경할 경우 교육기관에 통보
- 교육과정에 만족할 만한 성과 유지
- 출석을 기록하는 교육과정의 경우 교육기관의 출석 관련 방침을 준수
- 18세 미만인 경우 인가된 수고, 지원 및 일반복지 관련 조치를 유지

### 3) 하워드 보수연합정부의 교육 수출산업 지원정책(1996~2007)

하워드 보수연합 정부의 교육 수출산업 지원정책은 크게 인구학적, 경제적 두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즉, 자연인구의 증가보다 이민에 의한 인구 증가 비중이 높고,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호주에서는 최근 젊은층, 특히 젊은 노동인구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점 때문에 하워드 정부는 해외유학생의 기술이민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기술노동력 부족과 고령화 문제를 극복하고자 노력했다. 가장 대표적으로, 호주정부는 학업을 마친 해외유학생이 기술이민자로 전환할 경우 영주권 취득을 용이하도록 이민정책을 전환함으로써 호주 유학이 곧 호주 영구 이민으로 연계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다. 이와 함께, 교육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출 삭감으로 인한 교육기관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외유학생 산업을 통해 극복한다는 전략 하에 정부 산하 기관 뿐 아니라 교육기관, 민간 기업 등과의 협력체계를 만들어 해외유학생 유치에 주력했다.

그 결과로 호주의 이민청(DIAC)에 따르면, 2001년 6월 이후 최근까지 해외유학생 수는 매해 평균 13.9%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sup>33)</sup> 또한 호주통계청에 따르면, 2008-2009년 한 해 동안에 호주의 국제교육산업이 국내 경

제에 기여한 금액이 약 15.8억 달러에 이르렀고, 2009년 12월 4분기에는 총 17.7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sup>34)</sup> 또한 호주사립교육훈련위원회(the Australian Council for Private Education and Training)에 따르면, 2007-2008년 한 해 동안에 해외유학생과 관련되어 창출된 전일제 고용만 해도 122,000명에 달한다. 이런 측면에서, 최근에 여러 인구학자들은 ‘성공적으로 학업을 마친 유학생에게 영주권을 제공하는 호주의 이민정책이 호주의 경제성장을 촉진시켰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Markus, Jupp & McDonald, 2010).

구체적으로 하워드 보수연합정부의 수출 교육산업 정책을 시기별로 살펴 보겠다.<sup>35)</sup>

#### ① 1997~2000

1998년에 하워드정부는 다음 4년 기간 동안에 해외 주요시장에 호주의 교육과 기술훈련 서비스를 홍보하고 부흥시키기 위해 21만 호주달러를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해외 시장개척은 그동안 호주 정부가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인도, 중국 등의 아시아 국가를 비롯해서 유럽, 북미, 남미 국가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 지원 사업은 연방정부 기구인 AEI에 의해 운영되었다. 결과적으로, 호주 이민프로그램의 기술이민 비중이 위 기간 동안에 급증했다. 일례로, 1995~1996년에 이민프로그램 전체의 29%를 차지했던 기술이민의 비중이 2000년에 50%로 확대되었고,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이를 통해 기술이민 증가 정책은 기술노동력 부족과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는 하워드 정부의 가장 주요한 정책이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같은 해 8월에 하워드 정부는 1997년 7월부터 호주 교육기관에서 학위를 수여한 유학생들에게 기술이민 신청 시 가산점 5점을 부과하겠

33) DIAC, Annual Report 2008-2009, Canberra, October 2009, p.63.

34)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ABS), 2011. International trade in goods and services, Australia(Cat no. 5368.0)

35) 보수연합 정부의 이민정책 부분은 주로 호주연방의회의가 발간(2010)한 “Overseas Students: immigration policy changes 1997-May 2010”(Elisa Koletth 집필)을 주로 참고 했음.

다고 발표했다. 이는 비자 신청자가 고용된 상황이 아니어도 즉, 고용주의 비자 스폰서가 없어도 가능하다는 내용이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과거 호주에서 학위를 받은 유학생들의 영주권 획득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서 호주 정부가 더 많은 해외유학생 및 기술이민자들을 유치하는데 기여했다.

이어서 1999년 3월에 하워드정부는 취업이민 수요리스트(MODL, the Migration Occupations in Demand List)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호주 내 부족한 노동력을 나열한 것으로서, 1999년 5월부터 MODL에 부합하는 직종에 기술이민을 신청한 사람은 이민 자격 평가시 가산점을 받고, 선발 우선순위 혜택을 받게 되었다. 향후 이 정책은 이후 호주 내 유학생 수 증가에 결정적 기여를 했다.

2000년도에 접어들며 하워드정부는 노동시장의 글로벌화와 호주경제 내 임시거주자의 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주목하고 있음을 언론을 통해 발표했다. 즉, 취업 및 유학을 위해 장기간 임시 거주하는 이민자들이 향후 해외이민의 주요 대상자가 될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하워드 정부의 기술이민과 유학생 프로그램은 전 세계적인 기술이민 및 유학생 유치 경쟁 차원에서 발전했다고도 볼 수 있다.

## ② 2001~2004

2001년 7월부터 호주에서는 부족했던 기술력을 가진 해외유학생들이 대거 학업을 마치기 시작했다. 그들은 대부분 하워드 정부의 이민정책이 변화된 이후에 학업을 시작한 유학생들로서 이들은 다른 자격요건만 맞으면 모두 독립기술이민 비자 카테고리도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었다. 그리고 과거에는 비자 신청과 심사를 호주가 아닌 국가에서 거쳐야 했으나 이때부터 유학생들은 호주에 체류하며 이 모든 과정을 진행시킬 수 있도록 배려했다. 덕분에 해외유학생들은 학업이 끝난 후 이민신청을 한 경우에는 6개월 동안 모국에 돌아가지 않고도 호주에 체류하며 비자 업무를 해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더욱이 호주에서 유학을 거치지 않은 신청자가 타국에서 비자 신청을 한 경우에 비해 호주에서 공부를 마친 신청자의 경우에는 일정한 우대, 즉 해당 직종 취업 경력에 대한 필수 사항이 면제되기도 했다.



위와 같은 해외유학생 프로그램과 기술이민 프로그램의 직접적 연계는 해외유학생 유입 수를 증가시키는데 상당히 기여했다. 이는 2001년에서 2003년 사이에 호주 유입 유학생 비자 승인 수는 27%나 증가했다는 점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또한 이로 인해 유학생들이 호주에서 기술이민자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비중도 점차 증가했다. 당시 유학생 기술이민자는 전체 기술이민자 중 약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하워드 정부는 유학생 기술이민자 비중을 더욱 증가시키기 위해 2002년 5월부터 기술이민자 비자 취득 점수를 110점에서 115점을 상향 조정했다. 이로 인해 가산점 5점 점수를 받는 유학생 신청자가 비유학생 신청자보다 비자 취득에 더욱 유리한 조건을 갖게 되었다. 이후 2003년 7월부터는 유학생들의 GSM 프로그램 신청자격을 강화시키는 정책이 도입되었다. 즉, 정부는 1년 유학 기간을 2년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해당 분야에 취업 경력이 반드시 있어야만 가산점을 주도록 정책을 수정했다. 반면, 같은 해 12월에는 정부가 더 많은 해외유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해 유학생 비자 요건을 더욱 완화했다. 가령, 비자 신청 시 신청자들이 호주유학 생활 전 기간 동안 필요한 학비 및 생활비가 충분히 있다는 것을 증명하도록 했던 기준이 완화되었으며, 또한 영어권 국가에서 잠시라도 살았던 경험이 있거나 대학 입학 전에 영어강의를 수강한 적이 있는 학생은 모두 비자 취득이 가능하게 했다.

### ③ 2005~2007

2005년에 독립기술이민자 중에 유학생 비중이 높다는 인식 하에 하워드 정부는 특정 국가와 특정 교육 분야 출신의 유학생을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해 영어와 재정적 자격 요건을 포함한 유학생 비자 평가 레벨을 더욱 낮추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정부는 2005년 4월에 GSM 통과 점수를 115점에서 120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정부가 MODL이 제시한 직종에 응시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가산점의 중요성을 더욱 확대한 것으로서 기술 노동력이 가장 부족한 직종의 이민자를 우선적으로 수용하려는 의도였다. 이 정책 도입 이후에 전체 기술이민자 중 약 9%만을 차지했던 MODL 직종 이민이 1년 후에 42%로 급증했다. 다른 한편, 하워드정부는 2005년 5월 MODL에 새

로운 직종, 즉 요리와 호텔 및 식음료 종사업(hospitality)을 추가시켰다. 이는 국내 노동시장의 인력 부족 문제도 있었지만 직업훈련 분야의 성장을 촉진시켜 해외유학생을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한편, 일반적으로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직종에 취업한 해외유학생 출신들의 업무 수행 결과가 반드시 좋지만은 않다는 사실이 2005년부터 실시된 상당 수 연구에서 지적되었다. 그 주요 원인으로 해외유학생의 영어 능력이 부족하고 동 직종 업무 경력이 부족하다는 점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가 발표된 후 하워드정부는 GSM 프로그램의 필수충족 사항을 바꾸기로 결정했는데, 구체적으로 GSM 비자 취득을 위한 영어 수준 상향조정과 해당 직종 근무 경력이 있는 경우에만 가산점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 내용을 재수정했다.

#### 4. 호주 교육이주 정책의 쟁점: 안전, 인권 의제 제기

최근 호주에서 해외유학생의 급증으로 인해 유학생의 사회 통합이 중요한 현안으로 부상되었다. 해외유학생들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에는 유색인 유학생에 대한 인종차별주의적 폭력, 부실 사립교육기관의 폐교, 고환율·고물가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저임금 노동시장에서의 임금착취 등이 포함된다(Jakubowicz & Monani, 2010). 위와 같은 문제가 최근에 중요한 사회적, 나아가서 정치·경제적 이슈로 부각하게 된 계기는 2009년 5~6월 동안에 멜번과 시드니에서 연속적으로 발생한 인도유학생에 대한 호주 백인들의 인종차별적 폭행사건 때문이었다. 흉기나 신체적 부위를 이용한 구타, 자동차 방화 등 다양한 방식의 폭행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며 호주사회를 긴장하게 만들었다. <표 IV-5>는 2009년 5~6월 사이에 멜번에서 벌어졌던 인도 유학생에 대한 폭력 사건을 시기별로 정리한 것이다.

〈표 Ⅳ-5〉 2009년 멜번에서 발생한 인도유학생 폭행사건 일지

일자	사건	구체적 사항
5월 2일	24세 인도 학생 폭행	네 명의 호주남성들에 의해 구타 당한 후 정신을 잃은 채 발견됨
9일	기차에서 한 학생이 강도 및 구타 당한 후 발견	2명의 십대 호주인이 체포됨
23일	25세 남성 폭행	십대들이 집단적으로 흥기를 이용해서 구타함
25일	25세 남성 강도 및 칼로 찌름	두 명의 남성이 용의자에 오름
30일	한 남성이 심하게 폭행당함	두 번의 공격
6월 2일	21세 남성 칼로 상처입음	다섯 명의 남성에게 의해 주차장에서 폭행 당함
6일	22세 남성 자동차 방화	
6일	20세 남성 폭행	직장 출근하는 도중 십대 청소년들에 의해 구타
8일	23세 학생 폭행	세 명의 남성이 분수대 옆에서 폭행
13일	24세 학생 폭행	차에 타기 전 세 명의 남성에게 의해 폭행당함
15일	20세 남성 언어 및 신체 폭력	두 명의 남성이 주차장에서 폭행
23일	20세 남성 얼굴구타	오후 5시 30분에 버스 정류장 근방에서 폭행
29일	22세 Sikh 남성 폭행	여섯 명의 십대가 그의 터번을 벗기고 머리카락을 자르려고 시도함. 두 명 체포당함.

위와 같은 폭행사건이 연속적으로 발생한 이후 인도 출신 유학생을 중심으로 한 전국학생연합회가 구성되었고, 그들은 대도시 도심에서 평화행진 등을 통해 해외유학생 문제의 심각성과 호주 정부의 해결을 촉구했다. 한편, 위 사태 직후 호주 정부는 ‘다문화 호주’라는 호주의 대외적 이미지의 손상을 경계하며, 일련의 폭력 사건이 일부 개인에 의해 자행된 것이지 호주 내 제도적, 조직적인 차원에서 인종차별주의가 존재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입장은 학생들이나 다른 전문가, 심지어 인도의 언론으로부터 호주 사회 내에 팽배해 있는 인종차별주의를 부인하고 은폐하려는 의도라고 비난받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2009년 인도유학생에 대한 폭력 사건과 정부의 대응에 관해 연구한 Kevin Dunn의 2인의 연구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호주 내 인도계 이

민자에 대한 백인 호주인들의 숨은 인종차별주의가 여실히 드러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Dunn et. al., 2011). 특히 그들은 이번 사건 발생 이후 호주 연방정부가 보인 태도에서 위 폭력 사건을 인종차별에 의한 사건으로 규정 짓지 않으려고 무한히 노력했다는 점을 비난하며, 인종차별주의에 대한 부인을 호주에 새롭게 대두된 ‘신 인종차별주의’라고 명명했다(B Dcosta, 2010).

이와 함께, 그동안 해외유학생의 안전문제가 주로 그들이 속한 교내에서만, 그리고 해당 교육기관의 책임으로만 간주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이 때문에 최근 호주 내 해외유학생의 안보·안전 이슈, 나아가서 유학생 통합을 위한 다문화정책 및 그들에 대한 정부의 복지 지원 등이 호주 사회의 중요한 현안으로 부각되었다. 설상가상으로, 2010년에 유엔인권 위원회가 발간한 ICERD 호주보고서는 호주에서 유학하고 있는 해외유학생들의 인권이 호주 국내학생들의 인권과 다른 수준에서 보호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호주 해외유학생들의 인간안보, 반차별, 주택, 고용 및 정보에 대한 권리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잘 보호받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Simon Marginson 외 연구자들은 해외유학생들이 대중교통비 할인 및 무료의료서비스,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 등 국내학생들에게 주어지는 다양한 혜택으로부터 체계적으로 배제당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Marginson, 2011). 예를 들면, 2003년 기준 호주 고등교육기관의 연간 수입에서 해외유학생의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14.4%이지만, 유학생 중에 정부가 제공하는 장학금을 받는 학생은 전체 2%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특히 해외유학생들이 호주에 장기간 체류하는 ‘거주자’라는 점, 특히 그들이 다른 호주 출신 거주자들처럼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세금을 내고 있지만 그들은 납세자로서의 의무만 강요당할 뿐 권리는 향유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되었다. 그들은 또한 이들 유학생은 인종 또는 에스니시티, 종교에 바탕을 둔 다양한 형태의 차별을 경험하고 있고, 그들의 정치적 행위자로서의 주체성도 거부당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다양한 측면에서 호주 거주 해외유학생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들이 제기

되고 있는 가운데 2010년 3월에 호주인권위원회 및 국립사회과학연구원에 의해 개최된 심포지엄에서 Adam Graycar 교수는 향후 호주정부가 교육이주 정책 개혁을 위해 참고해야 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Graycar, 2010). 그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인도, 파키스탄을 포함한 남아시아 출신 유학생, 무슬림, 원주민을 포함한 특정 문화 집단이 인종적, 문화적 차별 및 폭력 행위에 노출될 위험도가 높다.
- 남아시아 출신 유학생의 안보 위협은 실업 및 사회적 배제가 높은 지역에서 빈번히 발생하며, 주로 밤늦은 시간에 혼자 외출시 그 위험도가 가장 높다.
-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 해외유학생의 경우에 부도덕한 고용주로부터 경제적 착취에 시달리고 있다. 구체적으로 학기 중 합법적 최대 고용시간인 일주일에 20시간을 초과해서 일을 하도록 강요받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 부도덕한 또는 관리가 소홀한 교육서비스 기관에 의한 해외유학생에 대한 경제적 착취는 현재와 미래 해외유학생들 사이에서 호주 교육 규제에 대한 불신을 확산시키는 주요 요인이다.
- 연방정부의 기술이민 직종 즉 MODL 발표 이후에 급증한 해당 분야 강의의 질이 수준 이하이다.
- 호주 내 해외유학생의 임시체류자로서의 지위와 그들에게 가중된 경제적 부담감으로 인해 그들의 인권은 더욱 취약하게 보호받고 있다.
- 여학생의 경우에는 남학생보다 상대적으로 신체적 공격 등에 더욱 취약한데, 이들은 직장이나 숙소 등에서 발생하는 성추행에 등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요구에 대응해서 노동당정부는 부르스 베어드(Bruce Baird) 자유당 소속 전연방의원을 중심으로 ESOS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실시했다. 그의 ESOS 재검토 작업에는 인권 및 인종 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지지 않

았지만, 해외유학생의 삶의 조건 및 교육기관의 질과 서비스 등이 포괄적으로 검토되었다. 그의 보고서에서 베어드 전의원은 많은 학교들이 비자 취득에 대한 수요만 충족하려고 할 뿐, 질 좋은 교육기회를 학생들에게 부여한다는 교육산업의 본 목적을 일그러뜨렸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그는 부실운영 교육기관들은 단순히 영주권을 발급하는 공장에 지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그는 이러한 국제교육 산업의 폐해는 오래 전부터 시작된 것으로 그 뿌리가 깊다는 판단 하에 학교들이 본래의 의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현 정부가 강력한 변화를 추동할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호주 교육산업의 미래를 향한 제언을 제시했는데, 아래는 그가 제언한 내용이다.<sup>36)</sup>

- 해외유학생을 위한 지원 확대와 양과 질이 담보된 정보 제공
- 학생들이 부적절한 교육기관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강력한 소비자 보호 메카니즘 제공
- 해외유학생을 유치하는 교육기관에 대한 규제 강화
- 호주에서 유학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임시 거처 지원

베어드 전의원의 제언은 호주 교육산업의 개혁뿐 아니라, 호주 교육산업의 소비자로서 해외유학생의 권리 보장, 그들에게 양질의 정보 제공, 교육 서비스의 질 제고, 위협에 처한 유학생의 거처 지원 보장 등을 강조한 것이다. 2010년 3월에 베어드 전의원의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호주사회에서 해외유학생의 안보, 안전,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은 더욱 증대되었다. 이러한 관심 속에 같은 해 6월에 호주사회과학아카데미의 Jakubowicz 교수 등은 호주 내 해외유학생의 안녕(well-being)이 위협받는 구체적인 경우를 조사해서 발표했다(Jakubowicz & Monani, 2010). 다음은 그 경우를 열거한 것이다.

36) The Hon Julia Gillard MP's Media Release, "Bruce Baird to head up international students final report", 9 March 2010. (<http://ministers.deewr.gov.au/gillard/baird-review-international-students-final-report>)

- 학생의 비현실적인 기대와 부적절한 준비 등으로 인해 교육기관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 교육기관으로부터 효과적인 학습 기술과 영어지원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 집단 학습방식에 익숙해서 호주의 개인적 평가과정에 적응하기 어려운 경우
- 등록한 교육기관에서 학업성취도가 낮아서 비자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 등록금을 충당하기 위해 도박을 했다가 빚을 진 경우와 같이 범죄 집단으로부터 갈취 및 모욕을 당하고 있는 경우
- 도난이나 강도를 당한 경우
- 인종차별주의적 모욕이나 공격을 당한 경우
- 외로움이나 소외를 느끼는 경우
-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구매나 서비스 계약으로 인해 재정적 문제에 직면한 경우
- 위 문제 등으로 인해 정신적 건강에 이상이 생긴 경우
- 집주인의 권한 남용, 즉 비위생적인 주거환경 또는 주택 규모에 비해 너무 많은 세입자를 받아들인 경우
- 고용주나 집주인에 의한 성희롱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모국에 의해 정치적 행사 등에 참여하기를 강요받는 경우

또한 같은 보고서에서 앤드류 교수는 호주에서 유학하고 있는 대다수 학생들이 긍정적인 경험을 보고하고 있지만 일부 학생들이 위와 같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실제 2009년 12월~2010년 6월에 연방정부가 유학생 5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가 호주의 치안이 좋다고 응답했다고 한다.<sup>37)</sup> 또한 ‘학업에 만족하는가’라는 질문에는 84%가 그렇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하지만

37) The Age, 2011-1-11, "Foreign Students Feel Safer".

<http://www.theage.com.au/national/foreign-students-feel-safer-20110110-1914w.html> (검색일: 2011/9/14)

이는 영국, 유럽, 북미, 남아공, 싱가포르, 뉴질랜드 등 162개 대학의 유학생 치안 만족도(89%)에 비해 낮다는 점, 또한 앞서 언급했듯이 인도 등 남아시아계 유학생들이 안전에 더욱 취약하다고 느낀다는 측면에서 고려의 대상이다. 결과적으로, 2009년 인도 유학생에 대한 수차례 폭행사건이 발생한 이후 호주사회에 해외유학생들의 교육의 질 문제 뿐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개인의 안보·안전, 인권 침해 등의 문제가 중요한 화두로 제기되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 5. 변화를 위한 노동당정부의 정책적 대응

### 1) 이민정책<sup>38)</sup>

2007년 말 연방선거에서 승리한 후 정권을 잡은 노동당 정부는 이민자 유입 증가를 통해 인구를 증가시켜 보다 ‘강한 호주(Big Australia)’를 이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었다. 이런 맥락에서, 노동당 정부는 취임 직후 영주기술이민 프로그램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전 보수연합정부 하에서 2007~2008년 한 해 동안 승인하기로 한 영주기술이민 비자 수를 6000개에서 31,000개로 대폭 확대한다고 발표했었다. 이는 그 해 이민프로그램 중 기술이민이 68%를 차지함을 의미하며 기술이민의 비중을 상당히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어서 2008년 4월에 노동당 정부는 해외유학생들이 학생 비자 취득 시에 자동적으로 일주일에 최대 20시간 근무를 허용하는 노동비자를 발급받도록 정책을 변경했다. 이는 과거에 유학생들이 학생 비자를 발급 받은 이후 따로 노동비자를 신청해서 발급받아야 했기 때문에 추가 비용 및 시간이 소요되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또한 러드 정부는 인도 및 인도네시아, 태국 출신의 학생비자 신청자들이 전자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비자 승인과정을 더욱 용이하게 변경하는 정책을 도입했다.

38) 노동당정부의 이민정책 부분은 주로 호주연방의회가 발간한 “Overseas Students: immigration policy changes 1997~May 2010”을 참고로 했음.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발생 이후 경기침체로 인한 실업률 상승을 우려한 노동당 정부는 영주기술이민 프로그램을 정부나 고용주들이 필요로 하는 특정 기술에 초점을 맞춘 시장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또한 그동안 해외유학생 증가에 초점을 맞춘 기술이민 정책으로 인해 국내 노동시장에 수요와 공급에 불균형이 생겼다는 판단 하에 이뤄진 것이다. 구체적으로, 2009년에 정부는 당초 계획했던 영주 기술이민 비중을 20% 감소시키기로 결정했다. 또한 이민자들이 호주의 노동시장에 즉각 투입되어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비자 취득 요건에 영어 실력 강화와 기술직업군(trade) 취업 경험의 비중을 확대했다. 이는 달리 해석하자면, 그동안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았지만 호주에서 유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대거 기술이민자로 유입되었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2009~2010년에 기술직 비자 승인 비중을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한편, 2009년에 인도 학생들에 대한 폭력 발생 이후 호주 정부는 해외유학 국가로서의 호주의 명성을 지키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정부는 해외유학생의 안전과 안녕을 위한 위원회를 발족시켰으며, 호주정부위원회를 통해 전국해외유학생전략을 수립했다. 또한 앞서 설명했듯이, 베어드 전 연방의원을 통해 호주 내 해외유학생에 대한 사안들에 대해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이어서 2009년 8월에는 유학생 비자 신청자들의 재정 요건을 강화하는 정책안을 내놓았다. 즉, 정부는 유학생들이 비자 신청 시 학업 시작부터 완료시점까지 필요한 학비 및 생활비를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는 재산 증명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비자를 승인해준다는 것이었다. 이는 과거 하워드 정부 시절에 완화시켰던 비자승인 충족 조건을 원상태로 회복한 것이었다. 노동당정부는 이 조치를 통해 해외유학생의 학업 기간 중 시간제 근무 의존도를 줄이고자 한다고 밝혔으나, 실제 이 조치 시행 이후 유학생 비자 신청 및 승인 건수의 급격한 감소를 초래했다.

다른 한편, 2010년 2월에 노동당정부는 기술이민 프로그램의 주요한 정책 개혁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종전의 MODL을 폐지하고, 새롭고 더욱 구체적인 ‘기술이민리스트(SOL, Skilled Occupation List)’를 발표하였다.

400여개 직종을 명시했던 MODL과 비교했을 때 SOL에 명시된 직업 수는 181개로 줄어들었고, 그 내용 또한 더욱 구체적으로 언급되었다. 여기에는 주로 보건/의료, 엔지니어링 분야, 초중고 및 특수장애학교 교사, 건축, 텔레커뮤니케이션 등 고급 전문직이 포함된다. 결과적으로, 이는 SOL을 통해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유학생의 수를 제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노동당 정부가 의도했던 대로 전 정부에 의해 강화된 기술이민과 유학생 프로그램 간의 직접적 연계가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반면에, 노동당정부는 2010~2011년 이민프로그램에서 기술이민자 유입 비중을 확대했다. 전년에 비해 전체 5750명의 기술이민 비자를 더 많이 승인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고용주 스폰서 비자 승인 건수를 9150개 증가시킨 반면에 GSM 비자 승인 건수 3600개 줄이기로 한 것으로서 이는 정부의 시장 '수요 중심'의 기술이민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기술이민 프로그램에서 고용주 스폰서가 있는 이민자의 유입을 늘이되, 반면 독립기술이민자의 유입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노동당 정부가 2010년 5월에 확정해 공표한 SOL은 181개의 관리, 전문, 기술관련 직종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 직업훈련 교육분야의 유학생 비중을 늘리기 위해 포함시켰던 요리, 미용 등과 같은 직종이 제외되었다. 특히 SOL 직종 종사자만이 GSM 프로그램 하 독립이민을 신청할 수 있도록 자격을 제한했다. 이 조치는 2010년 7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이로 인해 호주의 기술이민프로그램은 해외유학생을 겨냥한 교육 시장 중심이 아니라 노동시장 중심으로 운영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단, 정부는 SOL은 해마다 호주 노동시장과 경제 여건에 따라 수정 변경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노동당 정부의 기술이민프로그램 개혁으로 인해 호주의 교육기관, 특히 대학보다는 직업훈련 및 영어 분야의 해외유학생 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었다. 또한 SOL 프로그램은 고용주의 스폰서에 대한 중요성을 확대함으로써 고용주의 권한을 강화하는 반면에 유학생의 취약성은 심화되는 부정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전문가에 의해 제기되었다. 그러나 종합적으로 볼 때, 노동당의 이러한 개혁은 해외유학생 수의 일시적

급감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유학생들이 호주 경제가 필요로 하는 기술을 적절히 습득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2) 해외유학생 교육 분야의 질과 권위 회복을 위한 정책: 안보·안전, 인권 및 지역공동체 참여

2009년 호주 정부는 외국인 유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유학생 교육기관의 전면 재등록과 유학원 명단 공개를 골자로 하는 유학생교육서비스(ESOS)법을 개정한 후 2010년부터 이를 적용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개정과 함께 향후 2년간 50개 부실 전문대를 폐교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각 주에서도 상당 수 부실 민간교육기관이 주정부에 의해 폐교되거나 또는 등록을 취소함으로써 자발적으로 사업을 철회했다. ESOS 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sup>39)</sup>

- 현재 연방 유학생 교육기관 및 코스 등록부(CRICOS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돼 있는 모든 교육기관들이 오는 2010년 12월말까지 새로운 기준에 따라 재등록해야 한다.
- 이와 함께 새로 강화된 등록기준에는 교육기관의 주목적을 교육제공으로 할 것과 만족할 만한 수준의 교육을 제공할 능력을 입증해야 한다는 두 가지를 추가하고 있다. 정부가 이러한 재등록 과정을 통해 교육기관들의 등록 여부를 재검토할 수 있게 된다.
- 또한 유학생 교육기관의 유학원 이용 등에 관한 투명성과 책무성 강화를 위한 새 조치로 각 교육기관이 그들을 대표하며 홍보하는 국내외 모든 유학원 명단을 공개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 ESOS 법안을 준수하지 않는 교육제공자들을 폐쇄조치 한다.

39) AEI, "Education Services for Overseas Students Amendment (Re-registration of Providers and Other Measures) Act 2010", (검색일: 2011-09-20) [http://www.aei.gov.au/Regulatory-Information/Education-Services-for-Overseas-Students-ESOS-Legislative-Framework/ESOS-Act/Documents/ESOS\\_Q\\_A\\_25\\_02\\_2010\\_pdf.pdf](http://www.aei.gov.au/Regulatory-Information/Education-Services-for-Overseas-Students-ESOS-Legislative-Framework/ESOS-Act/Documents/ESOS_Q_A_25_02_2010_pdf.pdf)

또한 해외유학생을 위한 양질의 교육서비스 제공과, 그를 통해 호주 국제 교육의 미래를 공고히 하겠다는 목적으로 호주정부위원회(Council of Australian Government)는 2010~2014년 호주해외유학생전략을 마련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sup>40)</sup>

<b>목적:</b> 호주의 해외유학생들이 고품격 유학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는 궁극적으로 호주내 고품격 국제교육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함				
<b>결과:</b> 해외유학생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호주내 유학 및 생활에 대해 사전에 정보를 듣고 선택할 수 있다.</li> <li>▪ 호주에서 긍정적인 유학 및 생활 경험을 가질 수 있다.</li> <li>▪ 성공적인 미래를 위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li> </ul> 호주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국제교육 영역을 확보한다.</li> <li>▪ 고품격 교육에 대한 명성을 쌓는다.</li> <li>▪ 질적 교육을 담보하는 규제틀을 갖춘다.</li> </ul>				
액션 영역	학생 웰빙	교육의 질	소비자 보호	더 나은 정보
이니셔 티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 개인안전 가이드 수립</li> <li>▪ 교육기관의 학생 안전계획 수립</li> <li>▪ 의료보험 혜택강화</li> <li>▪ 전국적 공동체 관여 전략 수립</li> <li>▪ 해외유학생 상담위원회 설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ustralian Quality Training Framework (AQTF) 강화</li> <li>▪ ESOS법 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기관 폐쇄 태스크팀 구성</li> <li>▪ 학생들의 불만 처리 및 분쟁 해결 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tudy in Australia 포탈 강화</li> <li>▪ 정부서비스 및 등록금, 할인 등에 대한 정보 제공</li> <li>▪ 해외유학생 대상 서베이 실시</li> </ul>

40) Council of Australian Government, 2010. "International Students Strategy for Australia: 2010-2014".

다음은 앞에서 언급한 각 액션 영역별에서 호주정부가 현재까지 취하고 있는 주요 조치이다.

○ 해외유학생의 안녕(웰빙)

- 2009년 9월 캔버라에서 부총리 주관 하에 개최된 해외유학생 라운드테이블 회의에서는 해외유학생과 정부 간의 지속적인 의견 교환을 위해 학생대표기구를 설립하는데 동의했다.
- 빅토리아 주정부는 2009년에 해외유학생이 경찰과 24시간 연락할 수 있는 핫라인을 개설했다. 이를 통해 유학생들은 지역 내 안전 관련 정보를 획득할 수 있고, 다중 언어로 제공되는 법률, 복지, 숙박, 금융 및 기타 이슈들에 대한 자문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 빅토리아 주 경찰은 인도인 공동체와 다른 해외유학생들이 폭력범죄의 희생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 시행, 감시할 수 있도록 두 개의 신설 팀을 구성했다.
- 뉴사우스웨일즈(NSW) 주지사 산하 해외교육위원회는 주내 해외유학생의 여행을 지원하는 전략을 수립했다. 대중교통 할인 및 티켓 선불결제 등이 전략에 포함되었다. 또한 NSW 주경찰과 교육기관, 영사관과 학생조직 간의 관계를 강화시켰고, 이를 통해 해외유학생 축제 등과 같은 사회적 이니셔티브를 발굴하도록 했다.
- 각 지자체 정부들은 해외유학생의 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해 위험 지역에 대한 경찰의 감시를 강화하고, 범법자에 대한 사법부의 권한을 강화시켰다.
- 호주인권위원회는 유학생들이 차별이나 폭력에 노출되었을 때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교육기관, 경찰, 지방 의회 및 다른 네트워크 기관들 간의 파트너십을 촉진할 것이다.

○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현재까지 취해진 조치

- 각 주와 자치령은 해외유학생 교육기관들이 정부가 제시한 평균 수준의 질 및 재정상태를 확보하고 있는지 신속히 조사했다.

- 2010년에 ESOS 법령이 개정되었고, 개정안은 신규 등록 교육기관과 기존의 교육기관 모두가 더 엄격하게 새롭게 구성된 자격요건을 충족시켜 2010년 말까지 재등록 할 것을 요구했다.
- ESOS의 또 다른 개정안은 교육기관들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그들과 거래하는 유학원의 리스트를 2010년 7월까지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 고등교육기관 및 직업교육 및 훈련 기관을 통제하는 전국 단위의 기구를 2011년까지 신설한다.

○ 고객 보호를 위해 현재까지 취해진 조치

- 빅토리아 주정부는 해외유학생들의 법률지원 서비스 강화를 위해 지역 법률서비스연합에 250,000 호주달러를 추가로 지급했다.
- COAG는 2009년에 통과된 the Australian Qualification and Training Framework 변경 안에 따라 학생들의 등록금 보호 조항을 강화시켰다.
- 연방정부는 교육기관의 폐업에 따라 피해를 입은 해외유학생들이 학업을 지속하기 위해 새로운 비자를 신청할 경우 무료로 비자 업무를 대행해주기로 결정했다.
- 웨스트오스트레일리아 주정부는 해외유학생이 겪고 있는 갈등을 해결하는데 중재 및 도움을 주는 독자적인 메카니즘인 해외교육조정자를 임용했다. 조정자는 교육분야 및 광범위한 공동체와 밀접하게 일하며 학생들의 권리, 의무, 웰빙에 관련된 문제 해결에 역할을 한다.
-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주 훈련지원국(Office of the Training Advocate)은 호주교육분야에서 독특한 독립법률기관이다. 이 기구는 학생들 문제 해결을 지원하기도 하고, 옴부즈맨처럼 분쟁이 생겼을 경우 외부에 호소하거나 독립된 수사를 할 수도 있음. 이는 학생들이 직면한 문제가 더욱 악화되기 전에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기 위함이다.
- 퀸스랜드주의 브리스번 시 정부의 해외유학생 숙박 태스크팀은 하숙 형태의 숙박업에 대한 규제조항과 학생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재검토했다.

- 뉴사우스웨일즈 주정부는 해외유학생을 위한 소비자 가이드북을 출판했다. 그 가이드북은 해외유학생들이 주내에서 자신들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쇼핑, 환불, 이동통신, 자동차 구매 및 임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더 나은 정보 제공을 위해 현재까지 취해진 조치

- 빅토리아 주정부는 해외유학생들에게 더 나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Study Melbourne 웹사이트를 다시 개발하기로 결정하고 1만 호주달러를 투자했다.
- 빅토리아 주정부는 멜번 공항에 해외유학생 환영부스를 개설해서 학생들이 도착하는 시간에 맞춰 운영하고 있다. 주로 유학생에게 필요한 정보 및 해외유학생 케어서비스 연락처 등을 제공하고 있다.
- 호주연방정부는 ‘호주 유학 및 생활 가이드(Guide to Studying and Living in Australia)’를 출판해서 신규 해외유학생들이 호주에 도착하기 이전에 모국의 집으로 우편 배포하고 있다.
- 뉴사우스웨일즈 주정부는 ‘해외유학생을 위한 뉴사우스웨일즈서비스 가이드(Guide to New South Wales Services for International Students)’를 65,000부 출판해서 260개 교육 기관에 배포했으며 향후 더욱 확대하여 배포할 예정이다.
- 뉴사우스웨일즈 주정부는 해외유학생들을 위한 정보, 즉 NSW에 도착하기, NSW에서 생활하며 공부하기, 지역공동체 조직 및 지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웹 포털사이트([www.internationalstudents.new.gov.au](http://www.internationalstudents.new.gov.au))를 개설했다.

○ 거버넌스와 시행

- 이들 전략은 주로 the Ministerial Council on Tertiary Education and Employment(MCTEE)에 의해 운영되고, 다른 연방정부, 주와 자치령 정부 차원의 해외유학생을 위한 이니셔티브와 상호 보완되어 운영될 계획이다.

- 그동안 노동당정부가 해외유학생들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구성한 위원회와 학문 분야의 투자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sup>41)</sup>
- 범정부간 Task Force 설치
  - 외국 유학생의 복지 및 안전 문제에 대한 관계부처간의 협의 조정을 목적으로 호주 국가안보보좌관(National Security Advisor)을 위원장으로 하고 외교통상부, 노동부, 이민부, 교육부 및 법무부가 참여
- 교육부 산하 International Student Task Force 설치
  - 외국 유학생의 복지 및 안전 문제를 전담하는 교육부 내의 조직으로 각 지방정부(state and territory government) 외에 노동부 등도 참여
- 24시간 가동 Hot-line(1300-369-079) 개설
  - 외국 유학생들은 동 Hot-line를 통해 신변안전 우려를 표명할 수 있으며 접수된 내용은 웹사이트 “www.studyinaustralia.gov.au”에 탑재
- 외국 유학생들 안내 책자 배포
  - Guide to Studying and Living in Australia를 비자 발급시 배부
- 외국 유학생 대표 초청 라운드테이블 회의 개최(2009.9.14-15)
  - 외국 유학생의 숙소, 안전 및 복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호주 부수상 주도 하에 19개 국가의 유학생 대표 31명을 선발해서 라운드테이블 회의를 개최함. 이 회의를 통해 6개 주요 영역에서 정부의 액션을 요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 중 상위 세 개 항목은 우선순위가 매겨짐.
    - 입국 전 정보와 비자 여건에 대한 정보 (우선순위)
    - 수준 높은 교육서비스 (우선순위)
    - 생활에 필요한 기본서비스로의 접근성 확보(우선순위)

41) 주호주대사관, 2011. “호주정부의 외국 유학생 신변안전 강화 조치 발표,” 교육정보 게시판, 2009-6-15.



- 호주내 사회통합
  - 공정한 대우
  - 유학비용
- 호주인도연구센터(Australian Indian Institute, AII)에 연구용역 의뢰
- 멜번대학, 라트로브대학, 뉴사우스웨일즈대학이 참가하는 AII에 8,106만 호주달러를 투자하여 향후 호주와 인도 간의 관계 개선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것을 요청함.
- 호주 내 38개 대학의 모임인 Universities Australia도 2009년 6월 4-5일에 모임을 갖고 외국 유학생들의 신변 안전 문제를 강화하기 위한 10개 행동계획(Action Plan)을 발표함.
- ①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외국 유학생 안전에 대한 예방 활동 강화
  - ② 호주 대학 및 정부와 호주 소재 외국 공관과의 정보공유 및 소통 강화
  - ③ 외국 유학생의 도착시 숙소 제공 등을 포함한 숙소 확보 노력 전개
  - ④ 지방정부가 외국 유학생에 대해서도 교통 할인권 혜택을 부여하도록 장려
  - ⑤ 외국 유학생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강화
  - ⑥ 호주 정부와 공동으로 외국 유학생에 대한 호주 문화 이해 활동 장려
  - ⑦ 호주 유학에 적합한 외국 유학생들에게 사증이 발급되도록 장려
  - ⑧ 외국 유학생에 대한 상담 활동 강화
  - ⑨ 외국 유학생들이 학교 내 자치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
  - ⑩ 외국 유학생들에 대해 질 높은 교육이 제공되도록 노력

## 6. 소결 : 한국에의 시사점

앞서 살펴보았듯이, 호주의 교육이주에 대한 사례연구는 호주의 교육이주가 교육산업 정책뿐 아니라 국가적 인구, 이민, 고용, 사회통합과 같은 다양한 분야의 정책들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더욱이 최근에 백인 젊은이들에 의한 인도계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일련의 폭행 사건을 계기로 유학생 개개인의 안보, 안전, 안녕, 나아가서 인권에 대한 사안 등이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심도 있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와 함께, 호주 사례는 교육이주가 정치권에서 경쟁적으로, 때로는 경합하는 관점에서 다뤄지고 있다는 점을 드러낸다. 즉, 호주의 정부를 구성하는 주요 정당인 보수연합이나 노동당은 교육이주를 크게 인구 및 경제 정책 차원에서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지만, 그 내용이나 중점적으로 다루는 이슈 등에서는 엄연히 차이를 드러낸다.

예를 들어, 보수연합 정부가 교육이주를 주요 수출 산업이자 우수인력 유치를 위한 기술이민 측면에서 강조했다면, 그 뒤를 이은 노동당 정부는 넓게는 이민자 수 확대를 꾀하면서도 국내 노동시장 여건 등을 감안해서 교육이주와 기술이민 간의 관계를 약화하고자 노력했다. 특히, 2008년의 글로벌 경제위기라는 대외적 악재와 2009년 대내적으로 연이어 발생한 유학생 폭행사건 등으로 인해 노동당정부는 한편에서는 교육산업의 질 제고와 함께 유학생의 국내 노동시장 진입에 장벽을 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

2008년 집권 이후 교육산업 및 유학생 정책의 변화로 인해 지난 십 여 년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유지해 온 호주의 교육이주는 작년 2010년부터 다소 감소하는 추세로 돌아섰다. 해외유학생에 대한 재정적 의존도가 높은 호주대학 및 여타 교육기관, 또한 유학생 집중 거주 지역공동체에서는 유학생 유입의 감소가 심각한 재정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 호주의 주요 일간지인 <The Australian>의 2011년 1월 6일자에 호주 유학생 교육시장은 향후 3년간 상당한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고 보도했다.<sup>42)</sup> 이와 함께, 유

42) The Australian, 2011/1/6. "Education faces hard years".

학시장이 최대 수입원인 빅토리아주의 경우에는 현재 수십 만 불의 적자를 기록하면서 모나쉬(Monash) 대학을 비롯한 몇몇 대학들은 교직원 구조조정을 강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재정난 및 유학생 관련 직종 종사자들의 고용 불안 등이 현재 호주사회의 불안요인으로 부상한 가운데, 노동당 정부는 과거 정부처럼 기술 이민 정책을 활용한 유학생 증가보다는 국제교육산업의 질 개선 및 유학생의 생활 여건 개선을 통해 그들의 안전, 안보, 안녕, 지역사회 참여 등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양질의 교육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교육산업이 발전할 수 없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현 노동당 정부가 취하고 있는 교육산업 및 이민정책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개개인의 안전, 안보, 안녕, 인권 등이 보호되지 않는 상황에서 호주가 더 이상 해외유학생들에게 매력적인 유학 국가로 선택될 수 없다는 측면에서, 현 정부 및 민·관 교육기관들의 유학생을 위한 전략 수립 및 그에 따른 정책 수립은 시의 적절함과 동시에 타당하다. 하지만 그동안 제기된 교육산업 및 유학생에 대한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서 아쉬운 점 몇 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Jakubowicz & Monani, 2010).

첫째로, 정부의 유학생 전략에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채 학생들의 지역공동체 관여 등이 언급되었으나 결정적으로 인종차별주의에 대처하는 어떠한 전략도 없다는 점이다. 둘째는 비용이나 접근성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던 교통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미흡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세 번째로 지적할 수 있는 숙박문제에도 해당된다. 앞서 전문가들에 의해 제기된 문제에서 유학생의 숙박비용과 안전, 위생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언급되었지만 정부는 그 어떤 제도적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마지막으로, 유학생의 인권 보장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

호주의 다문화주의 전통이 문화 관계적 측면 뿐 아니라 사회정의적인 측면 또한 강조한다는 점에서 유학생의 인권 보호에 대한 정부의 관심 부족은 지난 십여 년 동안 보수연합 및 노동당 정부 모두가 다문화 정책을 사실상 방기하고 있는 현실의 연속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겠다. 그러나 현재

호주에서 유학생들이 내국인과 동등한 납세의 의무를 지며 거주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들의 인권 논의는 향후 이민자의 시민권 및 거주권 논의와 연계되어 지속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 결론



## 1. 연구 요약 및 사례연구의 시사점

일본과 호주의 유학생 지원 정책은 역사적 배경 및 사회적 환경에서 큰 차이가 있다. 무엇보다 일본은 민족적·문화적 동질성을 강조하면서 이민을 제한하고 있는 국가인 반면, 호주는 대표적인 이민국가로서 인종·민족적 다양성이 높고 유학생 위주의 교육산업이 크게 발전한 서로 다른 모델이다. 이러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에서 이 두 사례를 함께 고찰하는 이유는, 첫째 두 국가가 아시아 지역 내부의 대표적인 유학생 목적지로서 각기 영어권 및 비영어권 국가의 모델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일본은 비영어권 국가로서 한국과 유사점이 더 많지만, 다른 한편 아시아 역내의 영어권 유학생 유치 국가들의 정책 동향이 비영어권 국가로의 유학생 유입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사회경제적 배경이 상이한 호주 사례도 고찰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고등교육의 글로벌화가 진행됨에 따라 유학생 지원 정책, 더 넓은 의미의 교육이주 정책이 직면하게 될 새로운 정책 과제들을 이 두 사례는 서로 다른 방향에서 보여준다. 한국이 유학생 유치정책을 도입하는 단계에 있다면, 일본은 아시아의 선도적 유학생 목적국으로써 유학생에 국한된 지원정책을 넘어서 일본 대학과 일본사회 전반의 글로벌화,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을 일본사회로 수용하는 문제를 큰 틀에서 고민하기 시작하였다. 이민정책의 역사가 축적된 호주는 유학생 정책과 이민정책의 연관성, 유학생 증가에 따른 사회문화적 갈등과 인종 차별의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 많은 것을 시사해주는 사례이다.

### 1) 유학생 정책의 전개 과정 : 일본, 호주의 사례

본 연구는 호주와 일본의 정책 형성 과정을 시계열적으로 고찰하고 그 과정에서 제기된 쟁점들을 다각적으로 살펴보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국가별 정책들을 일정한 분석틀에 맞추어 비교 분석하거나 단계별 분석으로 정교화하지 못한 것은 이 연구의 한계이다. 사실 사회문화적 배경이나 지역적 특성이 상이한 호주와 일본, 그리고 한국의 사례를 하나의 단선적인 발전

단계에 놓고 비교하는 것은 유학생 정책 및 다문화 정책의 다양한 측면들을 지나치게 단순화할 우려가 있다. 본격적인 비교분석은 차후 연구의 과제로 남겨두며, 여기에서는 각 국가의 유학생 정책의 전개과정을 시론적인 차원에서 몇 가지 단계로 나누어 보고, 각 단계에서 제기되는 정책 쟁점들을 전반적으로 개괄해보고자 한다.

첫째, 유학생 정책의 출발점은 ‘상호이해의 접근’<sup>43)</sup>, 곧 학생의 이동과 교육의 교류 확대를 위해 국제적 상호이해를 증진하는 것이었다. 호주 정부의 콜롬보 플랜(1950)이 전형적인 사례이다. 일본이 1983년 도입한 유학생 10만인 계획도 개발원조 정책의 성격에 가깝다고 평가된다(Ota, 2003). 즉, 개발도상국 출신 학생의 유학을 지원함으로써 일본에 친화적인 외국인 지도자를 양성하고 아울러 국제사회에 대한 지적공헌을 높이는 것을 정책의 목적으로 삼았다. 국제협력을 위한 유학생 교류가 유학생에 관한 정책의 출발 단계라고 볼 수 있다.

둘째, 유학생의 양적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시기는 교육산업의 발전을 위해 외국인 학생을 유치하고자 하는 단계이다. 호주의 경우 1990년대 중반부터, 특히 하워드 총리가 이끄는 보수연합 정부 집권기(1996~2007)에 유학생 수가 급증하였다. 이 단계의 특징은 ‘수익창출 접근’, 곧 유학생 유치의 가장 큰 동기가 교육산업의 규모 확대 및 수익증가에 있다는 점이다. 호주의 경우 대학에 대한 정부 보조금의 감축이 대학들로 하여금 적극적인 유학생 유치 정책을 도입하도록 하는 촉매제가 되었다. 일본의 경우 2008년 발표한 ‘유학생 30만인 계획’이 이러한 전환점이라 볼 수 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일본사회에서는 청소년 인구 감소로 법정 학생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이 늘어나면서 유학생 유치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었다(Ota, 2011).

한국의 ‘Study Korea 프로젝트’(2005)는 여러 가지 목표를 제시하고 있지만 가장 큰 동인은 교육 수지에서서의 무역적자 개선 및 대학의 발전전략에

43) 본 연구의 서장에서 유학의 동인을 분석하는 시각을 크게 네 가지, 즉 숙련이주 접근(skilled migration approach), 수익창출 접근(revenue-generating approach), 능력형성 접근(capacity building approach), 그리고 상호이해 접근(mutual understanding approach)로 구분한 바 있다. 이 네 가지 접근을 기준으로 하여 여기에서 분석하는 사례국가 유학생 정책의 단계별 전개과정을 살펴본다(본 보고서의 17~18쪽 참조).

있다고 일반적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유학생 유치의 규모 확대를 위해서 유학생 비자에 대한 통제를 완화하고, 대학 뿐 아니라 어학연수, 직업훈련 등 다양한 교육과정에서의 유학생 증가를 허용하게 된다.

흥미로운 것은 이 단계에서 국제적 경쟁과 국내적 관리가 각각 중요한 요인으로 부각된다는 점이다. 유학생 유치는 이른바 국가의 품격이나 문화적 영향력을 상징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인근 국가들 간에 경쟁적으로 관련 정책이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sup>44)</sup> 한편 유학생 수의 급증은 불가피하게 교육의 질 관리 문제, 유학생 증가의 사회적 부작용 등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킨다. 각국 정부는 유학생 비자에 대한 통제, 대학에 대한 예산 지원의 조절, 교육기관(특히 어학연수 및 직업훈련기관)에 대한 허가 기준을 강화(혹은 완화)함으로써 이러한 갈등을 조절하는 사례들이 나타난다.

셋째, 고등교육 기관의 유학생 유치 확대는 필연적으로 유학생의 졸업 후 진로 문제와 관련하여 기술이민 정책의 변화를 불러오게 된다. 유학생 규모의 일정한 증가는 ‘기술이민 접근’을 수반하는 것이다. 호주는 이민국가라는 특징 때문에 사실 대학의 유학생 유치전략 자체가 유학생의 기술이민을 우대하는 이민정책과 맞물려 추진되었다. 호주 정부는 호주에서 유학경험이 있는 외국인들의 이민을 우대하는 다양한 정책(포인트 제도, 취업이민 수요리스트 MODL 등)을 운영하였다. 일본의 경우 ‘30만인 계획’의 일환으로 외국인 유학생의 일본 기업 취업 등 졸업 후 사회수용 프로그램을 강조하고 있다. 물론 전통적 이민국가인 호주에 비교하면 외국인 취업의 규모나 지원 정책의 범위도 협소하긴 하지만, 유학생을 일본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야 한다는 인식은 일본에서도 뚜렷하게 확산되고 있다. 본 연구진이 일본 전문가들을 면담한 결과, 두 가지 이유가 주로 언급되었다. 졸업 후 일본 내 취업이 용이하지 않다면 일본으로의 유학을 희망하는 외국인이 크게

44) 한 예로, 본 연구진이 면담한 일본의 전문가들은 한국 대학들의 적극적인 글로벌화와 영어 강의의 확대, 한류 등으로 아시아 학생들이 한국에 대해 호감을 갖는 경향 등을 주목하고 있었다. ‘한국이 오히려 앞서가고 있다’는 이들의 언급은, 유학생 유치에서 국제 경쟁에 대한 민감한 관심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는 비단 한-일 간의 문제만은 아니며, 영어권 국가들도 유학생 유치 경쟁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늘어날 수 없기 때문에 유학생 유치정책이나 대학 글로벌화에 한계가 있다는 점, 그리고 인구 고령화와 청년인구의 감소 때문에 일본 사회가 외국인 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의 경우 기술이민 확대 문제는 그 필요성이 논의되기 시작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 외국인 유학생들의 국내 취업을 위한 ‘유학생 박람회’ 등이 수년 전부터 개최되기 시작했지만 그 규모는 크지 않다.

넷째, 유학생이 늘어나고 이들이 수용국 사회에 잔류하면서 이민자로 정착하는 경향이 늘어나면, 좁은 의미의 유학생 정책의 범위를 넘어서는 더 큰 사회적 이슈들, 특히 다문화 정책 및 소수자 권리의 문제가 등장하게 된다. 가장 두드러진 사례는 호주이다. 최근 호주에서는 유학생에 대한 인종 차별, 유학생을 비롯한 인종적 소수자의 인권 및 사회권 보장이 중요한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유학생들의 지역사회 수용, 일본 주민과의 공존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일부 운영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유학생 정책과 다문화공생 정책을 함께 연계하는 논의들이 많은 것은 아니다. 일본 정부의 계획대로 ‘30만인 정책’을 통해 외국인 학생을 더 많이 유치하고 이들의 일본 사회 진출과 취업이 이루어진다면, 호주에서 제기되었던 유학생의 권리와 차별문제 등이 점차 확대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과 호주의 유학생 정책의 흐름은 국제협력 접근에서 수익창출 접근, 기술이민 접근으로 전개되는 양상을 나타내며, 결과적으로 유학생을 포함한 이민자의 인권과 사회권, 다문화 사회에서의 공존 문제가 부각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고찰은 한정된 자료에 근거한 시론적인 견해이며, 보다 정교한 비교분석은 별도의 연구를 필요로 한다.

덧붙여서 이러한 단계별 접근이 간과하는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우선 유학생의 이동은 고향을 떠나 목적국에 정착하는 일회성 이동(one-way mobility)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늘 있다. 호주와 같이 유학생을 우대하는 기술이민제도가 발달하거나 유학생들을 위한 일자리가 많은 경우에는 정착을 원하는 유학생들이 대다수일 것이다. 그러나 기술이민제도가 미비하고 외국인을 위한 일자리가 한정되어 있다면, 유학생들은 또 다른 기

회를 찾아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 즉, 정착형이 아니라 ‘스텝 업(step-up) 형’의 유학생들이 거쳐 가는 중계거점이 되는 지역도 있으며, 이러한 지역에서는 유학생이 늘어나도 인재 육성이나 인재 확보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杉村, 2008). 한국으로 유입되는 유학생들이 정착형인지 혹은 ‘스텝 업’형인지의 여부도 향후 정책수립에서 중요하게 분석되어야 할 요인이다.

유학생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주체는 반드시 국민국가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보다 큰 지역단위의 협력체계나 국제기구 등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 국가별 정책 비교만으로는 이러한 흐름을 분석하기 어렵다. 지역 단위의 국제적 협력은 앞서 언급한 일국 정부의 ‘국제협력 접근’과는 구별되는 차원이며, 대표적인 사례는 EU의 ‘에라스무스(ERASMUS)’ 프로젝트를 들 수 있다. 앞에서 언급했지만, 동북아시아 지역에서도 한-중-일 정부가 협력하여 ‘캠퍼스 아시아(CAMPUS Asia)’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국가 단위의 정책 비교나 단계별 분석의 틀에 국한되지 말고, 유학생 정책이 초래하는 다양한 효과와 국제사회 및 지역 협력에의 함의 등을 앞으로 폭넓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

## 2) 한국에 대한 시사점

여기에서는 당면한 유학생 유치나 대학발전 전략의 차원을 넘어서서, 글로벌화와 이주의 증가라는 거시적인 환경 변화의 연장선상에서 교육이주와 관련된 중장기적 정책과제의 방향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특히 일본, 호주의 사례연구에서 한국의 추후 정책방향에 어떤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지를 정리해 보겠다.

### 가. 유학생 정책의 외연 확대와 거버넌스 체계 구축

유학생 지원 정책은 단지 학생과 학교의 테두리에 제한되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이민정책 및 외국인 고용정책, 지역사회의 문화다양성 증가 등으로 그 외연이 확대되어 간다는 점이 두 사례에서 확인된다. 일본의 경우 1983년 유학생 10만인 계획 당시에는 유학생이 학업을 마친 후 본국으로 귀환

하는 것을 당연시하였으나, 2008년 30만인 계획 이후에는 일본사회의 인재로서 유학생을 양성하려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하고 있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저출산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 한국사회도 유사한 과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호주의 사례 또한 교육이주가 교육산업 정책뿐 아니라 인구, 이민, 고용, 사회통합과 같은 다양한 분야의 정책들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와 함께 호주 사례는 교육이주가 정치권에서 경쟁적으로, 때로는 경합하는 관점에서 다뤄지고 있다는 점을 드러낸다. 즉, 호주의 정부를 구성하는 주요 정당인 보수연합이나 노동당은 교육이주를 크게 인구 및 경제 정책 차원에서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지만, 그 내용이나 중점적으로 다루는 이슈 등에서는 엄연히 차이를 드러낸다. 예를 들어, 보수연합 정부가 교육이주를 주요 수출 산업이자 우수인력 유치를 위한 기술이민 측면에서 강조했다면, 그 뒤를 이은 노동당 정부는 넓게는 이민자 수 확대를 꾀하면서도 국내 노동시장 여건 등을 감안해서 교육이주와 기술이민 간의 관계를 약화하고자 노력했다.

특히 호주의 경우는 유학생 지원이 기술이민 정책과 동전의 양면처럼 연계되어 있다. 교육산업의 수익 증가를 위해 유학생을 많이 받아들였다가도, 호주 국내의 정치사회적 상황 변화에 따라 비자 제도를 변용해 가면서 유입되는 인력의 규모 및 특성을 조정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양상은 유학생 정책이 중장기적으로 외국인 고용관리 정책과 연계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장기적인 정책방향을 확립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관련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주목된다. 한 예로 일본의 30만인 계획은 문부과학성 뿐 아니라 고용, 산업, 출입국관리, 외교정책 등과 관련된 6개 중앙부처가 협력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기업, 지역사회와의 거버넌스를 중요시하고 있다. 또한 이민정책과 사회통합정책, 교육이주 정책을 연계하는 ‘그랜드 디자인’의 필요성을 지적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 나. 유학생의 다변화와 지역사회의 다문화 수용성

고등교육의 글로벌화는 유학생의 양적 증가와 더불어 유학생의 질적 다양성도 증가시킨다. 대학 진학률이 크게 높아짐으로써 이제 유학은 일부 우수학생의 선택이 아니라 평범한 모든 학생(때로는 국내에서 교육기회를 얻지 못한 학생)의 고려사항이 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일본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중국출신 유학생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학습 보다는 아르바이트나 취업을 우선시하는 유학생 문제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결국 유학생 집단의 다변화라는 현실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편으로는 유학생의 질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다양한 수요에 맞는 관리 체계를 갖추어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특히 대학이나 지역 특성에 따라 유학생에 대한 수요나 정책 방향에도 차이가 있다. 영어권 대학과 경쟁하는 글로벌 대학의 육성과 더불어, 지역사회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기업의 수요에 맞는 외국인 인력을 양성하는 새로운 모델도 필요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 문화교류나 기숙사 제공 등에서 지자체가 외국인 유학생 정책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에서도 지역사회 차원의 유학생 지원 정책을 보다 정교화, 현실화하는 모델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유학생을 단지 ‘학생’으로만 간주할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구성원, ‘지역주민’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일본의 학생지원기구나 지자체 등에서 지역주민과 유학생의 문화적 교류 및 상호협력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호주의 경우는 유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을 대변할 수 있는 조직을 형성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보면 외국인 유학생들이 자조모임이나 협회 등을 형성해서 스스로 목소리를 내고 자신의 필요를 위한 활동을 조직하게 된다면, 이는 한국사회의 전반적인 문화 다양성을 확대하는데 영향을 미칠 것이다.

## 다. 유학생의 권리 보장과 안전 문제

외국인이 유학을 하는 기간 동안 기본적인 권리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인프라의 형성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일본의 경우 지진 이후 유학생이 급격히 감소하자, 안전 보장과 유학생의 위험관리(risk management) 매뉴얼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인종차별적 폭력현상이 발생한 호주에서는 보다 강력한 유학생 기본권 보장 및 인종차별 철폐를 위한 정책이 쟁점이 되고 있다. 호주의 다문화주의 전통이 문화 관계적 측면 뿐 아니라 사회정의적인 측면 또한 강조한다는 점에서 유학생의 인권 보호에 대한 정부의 관심 부족은 지난 십 여 년 동안 보수연합 및 노동당 정부 모두가 다문화 정책을 사실상 방기하고 있는 현실의 연속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겠다. 그러나 현재 호주에서 유학생들이 내국인과 동등한 납세의 의무를 지며 거주하고 있다는 점과 연계되어 그들의 인권 논의는 향후 이민자의 시민권 및 거주권 논의와 연계되어 지속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한국에서도 유학생에 대한 차별이나 내국인과의 갈등 문제는 언제든지 표출될 수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한국에는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이주 여성을 중심으로 이주민의 권리나 사회권 문제가 논의되어 왔다. 그 연장선상에서 유학생을 포함한 외국인 주민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원칙과 가치의 확립하고 그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형성해 가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 라. 유학생 정책과 아시아 역내 협력관계의 새로운 가능성

최근 유학생의 국제적 이동에서 주목할 만한 흐름으로 첫째, 아시아 역내 유학의 증가, 그리고 둘째, 초국가적인 프로그램(transnational program)의 증가를 들 수 있다. UNESCO의 정의에 따르면 초국가적 교육(transnational education)은 학습자가 교육 기관이 근거한 장소가 아닌 다른 국가에 위치하는 모든 유형의 고등교육 연구 프로그램, 혹은 연구 과정 혹은 교육 서비스(Sugimura 2011: 51)를 말한다. 예를 들면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과 일본의 대학에서 2년씩 공부하는 이중학위 과정, 통신기술을 이용해 원거리 학습을 하는 과정 등이 있다. 초국가적 교육은 한편으로 수업 과정이 내실있게 진행되지 못함으로써 교육의 질 관리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그런

데 일본의 연구자들은 다른 차원에서 고등교육의 미래 이슈로서 초국가적 교육과정의 가능성을 논의하고 있다. 한 예로 동경대 교육학부의 시라이시(白石) 교수는 “순환적인 순례자 모델”을 주장하는데, 이것은 특정 외국에 가서 학위를 받는 전통적인 유학모델과는 달리, 출발점과 종착점이 특정화되지 않은 개방적인 모델이다. 스기무라 교수는 아시아 내의 대학 간 학생 교환 및 협동 프로그램인 캠퍼스 아시아(Campus Asia) 프로그램을 주목하고 있다. 캠퍼스 아시아는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것으로 유럽의 에라스무스 프로그램과 유사한 형태로, 한국·일본·중국의 3개국 학생들이 세 나라를 순회하면서 교육을 받는 프로그램으로 구상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특정한 국가의 경계에 국한되지 않고 개방된 지역적 공동체를 상상할 수 있도록 하며, 특정 국가의 인재가 아닌 ‘국제적 자산’이 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이상적인 목적을 지향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트랜스내셔널 프로그램 과정에서 일어나는 국제적인 문화교환이 발생시킬 사회적 변동, 그리고 그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국제적인 고등교육을 한층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대응 방안 등에 세계 각 국가들이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필수적이다(Sugimura 2011).

## 2. 정책 제언

### 1) 유학생 다변화에 대응하는 ‘지역거점 사업’의 선정 및 지원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학생 수의 증가와 더불어 내부 집단의 다양성도 확대되고 있다. 가령 국비장학생으로서 대학원에서 연구 인력으로 양성되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어학연수나 직업훈련 차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도 있다. 고등교육의 글로벌화, 유학의 대중화 흐름에 따라 이러한 유학생 내부의 다양성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대학 등 유학생을 수용하는 기관의 특성, 그리고 지역의 특성에 따라 정책 지원에 대한 수요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유학생 지원 정책을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체계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불어 이처럼 새로운 지역별 수요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한 지역에 유학생을 위한 일정한 규모의 종합 기숙사를 건설하고, 인근 지역의 각 대학에 재학 중인 유학생들을 함께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 기숙사를 중심으로 제2의 유학생 캠퍼스 내지 유학생 타운이 형성될 수 있다. 이러한 시설을 중심으로 유학생이 필요로 하는 편의시설, 상가 등이 형성되고 일반인들도 이를 이용함으로써 일종의 다문화 거리를 조성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이처럼 유학생이 단지 교육의 수요자일 뿐 아니라,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소비자로서 다양한 서비스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지역 현실에 맞는 거점 사업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의 교육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민간기관들이 협력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원을 제공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일본의 정책 사례에서 보듯이, 지역사회의 민-관-산-학이 협력하여 유학생들을 다문화 이해 프로그램의 강사로 활동하게 하거나, 유학생의 취업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프로그램 등도 지역의 특성에 맞게 도입할 수 있다. 가령, 초중고의 다문화 이해교육에 유학생의 참여를 연계함으로써 교육의 효과를 높임과 동시에 유학생들의 한국사회 경험을 확대하는 방안도 있다. 또한 구인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많은 지역에서는 유학생 취업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채용하는데 도움을 얻도록 프로그램을 운용할 수 있다. ‘지역거점 사업’이라는 발상 하에서 유학생 정책과 지자체 단위의 다문화 정책 관련 사업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구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현재 유학생 취업 박람회 행사가 매년 개최되고 있는데, 주로 서울과 수도권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지방의 유학생이나 기업의 참여에는 어려움이 있다. 취업 박람회도 지역수준에서 지역의 기업체 현황이나 학생의 특성에 맞추어 다변화하는 개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 2) 유학생을 위한 교육서비스의 법제화

호주의 경우 정부의 해외유학생 유치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유학생 비자 조건이 완화되자 부실 사립교육기관들이 우후죽순 생겨났다. 이들 교육기

관은 유학생들의 비자 취득 수요만 충족할 뿐 질 좋은 교육과 적절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지 않는 등의 문제들을 초래했다. 이로 인해 최근 호주정부는 해외유학생을 위한 교육서비스법인 ESOS를 전면 재검토한 후 개정했으며 강력한 시행 조치를 내렸다. 한국의 경우에도, 해외유학생을 수용하고 있는 사립뿐 아니라 국공립 교육 기관의 해외유학생 교육 프로그램 및 서비스, 학생안전 관리 등에 대한 지침을 담은 해외유학생 교육서비스 법 또는 관련 정책의 정비가 필수적이다. 다른 이주자들과 마찬가지로 해외유학생들도 자칫하면 법과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다양한 형태의 어려움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국내로 이입되는 유학생, 특히 중국 유학생이 급증함에 따라 출입국 당국 및 각 대학에서는 유학생의 관리 및 이탈자 방지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대학과 출입국 당국의 유학생 리스트를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구축되고 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유학생을 관리 대상으로 보는 것과 더불어, 한국에 유학 온 외국인들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정보와 서비스의 제공을 체계화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될 것이다. 유학생 ‘유치’, 유학생 ‘관리’와 더불어 유학생 ‘케어’가 중요한 미래의 정책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호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ESOS 제도를 참조하여, 교육 기관 및 유학 관련 제도에 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유학생으로서의 권리를 일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체계를 중장기적으로 마련하고, 관련된 법적 제도적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 3) 교육-이주-노동시장-국제협력을 연계하는 정책 디자인의 필요성

현재 유학생 정책은 주로 대학의 글로벌화와 교육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중심축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교육을 위한 이주도 ‘이주’의 한 형태라는 점에서 유학생의 증가가 이민정책 및 외국인 정책의 틀 전체에 미치는 영향 및 상호 파급효과를 새로운 시각에서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한 예로 유학생에게 가족동반을 허용하고 일정 시간 취업을 허용하는 출입국 관리정책의 변화는 유학생 수의 급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러한 상호영향을 향후에도 계속될 것이며, 일본이나 호주의 사례에



서 보듯이 비자 자격의 강화나 취업 여건의 변화 등은 유학생 수의 증감에 민감한 영향을 미친다.

유학생 정책이 출입국 관리보다 더 큰 틀의 이민정책과 연관되는 지점들도 있다. 현재 한국으로 입국하는 저숙련 노동자들은 주로 아시아 지역 개도국 출신들이다. 한국의 전문대학이나 직업교육기관이 베트남, 캄보디아 등의 당국과 연계하여 이 지역 젊은이들이 한국에서 일정기간 직업훈련을 마친 후 본국으로 귀국하여 산업 인력으로 취업할 수 있는 모델도 중장기적으로 그 가능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주지하다시피 한국은 저숙련 노동력을 단기순환 모델(고용허가제)에 따라 받아들이고 있는데, 출신국-목적국 당국간 협력을 통해 순환형 직업훈련 모델을 개발한다면 국내의 교육기관과 출신국 현지의 산업 현장 모두에 이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일부 전문학교에서는 외국인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국제적인 직업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례도 이미 나타나고 있다. 즉, 대학 뿐 아니라 전문대학, 직업 훈련기관의 수준에서 유학생 유치 정책의 다양한 모델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나아가 이러한 모델은 아시아 개도국 국가에 대한 ODA 사업과도 연계될 수 있을 것이다.

유학생 유치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유학 이후 취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일본과 호주의 사례에서 이는 분명하게 나타난다. 즉, 교육의 내용이나 학위의 질 뿐 아니라, 졸업 후 취업 가능성이 높을 때 유학 희망자는 증가하기 마련이다. 수용국의 입장에서는 단순 노동력이나 저숙련 인력보다는 유학을 거친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것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점이 많다. 따라서 이민정책의 차원에서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 뿐 아니라 국내 거주 및 영주의 가능성을 폭넓게 개방하는 다양한 제도를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호주에서 도입하고 있는 포인트 제도를 응용하여, 외국인의 나이와 학력, 기술적 역량, 한국 유학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영주권을 부여하는 포인트 제도를 중장기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 4) 유학생 정책 및 아시아 유학생 흐름에 대한 연구 확대

정부와 학계를 중심으로 해외유학생 교육기관 및 프로그램, 정책에 대한 연구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해외유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연구, 즉 그들이 한국에 유입된 경로, 동기, 경비, 그들의 유학생활동에 대한 만족도, 심리상태, 기타 문제점 등을 파악하는 연구가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 이는 해외유학생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 파악 없이는 적실하고 타당한 정책 개발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해외유학생의 증가로 인해 한국사회에 새롭게 등장 또는 부각될 수 있는 이슈, 예를 들어 국내 교육기관의 해외유학생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및 서비스, 거주 및 생활공간, 언어 및 다문화 관련 문제, 이민 정착 관련 쟁점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캠퍼스 아시아 등 새로운 아시아 역내 협력체계에 기반한 유학생 정책은 유럽의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을 모델로 하여 아시아의 인재 양성, 그리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대학간 제휴 프로그램의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직 도입단계에 있는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은 유럽과는 상이한 동아시아의 현실, 즉 EU와 같은 상위 기관이 없이 정부 간 협력체계를 통해 추진되고 있으며 ‘공동의 아이덴티티’에 대한 합의가 없다는 점에서 향후 새로운 문제점이나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과 성공을 위해서는 아시아를 기반으로 한 유학생 흐름 및 국제협력 방안을 연계하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축적될 필요가 있다.

#### 5) 이주민 정책과 유학생 정책의 연계 및 서비스 제공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민, 특히 인권침해나 위기에 처한 이주민들을 위한 긴급 지원, 폭력피해자 쉼터, 핫 라인(hot-line) 서비스 등이 주로 결혼 이주여성 대상의 사업 중심으로 체계화되고 있다. 이러한 이주민 지원 서비스는 유학생을 포괄하는 범위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인권 상담, 핫 라인, 통번역 서비스, 보육 및 자녀교육 관련 정보, 생활 정보 제공, 한국생활을 안내하는 홍보물 제공 등을 다양한 이민자의 특성을 고려하되 통합적인 체계 하에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해외유학생들이 한국 사회에 체류하는 임시 거주자라는 점, 특히 그들이 노동 및 결혼 이주자와는 달리 상대적으로 연령이 어리고 독립적인 사회경험이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그들을 위한 한국생활 안내 책자 배포는 필수적이다. 안내 책자에는 한국에서 그들이 접근할 수 있는 교육, 복지, 의료, 지역 정보 서비스 등에 대한 정보가 그들의 언어로 자세히 소개되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해외유학생들이 다니게 될 학교의 교육 프로그램 및 다양한 학생지원 서비스 등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논문 및 단행본>

- Adams, Tony. 2007.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Education in Australia: A Framework for the Future," *Journal of Studies in International Education*, 11: 410-420.
-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2011. International trade in goods and services, Australia(Cat no. 5368.0)
- B D'Costa, "Curry Bashing? A racist Australian underbelly and the education industry", South Asia Masala,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Asia and the Pacific, 6 February 2010.
- Castle, Stephen. 2007. "The Factors that make and unmake Migration Policies." in A. Portes and J. Dewind ed. *Rethinking Migration: New Theoretical and Empirical Perspectives*. New York and Oxford: Perghahn Books.
- Collins, F. L. 2008. "Bridges to learning: international student mobility, education agencies and inter-personal networks." *Global Networks* 8 (4): 398-417.
- Dunn, Kevin, Danielle Pelleri and Karin Mader-Han, 2011. "Attacks on Indian Students: the commerce of denial in Australia," *Race and Class*, 52(4):71-88.
- Findlay, A. M. 2010. "An Assessment of Supply and Demand-side Theorizations of International Student Mobility." *International Migration* 49(2): 162-190.
- Graycar, Adam. 2010. "Racism and the Tertiary Students Experience in Australia", Occasional Paper 5/2010, The Academy of Social Sciences in Australia, Canberra.
- Hawthorne, L. 2010. "How Valuable is 'Two-step migration'? Labor Market Outcomes for International Student Migrants to Austrailia." *Asian and Pacific Migration Journal*, 19(1):5-36.
- IOM. 2010. *World Migration Report 2010*.
- Jakubowicz, Andrew and David Monani. 2010. "International Student Futures in Australia: A Human Rights Perspective on Moving Forward to Real Action," Occasional Paper 6/2010. The Academy of the Social Sciences in Australia, Canberra.
- Koeth, Elisa. 18 June 2010. "Overseas Students: immigration policy changes 1997-May 2010," submitted to the Department of Parliamentary Services,

- Parliament of Australia. [www.aph.gov.au/library](http://www.aph.gov.au/library).
- Liu-Farrer, G. 2009. "Educationally Channeled International Labor Mobility: Contemporary Student Migration from China to Japan."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43(1): 178-204.
- Marginson, Simon. 2011. "International education in Australia 2011: Crisis and opportunity," NEAS ELT Management Conference, Sydney, 12-13 May 2011.
- Markus, Andrew. James Jupp. and Peter McDonald, 2010. *Australia's Immigration Revolution*, Allen & Unwin.
- OECD. 2007. *Education at a Glance*.
- 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 2009. *Global Education Digest 2009: Comparing Education Statistics Across the World*.
- Waters, J. L. 2006. "Geographies of cultural capital: Education, international migration and family strategies between Hong Kong and Canada." *Transactions of the Institute of British Geographers*. 31(2): 179-192.
- 권양이. 2008.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대학 초기 적응에 관한 질적 탐색." 『한국 교육학연구』 14(1): 301-333.
- 김우종 외. 2011. "한국과 일본의 중국인 유학생 유치전략 비교연구." *Trade Focus*,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 김혜순 외. 2007.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이론화』. 동북아시대위원회 연구보고서.
- 박은경 · 김민일. 2009. "외국인 유학생의 이주 및 적응." 한국지역지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94-102).
- 배상훈 외. 2010. 『글로벌교육 전문기관 설립방안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정책연구보고서.
- 송영관 · 양주영. 2009. 『외국인 유학생 유치정책을 통한 외국 전문인력 활용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 안영진. 2009. '외국인 유학생의 이주과정과 배경에 관한 연구.'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2(4): 344-363.
- 안영진 · 최병두. 2008. "우리나라 외국인 유학생의 이주 현황과 특성: 이론적 논의와 실태분석."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1(3): 476-491.
- 엄한진. 2008. "한국 이민담론의 분절성." 『아세아연구』 51(2): 112-140.
- 이기정 외. 2009. 『국내 외국인 학생 지원 관리체제 개선방안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연구보고서.

- 장명선, 2011, “한국 다문화가족 관련 법제에 대한 고찰”, 허라금 편, 『글로벌 아시아의 이주와 젠더』, 이화여대 아시아여성학센터.
- 정미경, 2008, 『주한 외국유학생 현황 및 다문화 인식에 대한 기초연구』, 한국교육개발원(KEDI) 현안보고 (OR 2008-5-22).
- Bing Yiqun. 「大学における留学生支援体制の現状及び展望について--中国・北九州地方の大学における留学生担当職員の視点から」 山口福祉文化大学研究紀要 4, 73-92, 2011-03.
- 宮城 徹. 「国費学部進学留学生の動機づけ、異文化適応、成績等の関連について (I) 関係先行研究についてのレビュー」東京外国語大学留学生日本語教育センター論集 (37), 29-45, 2011-03-01.
- 渡邊 優生. 「留学生教育交流の実情と多文化共生への可能性 ~FSAとしての実践報告~」鈴鹿国際大学紀要17, 2010.
- 毛里 和子, 西川 潤, 平野 健一郎. 『東アジア共同体の構築 3 国際移動と社会変容』 岩波書店, 2007.
- 白石さや. 「遍路札所を結ぶアジア・太平洋の高等教育ネットワーク構築」, 『アジア研究』 54-4 2008, 10 アジア政経学会
- 杉本 均 等. 『トランスナショナル・エデュケーションに関する総合的国際研究』(最終報告書)2011, 平成20年度-平成22年度科学研究費補助金基盤研究(B)(一般)研究課題番号20330172.
- 杉本 雅視. 「千葉県内の大学における学部私費留学生を中心とした外国人留学生の生活と就職 (<特集>千葉県における多文化共生の取り組み: 教育支援を中心に)」, 国際社会研究 : 神田外語大学国際社会研究所紀要 1, 273-293, 2010-10.
- 杉村 美紀 等. 『国際教育市場をめぐるアジア諸国の高等教育戦略に関する国際共同研究』 2006, 平成16-17年度文部科学省科学研究費補助金研究(萌芽研究: 課題番号16653082) 最終報告書.
- 杉村 美紀. 「大学改革の新戦略 世界の留学生地図の変容と国際人材移動--日本の高等教育はどこに位置付くべきか」 週刊教育資料 (1160) (1290), 28-29, 2011-04-25.
- 杉村美紀, 黒田一雄, 二宮 皓 等, 『アジアにおける地域連携教育フレームワークと大学間連携事例の検証』 2009, 文部科学省平成20年度国際開発協力サポートセンター・プロジェクト.
- 杉村美紀, 「アジアにおける留学生政策と留学生移動」. 『アジア研究』. 第54巻 第5

号. 2008. アジア政経学会.

神谷 順子. 「日本における外国人留学生の就業に関する研究：大学・企業・行政との連携による就職支援の効果」 北海学園大学学園論集 143, 67-91, 2010-03-25.

二宮 皓. 「アジア・ゲートウェイ戦略会議が描く留学生戦略とUMAPの役割ー「域内留学交流計画」の可能性を中心として」, 『アジア研究』 54-4 2008, 10 アジア政経学会.

伊藤 孝恵・奥村圭子., 江崎 哲也. 高田谷 久美子. 仲本 康一郎. 「留学生の卒業後の進路と日本での就職活動に対する意識：山梨大学留学生センター『留学生の進路希望調査報告書』を基に」, 山梨大学留学生センター研究紀要 4, 29-42, 2009-03-27.

斎藤 幸江. 「留学生の採用と就職 (特集 外国人の採用・雇用管理)」 人事実務 48 (1097), 14-21, 2011-03-01.

早川 芳子. 「留学生の進路と転職--NPO法人留学生職業能力開発センターの活動を通して (特集 留学生の進路と就職)」 留学交流 20(2), 18-21, 2008-02.

浅野 昭人. 「5K6 外国人留学生を対象としたキャリア形成支援：特別プログラムの設計・開発・運用に関する中間報告((課題研究5)高等教育の改革と評価, 教育の原点に光を当てるー乱流の中の本流を見出すー」 年会論文集 (26), 110-113, 2010-08-21.

漆原 次郎. 「留学生の減少化「留学生減少」は若者だけの問題か--グローバル人材への鍵は若い時代の海外経験 (特集 求む!グローバル人材--世界で活躍できる人材をどう育成するか)」 無限大 (128), 16-21, 2011.

太田 造. (横田雅弘, 坪井健, 白土悟, 工藤和宏と共著) 「外国人留学生の受入れ」, 「アジア太平洋諸国の留学生政策と日本の国際化対応」 『岐路に立つ日本の大学ー全四年制大学の国際化と留学交流に関する調査報告ー』, 一橋大学留学生センター, 2006年, pp77-99, pp131-143.

太田 造. (岡田昭人と共著) 「IJ共学授業の展望と課題」 『新しい留学生教育プログラムの開発と評価に関する研究』, 東京外国語大学留学生日本語教育センター, 2006年, pp44-50.

太田 造. (金子忠利, 渡邊あや, 佐藤亜希子, 関戸紀子, 野口文子, 森猛, 岩淵秀樹と共著) 「韓国における大学国際化の調査報告書」 (独) 日本学術振興会, 2007年.

太田 造. (横田雅弘, 服部誠, 小林明, 白石勝巳, 杉村美紀, 坪井健, 新田功と共著) 「年間を通じた外国人学生受入れの実態調査」 平成19年度文部科学省先導的大学改革推進事業委託研究, 明治大学, 2008年.

- 太田 造. (横田雅弘, 服部誠, 新田功, 白石勝巳, 坪井健, 工藤和宏と共著) 「30万人の留学生受入れを実現するための10の提言」, 「米国における外国成績・資格評価システムと日本への示唆」『留学生交流の将来予測に関する調査研究(平成18年度文部科学省先導的大学改革推進経費による委託研究)』, 一橋大学留学生センター, 2007年, pp102-117, pp126-137.
- 太田 造. 「アジアの外国人留学生政策と諸課題—シンガポールと韓国を事例に」『アジア研究』, 54(4), 2008年, pp26-43.
- 太田 造. 「グローバル化のなかで学生・大学の流動化が進んでいる」『をちこち』 31, 山川出版社, 2009年, pp32-35.
- 太田 造. 「なぜ海外留学離れは起こっているのか」『教育と医学』 59(1). 2010年. pp. 68-76.
- 太田 造. 「国際教育交流部門での留学生の積極的活用」日本国際教育協会編 『留学交流』, ぎょうせい, 2003年, pp24-27.
- 太田 造. 「国際協力における大学とわが国援助機関との連携」『これからの大学等研究施設9第3篇環境科学編』, 2006年, pp316-322.
- 太田 造. 「大学の国際化と留学生30万人計画：日本の課題」『平成20年度第2回学長会議記録』, 社団法人日本私立大学連盟, 2009年, pp3-21.
- 太田 造. 「留学生30万人計画と留学生の入学選考」『日本語教育振興協会ニュース』 108, (財)日本語教育振興協会, 2009年, pp3-12.
- 太田 造. 「留学生30万人計画時代における留学生の入学選考」『留学交流』 22, 2010.
- 太田 造. 「外国成績・資格評価 (Foreign Credential Evaluation) システムと留学生の入学審査」『留学交流』, 20(8), 2003年, pp1-20.
- 太田 造. 「外国人留学生の出身国ランキング：外国から問われる教育や学位の質」『大学ランキング2010年版』 32, 朝日新聞出版社, 2009年, pp148-149.
- 太田 造. 「日本留学試験の政策的考察」『国際教育』, 日本国際教育学会 2004年, pp93-115.
- 太田 造. 「韓国における留学生政策の発展とその課題」『移民政策研究』, 2(2), 2010年, pp. 20-38.
- 平野健一郎, 「新しいアジアの留学地図とその意味」, 『アジア研究』 54-4 2008, 10 アジア政経学会.
- 横田雅弘 等, 『留学生交流の将来予測に関する調査研究』 2007, 平成18年度文部科学省先導的大学改革推進事業による委託研究.



<자료 및 정부·관련기관 홈페이지>

- Study in Australia, 2011. "International Students in Australia," <http://studyinaustralia.gov.au/Sia/en/Home.htm>(검색일: 2011/6/10).
- The Australian, 2010. 4. 6. 'Coalition to reduce migration', [www.theaustralian.com](http://www.theaustralian.com)(검색일: 2010.5.17).
-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2006 "Census of Population and Housing - Fact Sheets, 'Ancestry'," <http://www.abs.gov.au>(검색일: 2011/5/30).
-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2009. '2007-08 Migration', <http://www.abs.gov.au/AUSS-TATS/abs@.nsf/DetailsPage/3412.02007-08?OpenDocument> (검색일: 2011/5/30).
- Australian Education International. 2010. "International Student Data for 2010," [http://www.aei.gov.au/AEI/Statistics/StudentEnrolment AndVisa Statistics/2010/Default.htm#1994](http://www.aei.gov.au/AEI/Statistics/StudentEnrolmentAndVisaStatistics/2010/Default.htm#1994)(검색일: 2011/6/10).
- AEI, "Education Services for Overseas Students Amendment (Re-registration of Providers and Other Measures) Act 2010", (검색일: 2011-09-20) [http://www.aei.gov.au/Regulatory-Information/Education-Services-for-Overseas-Students-ESOS-Legislative-Framework/ESOS-Act/Documents/ESOS\\_Q\\_A\\_25\\_02\\_2010.pdf.pdf](http://www.aei.gov.au/Regulatory-Information/Education-Services-for-Overseas-Students-ESOS-Legislative-Framework/ESOS-Act/Documents/ESOS_Q_A_25_02_2010.pdf.pdf).
- DIAC, 2009. "Evaluation of Australia's Working Holiday Maker(WHM) Program," 27 Feb 2009. National Institute of Labour Studies, Flinders University, Adelaide, Australia, Published by the 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Citizenship.
- DIAC, Annual Report 2008-2009, Canberra, October 2009.
- DIAC, Total Working Holiday Visa Grant by Citizenship, <http://www.immi.gov.au/media/statistics/pdf/visitor/2005-06-to-2009-10-whm-wah-visa-grants.pdf>.(검색일: 2011/10/10).
- The Hon Julia Gillard MP's Media Release, "Bruce Baird to head up international students final report", 9 March 2010. (<http://ministers.deewr.gov.au/gillard/baird-review-international-students-final-report>).
- Australian Educational International, <http://www.aei.gov.au/>.
- AusAID <http://www.ausaid.gov.au/scholar/default.cfm>.
- Study in Australia, [www.studyinaustralia.gov.au/.../757/ko-ESOSFramework.pdf.aspx](http://www.studyinaustralia.gov.au/.../757/ko-ESOSFramework.pdf.aspx).
- The Australian International Education Conference. <http://www.aiec.idp.com/>.

- 주호주대사관. 2011. “호주정부의 외국 유학생 신변안전 강화 조치 발표,” 교육정보  
게시관, 2009-6-15.
- 호주동아일보. 2011.3.18. “정부 유학 교육기관 단속 재강화,” <http://www.hojudonga.com/kor/?p=4532>(검색일, 2011/6/5).
- 호주일보, 2010. 4. 16. ‘늘 비난의 대상이 되는 호주 인구증가 정책’, <http://hojuilbo.com/1731>.
- 호주포스트, 2010.5.22 “호주, 새로운 기술이민대상 직종 리스트(SOL) 발표,”  
[http://hojupost.com/bbs/board.php?bo\\_table=B04&wr\\_id=4&sfl=&stx=&sst=wr\\_datetime&sod=asc&sop=and&page=1](http://hojupost.com/bbs/board.php?bo_table=B04&wr_id=4&sfl=&stx=&sst=wr_datetime&sod=asc&sop=and&page=1)(검색일: 2010-6/15).
- 文部科学省高等教育局学生・留学生課. 「留学生政策の現状と展望」 2011.  
「我が国の留学生制度の概要」 2010.  
「留学生政策の具体的展開」 2010.  
「日本人の海外留学者数」について」 2010.  
「留学生30万人計画骨子」 2008.
- 法務省入国管理局. 「新たな在留管理制度」 2010.  
「平成21年度における留学生等の日本企業等への就職状況につ  
いて」 2010.
- 内閣府. 「アジアゲートウェイ構想」 2007.
- 日本学生支援機構. 「平成21年度外国人留学生在籍状況調査結果」.

부 록  
(일본 사례조사 자료)



부록 1

「유학생 30만인계획」 골자

2008년7월29일

문부과학성

외무성

법무성

후생노동성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

요지

- ① 일본을 세계에서 개방된 국가로서 아시아 및 세계와의 사람, 물건, 돈, 정보의 흐름을 확대하는 「글로벌 및 전략」 및 전개하는 일환으로서 2020년을 목표로 유학생 30만명 수용을 지향한다. 이 때 고도인재 수용과도 연계시키면서 국가·지역·분야 등에 유의하면서 우수한 유학생을 전략적으로 획득해 간다. 또한, 계속적으로 아시아를 비롯한 여러 외국에 대한 지적인 국제공헌 등을 완수하는 데도 노력한다.
- ② 이를 위해 일본유학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동기부여에서 입시·입학·입국에서부터 대학이나 사회에서의 수용, 취직 등 졸업·수료 후 진로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아래의 방안을 실시하고 관계관청·기관 등이 종합적·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계획을 추진한다.

방책

1. 일본으로의 유학 유치~일본유학의 동기부여와 원스톱 서비스 전개~

일본의 문화발신과 일본어 교육 확대로 일본 팬을 늘리고 일본 및 대학 등에 관심을 불러일으켜 유학 희망으로 연결시킨다. 또한, 웹 등을 통해 유학 희망자들에게 각

대학 등의 정보를 발신한다. 해외에 있어서는 재외공관이나 독립행정법인의 해외사무소, 대학 등의 해외 거점이 연계하여 일본유학과 관련되는 각종 정보제공, 상담서비스를 실시해 유학 희망자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 전개를 지향한다.

- ① 적극적으로 일본의 문화, 사회, 고등교육에 관해 정보 발신, 이미지 전략으로서 일본의 내셔널 브랜드를 확립.
- ② 해외의 대학 등과 연계해서 효율적으로 일본어교육 거점을 증가시킴으로써, 해외에서의 일본어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
- ③ 각 대학등의 유학정보발신, 일본유학박람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유학 정보 제공을 추진.
- ④ 재외공관이나 독립행정법인(JASSO)의 해외사무소, 대학 등의 해외거점이 연계하여, 해외에서 일본유학과 관련되는 각종 정보를 제공. 또한 유학 희망자에게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강화하고, 유학희망자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창구 일원화) 전개를 지향함.
- ⑤ ‘비지트 재팬 캠페인’과의 연계로 정보발신 강화.

## 2. 입시 · 입학 · 입국 입구의 개선~일본 유학의 원활화~

필요한 유학정보 입수에서 입학허가, 기숙사 등의 결정까지 모국에서 가능하게 하는 체제를 정비한다. 또한, 입국이 원활하게 되도록 유학생의 질에도 유의하면서 입국 심사 등을 재검토한다.

- ① 웹 등을 통해 입시 등 유학에 관련되는 대학 등의 정보발신 기능을 강화.
- ② 일본유학시험의 개선, 일본어능력시험, TOEFL, IELTS 등의 기존 시험을 활용한 일본입국 전 입학허가를 추진. 또한, 기숙사나 장학금 등 안심하고 유학하기 위한 수용까지의 수속, 일본입국 전의 결정을 촉진.
- ③ 해외에서 유학생을 적극적으로 획득하기 위한 대학 등의 해외 거점의 전개와 대학간의 공동 · 연계 추진.
- ④ 대학 등의 철저한 재적관리와 입국 시 및 입국 후의 재류기간 갱신

청 등에 관한 심사 간소화와 심사기간의 단축.

### 3. 대학 등의 글로벌화 추진~매력있는 대학 만들기~

유학생을 끌어들이는 매력있는 대학 만들기로서 영어로만 학위 취득이 가능하게 하는 등의 글로벌화와 대학 등의 수용체제 정비에 대해 지원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 ① 국제화의 거점이 되는 대학을 30선정하여 중점적으로 육성.
- ② 국제화 거점 대학과 COE에서는 원칙적으로 영어만으로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하는 등 영어 전용 코스를 대폭적으로 늘려 국제적인 교육 연구거점 만들기를 추진.
- ③ 교환유학, 단위호환, 더블 디그리(공동학위) 등 국제적인 대학 간의 공동·연계나 단기유학, 서머스쿨 등의 교류촉진, 학생의 유동성 향상, 커리큘럼의 질적 보증 등으로 대학 등의 매력을 국제적으로 향상.
- ④ 전문과목에서의 외국인 교원의 채용을 늘려 교육연구 수준을 향상.
- ⑤ 유학생 수용과 일본인 학생의 해외유학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대학 등의 9월 입학을 촉진.
- ⑥ 유학생 수용을 위한 대학 등의 전문적인 조직체제를 강화하고 조직적인 수용을 내실화.
- ⑦ 국비유학생 등의 우선배치, 재정지원의 차등 배분, 경쟁적 자금이나 GP에 의한 지원 등으로 글로벌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대학 등에 대한 지원을 중점화.

### 4. 수용 환경 만들기~안심하고 면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노력~

기숙사 확보 등 유학생이 안심하고 면학에 전념할 수 있는 수용 환경 만들기를 추진한다. 또한, 지역과 기업 등이 일체가 되어 교류지원을 촉진한다.

- ① 대학 등이 각 관계 기관과 연계하여 단기유학을 포함해서 입국 후 1년 이내의 유학생에게 기숙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대학의 기숙사 정비, 민간 기숙사 확보의 원활화, 공적 기숙사의 효율적 활용 등의 다양한 방안을 추진.
- ② 국비외국인유학생제도, 사비유학생 학습장려비에 대해서는 그 개선을 도모하면서 활용.
- ③ 지역·기업 등의 컨소시엄으로 교류를 지원하는 등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이는 장소로서 전국 레벨의 교류추진회의를 창설.
- ④ 유학생이 유학 후에 곤란하지 않도록 일본어 교육기관, 대학 등의 일본어 교육 담당부서를 비롯한 국내 일본어 교육의 내실화
- ⑤ 카운셀링 등 유학생과 가족에 대한 생활지원을 촉진

## 5. 졸업·수료 후의 사회 수용 촉진~사회의 글로벌화~

졸업생들이 일본사회에 정착해 활약하기 위해서 대학 등은 처음부터 산학관이 연계한 취직지원과 수용, 체류기간의 재검토 등 사회 전체로서의 수용을 추진한다.

- ① 대학 등의 전문적인 조직 설치 등을 통한 유학생의 취직지원 강화.
- ② 인턴쉽, 잡카드의 활용, 취직상담창구 확충 등 산·학·관이 연계한 취직지원이나 창업지원의 내실화.
- ③ 기업측의 인식개혁과 수용체제 정비를 촉진.
- ④ 취업 가능한 직종의 명시 등 체류자격의 명확화와 취업의 탄력화, 취직활동을 위한 체류기간의 연장 검토.
- ⑤ 귀국유학생 동창회의 조직화 지원, 활동 지원 등 귀국 후의 전(前)일본유학생 사후관리(follow-up) 내실화를 도모하여 전(前)일본유학생이 일본을 이해하는 지원자로서 활약할 수 있도록 인적 네트워크 유지·강화.

## 부록 2

## 「글로벌 30」 거점 대학 사례 조사 : 동경 소재 조치(上智) 대학

## I. 일반적인 개관

조치대학은 학부생이 10,000명 이상이고, 대학원생이 1,200여명 정도이다. 2011년 현재 유학생은 721명이고, 이 가운데 522명은 외국에서 온 학생이다(200여명은 일본에 거주하고 있다가 진학한 외국인 학생임). 작년에 900여명이었던 유학생이 지진 후에 다소 감소 추세이다. 지금까지는 미국 유학생이 많았으나 지진 이후 중국 유학생은 별 변화가 없고, 미국에서 오는 교환학생이 감소하였다. 중국은 주로 4년 동안 머무르는 학생이고, 미국은 주로 단기 교환학생이기 때문인 것을 분석된다. 한편, 조치대학에서 해외로 유학가는 일본인 학생은 500여명정도이다(장기 214명, 단기 290명 정도. 단기는 3주-6주 정도로 방학 때만 가는 학생이고, 장기는 1-2학기 정도 체류하는 학생임).

조치대학은 2020년까지 외국인 유학생수를 2,600명까지 늘릴 계획이고, 일본인학생의 해외유학을 현재의 400명에서 1,00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조치대학이 국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첫째, 환경·이공학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영어로 제공하고, 해외에서 유망한 이공계 유학생을 불러들인다. 둘째, 영어 교육과정을 선구적으로 운영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어 온 국제교양학부(및 대학원 글로벌사회전공)의 체제를 강화한다. 셋째, 주로 일본어로 수업을 행하고 있는 학부학과, 연구과에서도,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과목을 현재의 250과목에서 350과목으로 늘린다. 넷째, 일본어교육센터를 개설하고, 일본어로 배우는 유학생을 늘림과 동시에, 영어로 배우는 유학생에 대해서도 일본어교육을 충실하게 하도록 한다. 다섯째, 교환유학생의 증가를 도모하는 한편, 1960년대부터 시작하여 현재 연1회개강하고 있는 일본·아시아학 연구를 테마로 하는 영어에 의한 하기강좌를 여러 차례 개강하고, 단기유학생 유치를 확대한다.



여섯째, 유학생을 위한 환경정비의 일환으로 멀티랭귀지 상담체제, 장학금 정비, 취직지원 등의 면에서 한층 더 충실을 꾀하는 한편, 1000명 수용 규모의 기숙사를 건설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해외에서는 미국, 룩셈부르크를 거점으로 하는 EU, 멕시코를 거점으로 하는 중남미, 및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하는 인도차이나 등 4개국에 해외거점을 설치하고 유학생 모집에 힘쓰고 있다. 조치대학은 유학생 증가와 글로벌화에 맞추어 행정 조직을 개편하여 글로벌화를 위한 기획 플랜을 짜는 기획처를 신설하였다. 국제연대실 하에 국제 전략, 학생교류, 학술교류팀을 신설하였다.

현재 정부의 보조금을 받고 있으나 원래 예정보다 줄어들었다. 보조금은 외국 페어(유학생 유치·홍보행사)에 대한 예비, 팜플렛 비용, 인쇄비용, 해외 사무소 운영비, 영어프로그램 인건비 등에 충당한다. 이를 2013년까지 5년간 시행하고, 5년 후에는 대학이 자체 재원으로 해결해야 한다. 문부과학성에서 주는 보조금은 두 종류인데, 학생수 1인당 일정액은 지급하는 정상적 지원이 있다. 이와 달리 글로벌 30은 각 대학이 응모해서 경쟁을 통해 선정하는 지원금인데, 후자의 보조금이 늘고 있고 정상적 보조금은 축소하는 추세이다. 새로운 사업을 늘리려는 대학에 지원하고, 현상유지에 안주하는 대학에 대한 지원은 축소되고 있는 경향이다.

조치대학 내의 유학생 케어 정책을 살펴 보자. 현재 유학생 전문 부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일본인 학생과 같이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향후 생활면에서 추가적인 케어가 필요하다고 보고 유학생 지원네트워크를 만들어 상담에 응하고 있다. 상담내용은 주로 교환학생들의 기숙사 트러블, 비자에 관한 질문, 아르바이트 관련 질문, 수업관련 질문, 어떤 수업을 들어야 하는가, 코스를 잘 마쳐야 하는데 어렵다 등의 고충이다. 학생센터에서는 주로 장학금 관련 상담을 담당하고 있는데, 사비/국비로 나뉜 장학금 관련 업무를 통합적으로 정리해서 학생들의 접근이 쉽도록 하였다. 비자 관련 복잡한 정보를 쉽게 전달하기 위하여 업무 개선 등을 시도하고 있다. 올해 초부터 유학생만 모아서 학기 초에 신입생을 위한 guidance 프로그램(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운영하여, 신입생 수의 약 반에 해당하는 40명 정도가 참가한 바 있다.

조치대 유학생은 두 부류로, 영어 과정과 일본어 과정으로 나뉜다. 지금까지는 일본어 과정 학생을 위한 별도의 지원 프로그램은 없었는데, 이번에 신설하였다. 지난 6월에는 유학생 대상의 1박2일 캠프를 실시하여, 일본인 학생도 희망자는 같이 참여하였다(숙박비 참가비는 학교에서 부담). 아시아 출신 학생들은 외모면에서 유학생인지 잘 드러나지 않는데 오히려 이 때문에 함께 어울리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캠프였다. 그리고 대학원 교수, 교직원 대상으로 유학생 지도에 관한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하였다. 강연의 내용은 아시아계 유학생의 심리적 사회적 지원을 생각하는 모임으로, 백인학생과 달리 아시아 학생은 미리 상담을 하지 않는 소극성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아시아 학생의 특성을 미리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는 모임을 가졌다. 30명의 교수 및 교직원 등이 참여하였다. 지금까지 유럽, 미국 등 백인 학생이 많았으나 최근 아시아 유학생 증가하고 있어, 이들에 맞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 중이다. 지금까지는 주로 국제교양학부에 유학생이 집중하였으나, 앞으로는 여러 학부에서 유학생을 받아들이고자 하고, 이를 위해 새로운 케어 프로그램 준비 중이다. 국제교양학부의 영어강의 외에 일본어 강의에 들어오는 아시아 학생들은 일본어 능력시험 1급을 합격한 학생들이다. 과거에는 일본어를 잘하는 유학생들에게 케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새로운 케어의 대상으로 포함하여 생각하고 있다. 국제교양학부만으로는 안되고, 전반적인 유학생 증가에 대응하는 케어의 증대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45)

## 2. 조치대학의 거점대학에 채택된 후 시행한 사업

### 〈해외 대학과의 교육연대 등의 추진〉

#### ① 새로운 교육연대 · 장학금 프로그램의 개발

#### ② 대학 간 교류 협정의 확대

2010년, 하이델베르크 대학(독일), 스트라스부르 대학(프랑스) 외의 대학

45) 조치대학 국제관계실 담당자들과의 인터뷰 내용을 정리하였음.

간 교류협정을 체결. 앞으로 이들 대학 간에 학생교환·학술교류를 행한다.  
(협정대학: 2009년 143교→2010년 155교)

③ 유학생 지원 네트워크 구축

2010년 유학생 지원에 관한 학내부서가 참가하는 유학생 지원 네트워크를 개설, 관련부서의 모든 카운터에 안내표시판이 설치되었다.

④ 장학금 충실(2009년 신설 유학생용 장학금)

〈그 외의 활동〉

안제 서카톨릭 대학(프랑스)에 약 3주간의 「하기해외단기어학강좌」를 개시(단기연수 8건, 단기어학 14건).

태국에 AJCU-EAO 총회와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카톨릭 대학 연맹 ASEACCU 총회 및 학생회의에 출석. 6대학에서 36인의 학생이 참가. 2011년 총회는 조치대학에서 개최.

필리핀에서 동아시아·예수회 4대학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을 실시  
=2010년은 아테네오 데 마니라 대학이 호스트 교. 필리핀에서 8명의 학생이 참가. →이러한 프로그램 등의 개발에 의해, 일본인 유학생 수(단기·장기)가 증가. (2009년:499명→2010년 577명).

캄보디아에서 서비스 러닝 프로그램을 조치대학이 호스트교가 되어 실시. 아시아 오세아니아 지역 16대학에서 약 40명의 학생이 참가하여, 환경·문화유산의 보전, 지역 진흥 등을 테마로 사회공헌에 대하여 배움.

〈유학생 유치 체제의 충실〉

2011년 2월, 타이 북부 지역 첸마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북부 타이 일본어 스피치 콘테스트」를 후원. 우승자에게는 조치대학에 1년간 유학생으로 받아들이는 스피치 콘테스트 우승자 유학 유치 장려비 제도를 개시하였다.

일본인 학생의 유학 촉진을 위한 장학금 프로그램, 「오사카 독일 유학 장려비」, 「吉彌・愛琳 아일랜드 유학 장려비」등을 시작하였다.

① 유학생에 대한 정보제공 기능의 충실

국제화 거점 정비사업의 중국어판 웹사이트를 개설.

15개국 이상의 도시에서 유학 페어 참가. 싱가포르에서는 조치대학 주최의 유학 페어를 개최. →이러한 시책으로, 외국인 유학생 수 증가(2009년 647명→2010년 744명)

② 2011년 지구환경학연구과 영어코스 「국제환경코스」개설

2011년 9월 입학에 위한 입시요강을 공개하여, 모집을 개시. 석사과정 15명, 박사 과정 약간 명을 받아들인 예정.

〈교직원의 국제화 연수〉

2010년 12월 워크숍 「국제적인 대학이란 무엇인가-대만의 새로운 도전에서 배운다-」 및 심포지엄 「동아시아의 고등교육 국제화의 새로운 전개와 상호이해: 다각적 이니셔티브 하의 각국・대학의 전략과 비전」을 개최. 46)

---

46) jump(글로벌30 채택대학 웹사이트)의 대학일람 중 <글로벌30 조치대학의 시책> (<http://www.uni.international.mext.go.jp/ja-JP/>, 2011.11.30)

부록 3

## 「신성장전략」에 있어서 기술

(2010년 6월18일 각의 결정, 관련 내용 발췌)

### (3) 아시아 경제전략 ~ 「연결다리국가」로서 성장하는 나라 · 일본 ~

(아시아 시장 일체화를 위한 국내개혁, 일본과 세계의 사람, 물건, 돈의 연결 배증)

동시에, 일본 국내에 있어서도 아시아를 중심으로 세계와의 사람, 물건, 돈의 흐름의 장벽을 가능한 한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람, 물건, 돈의 일본으로의 흐름을 배증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예를 들면, 그 흐름의 장해 요인으로 되어있는 규제를 대담하게 재검토하면, 일본으로서도 중점적인 국내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중략)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 확대, 연구자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직종의 해외인재가 일하기 쉬운 국내체제의 정비를 행하는 외에, 무역관련 수속의 전문화를 피함과 더불어, 해외 진출한 기업이 현지에서 얻은 수익을 국내에 가져오기 쉽게 한다. 더하여, 금융이나 운수 등의 서비스분야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그 흐름의 원활화를 꾀한다. 나아가, 아시아나 세계와의 대학 · 과학기술 · 문화 · 스포츠 · 청소년 등의 교류 · 협력을 촉진하고 국제적으로 활약할 수 있는 인재양성을 추진한다.

### (6) 고용 인재전략 ~ 「나갈 차례」와 「있을 자리」가 있는 나라 일본 ~

(질이 높은 교육에 의한 두꺼운 인재층)

(중략) 또한, 고등교육에 있어서는 장학금제도의 충실, 대학의 질의 보증과 국제화, 대학원교육의 충실 · 강화, 학생의 기업력의 육성을 포함한 직업교육의 추진 등, 진학의 기회 확대와 고등교육의 충실을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미래에 도전하는 마음을 가지고 국제적으로 활약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한다.

나아가, 교육에 대한 수요를 만들어 내고 이를 성장분야로서 키우기 위해, 유학생의 적극적 유치와 함께 민간 교육 서비스의 건전한 발전을 꾀한다.

### **(21세기 일본의 부활을 향한 21의 국가전략 프로젝트)**

#### **B. 글로벌 인재의 육성과 고도인재 등의 유치 확대**

일본의 교육기관·기업이 적극적으로 해외와의 교류를 추구하고, 또는 국내의 글로벌화에 대응하는 인재를 길러내는 장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외국어 교육이나 외국인 학생·일본인 학생의 협동교육을 비롯한 고등교육의 국제화를 지원하는 외에, 외국대학과의 단위상호인정의 확대나 외국인 교직원, 외국인 학생의 전략적 유치의 촉진, 외국인 학생의 일본계 기업으로의 취직지원 등을 추진한다. 한편, 일본인 학생 등의 유학·연수의 지원 등 해외경험을 늘리기 위한 대책도 강화한다.

(중략) 이러한 시책을 통하여, 해외 인재가 일본에 모여들도록 함으로써, 일본에 체류하는 외국인 고도인재의 증가를 지향한다. 또한, 일본에서 해외로 나가는 일본인 학생 등의 유학 연수 등의 교류를 30만인, 질이 높은 외국인 학생의 유치를 30만인으로 하는 것을 지향한다.

이와 함께, 해외의 현지인재의 육성도 관민이 협력해서 추진한다.

부록 4

## 2010년도 유학생 교류 관련 예산 개요

<b>2010년도 예산</b>	<b>35,544백만엔</b>
해외에서의 정보제공및 지원의 일체적인 실시	609백만엔
1. 일본유학 정보발신 기능의 내실화	315백만엔
2. 일본유학시험의 실시	294백만엔
유학생 수용환경의 내실화	34,172백만엔
1. 외국인유학생 장학금제도 등의 내실화	31,249백만엔
(1) 국비외국인유학생제도	21,645백만엔
(2) 사비외국인유학생 등 학습장려금	7,937백만엔
(3) 유학생교류지원제도(단기 수용)	1,637백만엔
2. 유학생 기숙사 지원	1,109백만엔
3. 유학생 취직지원의 내실화	15백만엔
일본인 학생에 대한 해외유학 추진	763백만엔
(1) 유학생교류지원제도(장기파견)	212백만엔
(2) 유학생교류지원제도(단기파견)	550백만엔

## 부록 5

## 유학생 관련 단체

## 문부과학성 고등교육국 학생 · 유학생과 유학생교류실

주소 (우)100-8959 도쿄도 지요다구 가스미가세키 3-2-2  
 전화번호 대표 03-5253-4111  
 FAX 03-6734-3394  
 홈페이지 <http://www.mext.go.jp/> (문부과학성 메인 페이지)  
[http://www.mext.go.jp/a\\_menu/koutou/ryugaku/](http://www.mext.go.jp/a_menu/koutou/ryugaku/) (유학생교류추진)

## 독립행정법인 일본학생지원기구

주소 (우)226-8503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 미도리구 나가쓰다초 4259 S-3  
 홈페이지 <http://www.jasso.go.jp/>

## 【유학생사업부】

주소 (우)135-8630 도쿄도 고토구 오메 2-2-1  
 (우)153-8503 도쿄도 메구로구 고마바 4-5-29 (유학생시험과만)  
 (담당부과별 직통전화번호 및 FAX번호)  
 유학생사업계획과 전화번호 03-5520-6030 FAX 03-5520-6031  
 교류 · 숙소사업과(교류사업계 · 팔로우업사업계) 03-5520-6033 03-5520-6034  
 교류 · 숙소사업과(기획계 유학생숙소계) 03-5520-6038 03-5520-6039  
 유학시험과 03-6407-7457 03-6407-7462

## 【학생생활부】

주소 (우)135-8630 도쿄도 고토구 오메 2-2-1  
 (담당부과별 직통전화번호 및 FAX번호)  
 학생생활계획과 전화번호 03-5520-6165 FAX 03-5520-6047  
 학생지원사업과 03-5520-6171 03-5520-6050  
 특별지원과 03-5520-6173 03-5520-6051

## 【도쿄일본어교육센터】

주소 (우)169-0074 도쿄도 신주쿠구 기타신주쿠 3-22-7  
 교무 전화번호 03-3371-7268 FAX 03-5337-6690  
 교무(입학) 03-3371-7266 03-5337-6693  
 교무(교류) 03-3371-7286 03-3371-7275  
 총무 03-3371-7265 03-3371-7275



【오사카일본어교육센터】

주소 (우)543-0001 오사카 덴노지구 우에혼마치 8-3-13  
전화번호 대표 06-6774-0033  
직통 06-6774-0787  
FAX 06-6774-0788

**재단법인 유학생지원기업협력추진협회**

주소 (우)103-0027 도쿄도 주오구 니혼바시 1-5-3  
전화번호 대표 03-3275-0939  
FAX 03-3278-1064  
홈페이지 <http://www.1.ttcn.ne.jp/~ryugakusei.fn/>

**재단법인 일본어교육진흥협회**

주소 (우)151-0053 도쿄도 시부야구 요요기 1-58-1  
전화번호 대표 03-5304-7815  
FAX 03-5304-7813  
홈페이지 <http://www.nisshinkyo.org/>

**재단법인 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

주소 (우)153-8503 도쿄도 메구로구 고마바 4-5-29  
홈페이지 <http://www.jees.or.jp/>  
(담당부 과별 직통전화번호 및 FAX번호)

【사업부】

국제교류과 전화번호 03-5454-5274 FAX 03-5454-5232  
공 제 과 03-5454-5275 03-5454-5232  
일본어교육보급과 03-5454-5215 03-5454-5235

【기관보증센터】

기관보증과 전화번호 03-5454-5271 FAX 03-5454-5273

**문부과학성 고등교육국 학생·유학생과 유학생교류실**

(우)100-8959 도쿄도 지요다구 가스미가세키 3-2-2  
전화 03-5253-4111 내선3433  
FAX 03-6734-3394

## Abstract

# A Study on Recent Trends of Student Migration and the Future Policy Agenda

Jung-Mee Hwang  
Kyung-hee Moon  
Mi-Na Shi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long-term policy agenda for international student mobility around Korea as a inclusive part of new policy paradigm for multicultural society. It is noteworthy that the influx of international student into Korea has been increased rapidly, from 12,314 foreign students in 2003 to 84,455 in 2010. The increase of foreign students can be understood as a factor which will augment the diversity of resident population and eventually lead to new policy demand for more inclusive migration policy and social integration procedure.

We examined overall process of policy formation concerning student migration in Japan and Australia as distinctive cases in Asia-Pacific region. And we found four characteristics in the process of government policies in both countries. Firstly, government policy to

receive and support foreign students at the starting stage was introduced as a 'mutual understanding approach' which emphasized international cooperation between student sending and receiving countries. Secondly, there was a considerable growth in the amount of foreign students when government promoted the 'revenue-generation approach' for the development of education industry and increase in profitability of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Thirdly, the 'skilled migration approach' was added to the education policy in both cases. Australia has developed skilled migration program with point system which provide advantage for foreign students to acquire permanent residency after graduation. Recently, policy programs to support foreign students to get more job opportunity has been introduced in Japan. And lastly, the range of policy to support foreign students is enlarged to include general social issues such as multicultural coexistence, human rights and citizenship of minority groups, and resolution of inter-racial conflicts.

Based on our observation of these two cases, this study suggest several policy recommendations which could help to respond to futur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student mobility in Korean context. It is important to develop distinctive local project which effectively interconnect the interests of foreign students with those of local residents. International student town which contains dormitories and ethnic shops and other facilities for both foreign students and local citizens, and local job fair linking local middle-size corporations and foreign students could be good examples. In the long term, 'the grand policy design' which connect various policy areas such as education, migration, labor market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including ODA) should be considered in Korean context.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27-07  
2011 연구보고서-15-6

### **교육이주의 추이와 미래 정책과제**

---

2011년 12월 28일 인쇄

2011년 12월 30일 발행

발행인 : 최 금 숙

발행처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25(불광동 1-363)

전화 / 02-3156-7000 (代)

인쇄처 : 도서출판 한 학 문 화

전화 / 02-313-7593 (代)

---

ISBN 978-89-8491-458-2 94330

978-89-8491-451-3 94330 (세트)

<정가 10,500원>